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일시 : 2008. 7. 15

장소 : 바비엡 1층 회의실(서대문경찰서 맞은편)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일본역사교과서가 양국의 현안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오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때에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가 다음 세대의 국민들에게 일생동안 새겨질 역사지식을 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책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평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토문제의 심각한 왜곡 기술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재단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본역사교과서의 내용 중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계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유익한 학술회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 일본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일시 : 2008. 7. 15(화) 09:30~18:10

장소 : 바비엡Ⅱ, 1층 회의실

09:30-09:50 등록

사회 :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09:50-10:00 개회사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00-10-25 기조강연 정재정(서울시립대)

일본역사교과서와 한일관계

10:25-12:25 제1부 사회 :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10:25-11:05 1. 이재석(동북아역사재단)

고교일본사 고대사서술과 문제점

토론 : 김선민(숙명여대)

11:05-11:45 2. 허동현(경희대)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토론 : 박진우(숙명여대)

11:45-12:25 3.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교과서의 독도기술 실태와 그 영향

토론 : 호사카 유지(세종대)

12:25-13:15 중식

- 13:15-16:45 제2부 사회 :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 13:15-13:55 4. 김보림(총신대)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편찬
토론 : 구난희(교육부)
- 13:55-14:35 5. 신주백(국민대)
일본 역사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서술의 변화
토론 : 김종식(아주대)
- 14:35-14:45 휴식
- 15:45-15:25 6. 김은숙(한국교원대)
일본 세계사교과서의 전근대 한일관계 분석
토론 : 현명철(경기고)
- 15:25-16:05 7.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변화
토론 : 윤명숙(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16:05-16:15 휴식
- 16:15-18:00 제3부 종합토론 사회 : 이찬희(한국교육개발원)
토론자 전원
- 18:30~20:00 만찬

목 차

1. 일본역사교과서와 한일관계 정재정 1
2. 고교일본사 고대사서술과 문제점 이재석 23
3.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 허동현 59
4. 일본교과서의 독도기술 실태와 그 영향 홍성근 75
5.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편찬 김보림 103
6.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서술의 변화
..... 신주백 121
7. 일본 세계사교과서의 전근대 한일관계 분석 .. 김은숙 143
8. 일본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변화 .. 남상구 185

일본역사교과서와 한일관계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1. 머리말

한국과 일본은 최근 역사인식과 독도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외교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盧武鉉 정부와 고이즈미(小泉) 정부의 갈등과 대립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심각하여 두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레벨의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민간레벨의 경제·문화 교류는 아주 활발하여 다행이지만, 정부레벨의 대결과 불신이 오래 갈 경우에는 민간레벨의 협력과 理解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國益과 民利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외교마찰에서 벗어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사이의 현안이 되어버린 역사갈등의 여러 요인, 즉 역사인식(근대 한일관계사 이해, 역사교과서 기술,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등), 과거사처리(사할린 거주 한인, 원폭 피해자, 징용·징병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골 봉환, 문화재 반환,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등), 영토분쟁(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양국의 역사갈등은 이미 학문과 교육의 차원을 넘어 정치와 외교의 영역으로 비화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극복의 계기와 방법도 정치와 외교의 레벨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의 역사갈등을 화제로 삼을 때는 역사인식, 과거사처리, 영토분쟁 등을 모두 언급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국에게는 三者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글에서 범위를 좁혀 역사인식, 그 중에서도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한일의 역사갈등을 지켜보면서 그것의 극복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발표해왔다.¹⁾ 이 글은 나의 그러한 활동에

1) 나는 한일의 역사갈등에 대한 논의가 아주 경직된 저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간 만용을 부려 현실적 극복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재정, <역사학자가 보는 한일의 역사갈등과 극복 방향-과거사 및 영토 문제> 《독도, 야스쿠니,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 현대일본학회, 2006. 6. 30; <한일의 역사갈등과 극복 방향> 《21세기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동북아역사재단, 2006. 11. 29; <韓日의 歷史葛藤과 歷史對話-和解와 相生의 歷史認識을 향하여> 《史學研究》 제88호, 韓國史學會, 2007.12. 이 논문은 이 중에서 역사인식, 역사대화, 역사교과서에 관련된

2.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기초한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는 주로 역사인식의 주체를 한일 양국 정부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또 역사갈등의 극복방향을 云謂할 때는 원론적인 巨大談論은 피하고 현실적으로 채용 가능한 수준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겠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국내외의 碩學을 초빙하여 高踏的 수준에서 역사화해를 논의하는 행사가 빈번히 열리고 있다.²⁾ 이 글은 그런 高談峻論과 중복을 피한다는 뜻에서 실질적·기능적 역사화해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겠다. 돌파구가 딱 막혀있을 때는 먼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왜 지금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새삼스럽게 대립하고 있는가를 개관하겠다. 그 다음에는 역사교과서 분쟁의 경위와 그것의 극복을 위해 행해진 역사대화의 흐름을 개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이 역사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 글이 한일의 역사갈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그만 실마리라도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 역사인식과 역사갈등

1) 역사인식의 접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199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근대의 한일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제국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서 지배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변화의 一端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양국 정부가 최근 10여 년 동안 이에 대해 주고 받은 견해를 살펴보자.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총리대신은 1995년 8월 15일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을 맞아서’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이 근린제국과 벌인 전쟁과 그 폐해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을 잘못하고 전쟁에의 길을 걸어 국민

부분을 적출하여 약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에서의 진실과 화해> 《2006년 국제포럼, 문명과 평화》 2006. 11. 6-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과거청산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6. 11.1 6,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역사대화의 경험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 2006. 11. 25 등.

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습니다. 나는 미래에 잘못을 없애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기에서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가져온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³⁾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관계사를 직접 지목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근린 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종래 일본정부가 취해온 애매한 태도보다는 한 발 더 나간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에서의 사회당 집권과 역사인식의 柔軟化, 한국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現實化 등이 깔려 있었다. ‘終戰 50년’이라는 節目을 맞아 戰後決算의 일환으로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그 후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에 큰 획을 그은 것은 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이 1998년 10월 8일 공동으로 선언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었다. 여기에서 오부치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一時期 한국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말했다. 김대중은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⁴⁾

오부치의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주체로서 일본을 명시하고,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대상으로서 한국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었다. 김대중이 그의 발언을 진지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이 공동선언은 그 후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규정하는 틀이 되었다. 그리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노무현 정부와 심각한 역사갈등을 빚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이나, 그보다도 더 우파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베 신조 총리대신조차도 공식적으로는 이 선

3) 日本外務省文書. 일본정부의 견해를 정확히 인용하기 위해서 일본외무성 관계자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日本外務省文書라고 표시하겠다.

4) 한일 양국의 정상이 역사인식을 공식적인 외교문서에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 強度와 意味에 대한 평가는 論者에 따라 분분하지만, 양국이 역사인식에서 상당히 접근한 형태를 보여준 된 것만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 결과(공동선언, 연설문 등 주요기록) 1998. 10. 7-10》, 1998. 10. 7-10을 참조할 것. 또 이것의 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해외문화홍보원, 《김대중 대통령 일본 국민 방문 외신기사집(1998. 10. 7-10)》, 1998. 10을 참조할 것.

4 ·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

이상을 보건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체결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역사인식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정부의 대신이나 집권당의 간부가 이에 反하는 견해를 자주 표명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은 일본정부조차도 식민지 지배의 원천인 ‘한국병합조약’(1910. 8. 22)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有效하게 체결되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⁶⁾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역사인식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신뢰를 손상시키는 언동이 일본정부의 안팎에서 빈번히 일어나는데다가, 源泉적으로 대한제국의 폐멸과정에서 맺어진 각 조약의 不法性和 不當性を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2) 역사갈등의 재발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크게 변하였다. 5년여 사이에 남북한의 정상회담, 월드컵 축구경기의 공동개최, 북한과 일본의 평양선언과 국교교섭 재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부상과 핵무기 실험, 이라크전쟁과 한일의 파병, 한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일본의 有事關聯法案 採決, 한국·일본·미국의 잇단 수뇌회담 등이 줄지어 일어났다. 이 사건들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와 역사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은 기본적으로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정상회담에서 작성하여 발표한 ‘한일파트너십선언’의 역사인식을 견지한다는 자세를 지켜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1년 초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빚어 정상외교를 중단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2001년 초부터의 역사갈등은 일본의 우파 문화인들이 편찬한 중학교용 ‘새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비롯되었고, 2004년 말부터의 역사갈등은 교과서 분쟁 이외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이것을 더욱 부추겼다. 종래 양국 정상은 1년에 두 번씩 소위 셔틀회담을 개최해왔는데, 노무현 정부와 고이즈미 정부는 2005년 7월을 끝으로 2006년 9월까지 그것을 중단했다. 고이즈미 수상이 6차에 걸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시마네현이 독도조례를 제정한(2005년

5) 日本外務省文書.

6) 日本外務省文書.

2월) 것 등이 한국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삼일절기념사(2005년 3월)와 특별담화(2006년 4월) 등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⁷⁾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일본의 역사인식 등 과거사 문제를 외교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이를 계기로 對日政策에서 역사인식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180도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인식이 여전히 한일관계의 급격한 反轉에 주요 변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노 대통령의 이런 자세 변화에 당혹하면서 짐짓 그 진의를 잘 알지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顛倒된 역사인식에서 起因한 문제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수궁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일본정부의 일각에서는 한국정부의 對日 공세를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인기를 만회하려는 국내용 전술로 보거나, 한국정부가 설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일본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고, 기껏해야 ‘한일파트너십선언’에서 표명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머물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⁸⁾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으로까지 비화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논쟁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가 전후 40년을 기념하여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지만 나카소네는 한국 등 근린제국이 이에 반발하자 이듬해부터 참배를 취소했다.⁹⁾ 고이즈미는 총리 재임 중에 모두 6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는데, 막판에 갈수록 그것이 한일간의 역사갈등을 부추기는 상징적 행동으로서 부각되었다. 고이즈미의 ‘참배의 辯’은 매번 조금씩 뉘앙스가 달랐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전쟁에서 일본이 저지른 “悔恨의 역사를 虛心하게 받아들이

7)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홍보비서실,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2006. 4. 25 등의 보도 자료를 참조할 것.

8) 이에 대해서는 讀賣新聞과 朝日新聞 등의 2006년 4월 26일자 기사 등을 참조할 것.

9) 고토다 내각관방장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회피에 관한 담화(1986. 8. 14), ‘본년(1986) 8월 15일 나카소네 내각총리대신과 기타 국무대신에 의한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에 대하여’에 의하면, 나카소네 총리대신의 참배 목적은, “야스쿠니신사가 합사하고 있는 개개의 祭神과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조국과 동포 등을 위해 희생한 전몰자 일반을 추도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 전쟁 희생자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반성과 더불어 삼가 애도의 뜻을 바치고 싶다”는 것이었다.¹⁰⁾ 그는 야스쿠니신사의 영령 앞에서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戰陣에서 산화한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회고하고,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평화를 맹서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충분히 설명하면 일본국민과 근린제국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지만 그의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문제를 외교현안으로 삼지 않겠다고던 노무현 정부로부터도 비난의 성명이 쏟아졌다. 2004년 1월 1일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대변인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전쟁범죄자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또다시 참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본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전쟁범죄자들을 계속 참배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국민의 감정이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된데 대해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근린제국과 우호관계를 진정으로 발전시켜나가자 한다면,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바탕 위에서 인근국가들의 입장과 국민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야스쿠니신사를 더 이상 참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¹¹⁾ 한국 정부는 고이즈미의 ‘참배의 辯견’을 이해하기는커녕,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후퇴, 즉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지배의 의미를 호도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연원이나 성격을 일견하면 한국을 비롯한 근린제국의 우려가 단순한 杞憂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패전하기 전에는 국가신도와 결합하여,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만드는

10) 日本外務省文書.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의 담화(2001. 8. 13). “이 대전에서 일본은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커다란 참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아시아근린제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한 시기 잘못된 국책 아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행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참해와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흔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두 번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곤란한 시대에 조국의 미래를 믿고 戰陣에서 산화한 분들의 영령 앞에 금일의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그 고귀한 희생 위해 구축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해마다 평화에의 맹서를 새롭게 해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신념을 충분히 설명하면 우리 국민과 근린제국의 분들에게도 반드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총리 취임 후에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11) 한국외교통상부문서. 한국정부의 견해를 정확히 인용하기 위해서 한국외교통상부 관계자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았다. 이글에서는 그것을 한국외교통상부문서라고 표시하겠다.

임무, 즉 군국주의사상과 천황숭배의식을 보급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패전 후에 야스쿠니신사는 형식상 하나의 단위종교법인으로 바뀌었지만, 戰死者를 神道式으로 추모하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지목된 사람조차도 일본정부의 알선으로 여기에 參祀되었다. 그밖에도 야스쿠니신사에는 식민지민으로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희생당한 조선인 2만 명 이상이 參祀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내에는 근대 일본이 벌인 전쟁을 고무하고 미화하는 전시물로 가득 채워진 遊就館이 戰前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건재하다.¹²⁾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가 感情을 移入한 美辭麗句를 동원하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아무리 변호하더라도, 일본정부가 패전 이전의 역사인식으로 回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拂拭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역사갈등의 배경

한일 양국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결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정치적·외교적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양국이 역사갈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制御해 온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원래부터 제국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양국의 상이한 역사인식은 한일기본조약(1965년)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양국 정부는 그 후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 문제를 서로 될 수 있는 한 화제로 삼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회피하려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렇지만 1995년을 전후한 시기가 되자,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구조를 함께 志向하고 있다는 同類意識(그밖에도 평화·인권 등에 대한 가치관의 공유)이 형성됨에 따라 역사인식에서도 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한일 파트너십선언이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12) 야스쿠니신사의 경위에 대해서는 高橋哲哉, 《靖国問題》, 筑摩書房, 2005를 참조할 것. 야스쿠니신사는 명치유신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일컬어지는 250만여 명을 祭神으로 모시고 있다. 여기에는 강화도사건(1875년) 때 죽은 水夫, 대한제국의 의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군인, 한국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내몬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키를 비롯하여 도쿄재판에서 A급 戰犯으로 판결을 받은 14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전쟁에 끌려가 죽은 2만명 이상의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이 전몰자들의 영혼을 불러 전투행위가 훌륭했다고 치하하고 호국의 신으로 승격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야스쿠니신사는 예사로운 곳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전쟁을 긍정하고 선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트너십 선언’ 이후에도 일본에서 정치가나 각료가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문부과학성이 <새 역사교과서>의 발행을 용인하며,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계속 참배하고, 정부가 나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재차 의심하고, 그것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후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인식을 외교현안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켜 역사갈등은 깊어지게 되었다.

되돌아보건대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에 주요 轉機가 될 만한 해였다. 일본의 明成皇后 시해 110주년, 대한제국과 제국일본의 ‘을사조약’ 체결 100주년, 한국의 해방 60주년,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60주년,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체결 40주년 등이 겹치는 역사의 마디였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의 역사에 대해 민감한 한국인은 이 뜻 깊은 해를 맞아 한일 양국 정부가 역사인식을 재점검하고 우호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체결 40주년만을 중시하여,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慶祝性的인 교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역사학계와 매스컴 등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한편, 고이즈미 정부는 戰後 60년을 계기로 일본이 역사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역사인식을 자주 표명하고, 역사문제를 한국과의 외교현안에서 분리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일본의 역사와 역량에 자부하고 긍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보통의 일본인들을 고무시켰다. 2005년을 맞은 일본의 역사학계와 매스컴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의미와 그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한국의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이 역사문제를 끄집어내 일본을 곤경에 몰아넣는다고 비판하고, 한국에 대한 反感(이른바 嫌韓論·厭韓論)을 선동하는 論調가 강하게 나타났다.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런 여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일본 爲主의 역사인식을 재구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갈등은 위와 같은 엇박자가 빚어낸 산물이었다. 특히 양국에서 새로 등장한 집권세력은 서로 지혜를 짜내 역사갈등을 조절하거나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국내에서 꿈틀대는 내셔널리즘에 영합하는 자세조차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간의 역사갈등은 단기간에 惡化一途를 걷게 된 것이다.

3. 역사교과서 분쟁과 역사대화

1) 역사교과서 분쟁의 경위

2001년과 2005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에 합격하여 일부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로서 사용하게 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는 한일 양국의 역사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 재료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이 교과서가 한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이 검정에 합격시킨 것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¹³⁾

먼저, 한국의 역사학계는 2001년도에 검정에 통과한 <새 역사교과서>가 한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① 일본은 고대 이래로 한반도에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② 역사적으로 보아 한국은 중국에 복속한 비자주적 국가였던 것에 비해, 일본은 중화질서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가이었다. ③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국내외 정세에 영민하게 대처했던 반면, 한국은 아둔하게 대응하여 근대화에 실패했다. ④ 지정학적으로 보아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강에 앞서 이것을 장악해야 한다. ⑤ 한일관계사 속에서 일본은 항상 옳았고 한국은 항상 글렀으므로,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 ⑥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애썼으나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여 善政을 베풀었다. ¹⁴⁾

2001년 4월 이래, <새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에 대한 비난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비등하자 일본정부는 관방장관과 문부과학대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뜻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정부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의 역사인식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헌법의 精神上, 그리고 일본의 檢定制度上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史觀에 관여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은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와 한일파트너십선언과 다를 바 없다.¹⁵⁾

13) 이 글에서 언급하는 역사교과서 문제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원순·정재정 편저,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2002. 2를 참조할 것.

14) 정재정,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韓國史觀의 특징-扶桑社 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집, 2001.8

15) 日本外務省文書. 후쿠다 관방장관의 코멘트(2001. 4. 3), “우리나라의 교과서검정제도는 민간의 저작·편집자의 창의 궁리를 살린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된다는 것의 기본이념에 선 것이고, 나라가 특정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을 확정한다고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검정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이 정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해명을 수궁하지 않고, 2001년 5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33개 항목의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새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2001년 7월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의 수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일본의 교과서검정제도와 헌법정신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곧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했다. 동위원회는 2002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수십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40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생산하고 그 활동을 마쳤다. 동 위원회는 한일관계사연구에서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측의 반대로 처음부터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발족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¹⁶⁾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새 역사교과서>가 재차 검정에 통과한 2005년에도 2001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번의 <새 역사교과서>가 한국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천황은 萬世一系로서 중국의 황제보다도 위대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화질서에서 벗어나 독립을 유지해왔다.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②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창성과 고유성을 잃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 문화에 매몰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③ 일본은 古代에 한국 남부의 任那(加羅)에 거점을 두었다. 또 한반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중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였다. ④ 서양의

해석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에 관한 기본인식은 전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내각총리대신 담화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기분을 표명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 후의 역대 내각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현 내각에서도 이 점은 아무런 변화는 없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의 담화(2001. 4. 3), “원래 교과서검정에서 집필자의 역사인식 등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에 저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검정은 국가가 특정의 역사인식과 역사사실 등을 확정한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검정은 어디까지나 신청한 교과서의 구체적 기술에 대해 검정기준에 따라 그 시점에서 객관적 학문적 성과와 적절한 자료 등에 비추어 결함을 지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고, 금회의 검정에 있어서도 이 생각에 기초하여 실시한 바이다.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은 ‘근린의 아시아제국과의 사이의 근현대의 歷史事象의 취급에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소위 ‘근린제국조항’을 포함한 검정기준의 모든 조항에 비추어 실시한 것이고, 이번에도 이 ‘근린제국조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한 위에서 실시한 바이다.”

16) 이 글에서 언급하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 제1권-제6권, 2005. 7을 참조할 것.

압박에 대응하여 일본은 단기간에 도쿠카와(徳川) 막부에서 메이지(明治) 정부로 정권을 교체했는데, 한국은 개혁에 지지부진하여 44년이나 조선왕조체제를 유지했다. 조선왕조는 科擧를 통해 전국의 인재를 중앙에 모아 국왕의 권력은 강한 반면, 지방의 대항세력은 약했다. 또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조선왕조는 구미열강의 무력에 의한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반면에 무가사회(武家社會)였던 일본은 열강의 군사적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과거가 없었던 일본은 각지의 많은 인재가 양성되어 막부를 무너트리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또 일본은 황실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국의 무사는 궁극적으로 천황을 받드는 입장이었다. 열강의 압력이 강해져 막부의 권위가 약해지자 황실을 일본통합의 중심으로 내세워 단기간에 정권을 이동할 수 있었다. 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것을 일본의 自存自衛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조선왕조가 무례하여 征韓論이 일어났고, 조선이 타국의 손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들기 위해 근대화를 돕고, 조선에서 청과 러시아의 세력을 몰아냈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인의 독립열망을 고조시켰다. ⑥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벌인 것은 중국인의 불법적인 반일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大東亞戰爭’도 ‘自存自衛’를 위해서 대항한 것이다. ⑦ ‘대동아전쟁’은 동남아시아인에게 독립의 꿈과 용기를 주었다. 일본은 그들에게 구원자로 비쳤고, 실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을 앞당겼다. 반면에 미국과 소련은 국제적인 협약과 선언을 위반했다. 미국의 도시 공습과 원폭투하, 소련의 일본인의 시베리아 억류, 東京裁判 등은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¹⁷⁾

2005년도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해 한국정부는 2001년과는 달리 특정 사안을 지목하여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레벨에서는 <새 역사교과서>를 규탄하고 그것의 채택을 반대하는 연대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10월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역사연구를 심화시키고, 역사교과서의 개선을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했다.¹⁸⁾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역사교과서분과를 설치하는 등 개선된 조직을 갖추었으나, 일본측 위원의 人選이 지연됨에 따라 2007년 6월이 되어야 겨우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제2기 위원회가 2년여의 활동 기간에 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지 어떨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양국의 역사학자와 역사교

17) 정재정, <일본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의 역사관>(未定稿), 2005.6.

18) 한국외교통상부문서.

육자가 妙案을 짜내지 못한다면 두 나라의 역사갈등은 일본의 교과서검정 때마다 週期的으로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역사대화의 추진

한일 양국의 역사갈등은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一舉에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령 정부레벨에서 어느 정도 일치된 역사인식을 표명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단시일 안에 민간레벨의 역사인식까지도 바꾸어놓을 수는 없다. 두 나라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는 역사인식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역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레벨의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양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갈등을 극복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의 역사대화를 지원해왔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한일역사가회의’가 그것들이다. 양국 정상의 합의 아래 2002년 5월에 발족하여 2005년 5월에 마감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에서 각각 12명의 위원(위원장 1명 씩)으로 구성되었는데, 1분과(각각 3명, 고대사, 3개 주제), 2분과(각각 3명, 중세사 및 근세사, 3개 주제), 3분과(각각 5명, 근대사 및 현대사, 13개 주제)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2개월에 1회씩의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회의만도 전체회의 6회, 분과회의 45회에 달했다. 동 위원회는 19개 주제에 대해 4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공표했다. 각 논문의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양적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끼리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사안에 따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왜 차이가 생기는가를 서로 이해하게 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¹⁹⁾

‘한일역사가회의’는 1997년부터 3년간 활동했던 ‘한일역사연구촉진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2001년에 설치되었다. 이 회의는 양국 역사연구자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교류협력을 넓히기 위한 모임을 1년에 1회씩 양국을 오가며 개최했다. 거기에서는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 동향, 세계사 속의 근대화와 현대화, 내셔널리즘의 과거와 현재 등이 주요 아젠다가 되었다. 논의의 결과는 최근 책자로 발

19)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와 이것을 생산하기까지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前掲 報告書와 金泰植, <한일 역사대화의 현황 및 과제> 《역사대화로 열여가는 동아시아 역사화해》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동북아 역사재단, 2007.10.9-10을 참조할 것.

간되어 양국 역사학계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²⁰⁾

한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역사공동연구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참가자가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해석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사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의 행간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국민의 역사인식에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역사인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만 하더라도, 한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단일의 自國史 교과서를 발행하고,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自國史 교과서를 엄격하게 검정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역사공동연구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 역사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2005년 6월에 양국 정상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再開를 합의한 것도 그밖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정이라면 제2기 위원회는 역사갈등을 극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분과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완고하게 양국의 주장만을 정면에서 내세우는 場으로 변질된다면 당초 목표로 내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회의 자체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조차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방안으로서 추천할만한 것은 민간레벨의 역사대화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비례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민간레벨의 공동 노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진척되고 있다. 양국의 역사연구자, 역사교육자, 학생이 여러 모임을 결성하여 연구와 수업 등을 함께 진행해온 것이다. 그 顛末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그 성과만을 摘示하겠다.²¹⁾

한일의 역사대화는 크게 보아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76년부터 2000년까지로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역사인식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 그 성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근대 한일관계사를 둘러

20) 한·일역사가회의조직위원회,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에서의 역사연구 동향》, 국학자료원, 2002. 9.

21)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한일 양국의 역사대화의 동향에 대해서는 정재정, <역사교과서를 위한 한국·일본 협의활동과 몇 가지 과제>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도서출판 오름, 1998과 鄭在貞, <韓日의 歷史對話-和解와 相生을 위한 오딧세이> 《日本學研究》 제19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6. 10을 참조할 것.

싼 양국간의 인식의 편차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한편, 이를 접근시키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② 양국의 역사 교과서 제도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③ ‘가해’와 ‘피해’에 대한 역사를 서로 분명히 아는 것이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에 꼭 필요한 과제임을 일반인들에게 어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양국의 역사연구자·역사교육자 사이의 이해가 깊어져 공동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인맥이 구축되었다. ⑤ 국민 또는 민족에 따라 다른 역사해석을 도마에 올려놓고 토론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심화시켰다. ⑥ 협의활동이 매스컴이나 서적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역사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⑦ 한국의 근대사에 관련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이 많이 개선되었다. ⑧ 공동연구 내지는 협의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제2단계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로서, 한국과 일본이 和解와 상생을 위해 역사대화를 나눴다. 이 시기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한국의 역사교육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종래에는 일본의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가 화제의 중심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② 일본의 ‘역사왜곡’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었다. 국제연대의 모색이 그것이다. ③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역사인식을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④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삼국이 유럽·미국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역사인식·역사교과서 문제의 처리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 문제의 성격을 세계적 시야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제이해와 평화공영을 지향하는 외국의 유력 재단이 이런 시도를 선도한 것은 뜻 깊은 일이었다. ⑥ 한국과 일본이 함께 역사교재를 개발하거나 서로 수업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작업이 활발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敷衍하겠다.

3) 역사공통교재의 편찬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양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역사교재를 합동으로 출판한 사례는 4종류가 있다.²²⁾

22)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일공용의 역사교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원순·정재정·서의식,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공동의 역사인식을 향하여》, 솔출판사, 2004. 5 ; 전국교원노동조합 대구지부,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의 조선통신사로》, 한길사, 2005 ; 동아시아역사인식과평화포럼, 《미

①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와 역사교육연구회(일본)의 협동 작업이다. 서울시립대학교와 東京學藝大學의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이 모임(각각 20여 명)은 1997년부터 매년 2번씩 역사연구와 역사교과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2000년까지는 양측이 고등학교 自國史 교과서의 한일관계사(先史-現代) 내용을 철저히 검토했다. 검토의 기준은 양국의 역사연구 성과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가 여부였다.²³⁾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는 한일공용의 역사교재 집필과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²⁴⁾ 체제는 章-節-小項目으로 구성했다. 章마다 ‘이 시기의 한국(일본)’을 설정하여, 일본(한국)의 학생에게 알리고 싶은 한국사(일본사)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다(B5 용지 2매). 절은 6-8개의 소항목을 설정하여 기술하되, 그림이나 자료 등을 포함하여 B5 용지 6매 정도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각 절의 집필의도를 명확히 밝히는 해설을 신고 일반인과 학생이 볼 수 있는 참고문헌을 각각 3-5개씩 열거했다.(B5 용지 2매 이내). 내용의 수준은 고등학교 1-2학년에 맞췄다. 1절은 원칙적으로 1인이 집필하되, 한국인과 일본인이 同數가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7년 3월 1일에 이들이 양국에서 동시 출판한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는 어느 한 시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시대를 망라한 통사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공통 교재보다도 사용하기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양국이 완전히 합의한 내용을 기술한 것도 전에 없는 특징이다.

② 전국교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히로시마교직원조합이 한일공통역사교재제작팀을 만들어 간행한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의 조선통신사로』를 둘러싼 활동이다.²⁵⁾ 이 책은 2005년 4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판되었다. 이들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7차의 ‘한일 역사부교재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우호친선의 조선통신사’를 취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깊은 역사 관계를 배우고 평화와 우호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 자세를 배양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는 밝히고 있다.

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 《마주보는 한일사》, 세계절, 2006 ;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와 역사교육연구회(일본),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 도서출판 혜안, 2007.3.

23) 역사교과서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 역사교육연구회(일본)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도서출판 혜안, 2000.12.

24) 역사공통교재의 초고는 歴史教育研究会、《日本と韓国の歴史共通教材をつくる視点》 梨の木社、2003.11.을 참조할 것. 이 초고는 합작활동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필자도 많이 바뀌었다.

25)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의 조선통신사로》 도서출판 한길사, 2005.

③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한국)과 일한역사교육교류회(일본)의 협동 작업이다. 이들은 2002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역사공동교재의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에 《마주보는 한일사》라는 이름의 공동교재가 양국에서 출간되었다. 이 역사교재는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가 교재연구를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핸드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책의 내용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일관계사를 주축으로 하되, 한국사와 일본사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테마를 비롯하여 한국 속의 일본문화와 일본 속의 한국문화 등도 다루었다. 전근대사에 관련된 18개 주제가 제시되었다. 서술의 형태는 교과서적 記述을 지향하되, 1주제 당 B5 용지 8쪽(자료, 그림 포함) 정도이다. 서술의 방향은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示唆를 줄 수 있도록 했다.

④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의 합작 활동이다. 이들은 한중일공동역사부교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002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2005년 5월 26일 한국·일본·중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사부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를 간행했다. 교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침략과 저항, 협력과 갈등, 전쟁과 평화의 측면이다. 독자는 중학생 정도로 설정했으나, 부교재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도록 구성했다.²⁶⁾

그 동안 한국·일본·중국은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데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국이 平和共榮을 향하여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가려고 씬름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끝으로 하나 추가할 것은 韓日主教交流會가 역사학자에게 부탁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을 수 있는 한국사 개설서를 출간한 일이다. 한일 공용을 목표로 하여 처음 만들어진 이 책은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에 자극을 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 책을 통해 한국사와 한일관계사의 개략적 흐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미래로 열린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평화와 사랑을 함께

26)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2003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활동보고서》 및 <한중일공동역사부교재 작성 방법> 등 참조. 집필자들은 이 책의 목적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인도주의에 기반하는 열린 세계시민의 확산을 위해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확대, ②일본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동아시아 3국의 연대 행동이 직접 사를 공동으로 서술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발전, ③동아시아 3국의 연구자와 교사들이 연대하여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서술의 주체가 일국 단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시민’의 차원으로 서술의 주체의 확대.

나누는 가까운 이웃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⁷⁾

한때 적대적이었던 국가 사이에서 공동의 작업을 통해 공용의 역사교재를 편찬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노력,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벌써 네댓 종류의 공용교재가 출간되어 읽히고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이 두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용교재의 공동제작이 양국민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역사인식의 틈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4. 맺음말

지구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인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다. 국가는 개인과 달라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移徙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왕에 그럴 바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共存共榮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 글에서 내가 역사갈등과 역사대화를 논한 것은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인식만을 문제 삼아 개선하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양국은 종래의 고정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하고 세련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은 서로 共鳴하는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인식이 개선되면 한국의 일본인식도 개선되게 마련이다. 두 나라가 취해야 할 자세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가름하고자 한다.

① 양국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 또는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더욱 적극적으로 역사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해야 한다. 아직도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현안으로 대두하여 정부레벨에서 처리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은 서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원칙을 말한다면,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는 정치·외교의 懸案에서 해방되어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민간인에게 還元되어야 한다. 당장은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이 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하고 그 결과를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자나 역사교육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27) 이원순·정재정·서의식,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 - 공동의 역사인식을 향하여》 솔출판사, 2004.5.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② 한일 양국은 역사갈등이 언제든지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또 정치·외교에 이용당하기 쉬운 特殊事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레벨의 역사대화는 이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인식은 국가·민족·개인 사이에 相異不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일관계사를 客觀化·相對化해서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무릇 역사를 완전히 객관적·상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일관계사를 지나치게 自國中心의 시야에서 바라보려는 자세에서는 의식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우여곡절로 點綴된 複雜多端한 한일관계사를 彈力的이고 柔軟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사를 絶對化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兩者間 혹은 多者間의 관계 속에서 되돌아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③ 한일 양국의 평화·교류의 역사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1천 5백 년 이상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때때로 침략과 저항 등의 對蹠的 관계로 뒤틀린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평화·교류의 長久한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가기 위해서는 평화·교류의 역사에 좀 더 많은 시선을 주어야 한다. 그럴 경우, 전근대에서의 평화·교류도 중요하지만, 현대에서의 평화·교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특히 민중 레벨의 連帶運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日本軍慰安婦·在日韓國人·歷史認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벌여온 연대운동, 그리고 학교·단체·지방자치기구 사이의 姉妹活動 등은 양국의 여론과 정부를 움직여 상황을 개선하거나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부각시킨다면 차세대가 민중레벨의 연대를 통해 한일관계를 우호협력의 방향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④ 한일관계를 논의할 경우에는 北韓까지도 시야에 넣어서 相互關聯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남한과 일본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捨象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을 무시하고는 한반도의 현대사, 나아가서는 한일관계의 실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韓民族 전체로서의 歷史像을 구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대의 한일관계에서는 한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빚어내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⑤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을 韓日關係史的 시야에서만 인식하려는 태도를 止揚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은 한국만을, 혹은 한국은 일본만을 상대해온 나라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매우 풍부하게 국제활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와 문화는 한일관계사적 시각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다. 좀 과장하면 두 나라 역사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관련된 사안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역사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극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鄭在貞, 《日本の 論理 - 轉換期の 歴史教育과 韓國認識》, 현음사, 1998. 3.
 鄭在貞, 《韓國의 論理 - 轉換期の 歴史教育과 日本認識》, 현음사, 1998. 6.
 외교통상부,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공동선언, 연설문 등 주요기록) 1998. 10. 7-10》, 1998. 10. 7-10
 해외문화홍보원, 《김대중 대통령 일본 국빈 방문 외신기사집(1998. 10. 7-10)》, 1998. 10.
 鄭在貞, 《韓國と日本-歴史教育の思想》, すずさわ書店, 1998. 12.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 역사교육연구회(일본)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도
 서출판 해안, 2000.12.
 鄭在貞, <韓国人の日本認識-その歴史的進展と課題> 《東北アジア研究》 第5号, 東北
 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1.
 이원순·정재정 편저,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2002. 2.
 한·일역사가회의조직위원회,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에서의 역사연구 동향》, 국학
 자료원, 2002. 9.
 국정홍보처, 《노무현 대통령 방일외교, 2003. 6. 6~9》, 2003. 6.
 이원순 ·정재정·서의식,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공동의 역사인식
 을 향하여》, 솔출판사, 2004. 5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2003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활동보고서》2004.
 鄭在貞, <広がる対話, 深まる議論> 《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対話》, 大月書店, 2004. 1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6권, 2005. 7.
 전국교원노동조합 대구지부, 《한일공통역사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
 선침략에서 우호의 조선통신사로》, 한길사, 2005
 동아시아역사인식과평화포럼,《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신문사, 2005

정재정, <한일 역사대화의 구도 : 역사교과서와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도서출판 한울, 2006. 3.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 《마주보는 한일사》, 사계절, 2006

鄭在貞, <韓日의 歷史對話-和解와 相生을 위한 오딧세이> 《日本學研究》제19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6. 10.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와 역사교육연구회(일본), 《한일역사공동교재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도서출판 혜안, 2007.3.

鄭在貞, <韓日의 歷史葛藤과 歷史對話-和解와 相生의 歷史認識을 향하여> 《史學研究》제88호, 韓國史學會, 2007.12.

한국외교통상부문서.

日本外務省文書.

讀賣新聞.

朝日新聞.

고교일본사 고대사서술과 문제점

이 재 석(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주지하는 것처럼 현행 일본의 고교 일본사 교과서는 일본사A와 일본사B 두 종류이다. 전자는 주로 근현대사에 서술의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고 후자는 대학 입시를 전제로 전시대를 기술한 통사류의 개설서이다. 여기서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본사B이며 그 중에서도 필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원시·고대사 관련 서술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교과서의 한반도 관련 서술을 통하여 이 교과서대로 배운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반도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 하는 문제를 인식의 바탕에 두고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사 전체 속에서 한반도 관련 전체적 서술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한 위에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고대사의 기술에 한정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통하여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고대 韓諸國이 어떠한 이미지로 투영 혹은 재창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로 2007년도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B 교과서는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6종이다.

<표-1> 2007년도 검정본 일본사B 교과서의 종류

번호	교과서 구분	저 자	출 판 사
1	日本史B(新訂版)	脇田修·大山喬平 외	實教出版
2	高校日本史(日本史B, 改訂版)	石井進 외	山川出版社
3	新日本史(日本史B, 改訂版)	大津透 외	山川出版社
4	日本史B(改訂版)	青木美智男 외	三省堂
5	高校日本史B(新訂版)	宮原武夫·石山久男 외	實教出版
6	高等學校 日本史B(改訂版)	伊藤純郎 외	清水書院

2. 고대사의 目次 체계와 특징

먼저 각 교과서의 목차 부분에 나타나 있는 고대사의 서술 체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 해 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2>에서 보이는 각 목차는 비단 2007년도 검정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목차를 보면 일본 고대사의 기본 뼈대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의 기본 방향 및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할 때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차에 대한 검토도 간과할 수 없다.

<표-2> 각 교과서의 고대사 관련 목차

日本史(實教)		高校日本史(山川)		新日本史(山川)	
제1장 일본문화의 여명	1.日本最古의 문화	제1장 고대사회 의 형성	1.일본문화의 시작	제1장 일본문화 의 여명	1.문화의 시작
	2.효문시대의 사회와 문화		2.농경의 개시		2.농경사회의 형성
제2장 水稻農業의 개시와 사회생활의 진전	1.야요이시대의 사회와 문화	제1장 고대사회 의 형성	3.야마토 정권과 고분	제2장 고대국가 의 형성	3.고분과 야마토 정권
	2.소국의 분립과 야마타이국		1.율령국가의 성립		1.야마토 정권의 지배기구
	3.야마토정권의 성립발전과 동아시아	제2장 율령국가 의 형성	2.율령국가의 번영	2.추고조와 아스카 문화	
	4.고분의 성립과 발전		3.율령국가의 변질	3.율령국가로의 길	
	5.대륙문화의 섭취		1.천평시대	4.율령국가의 구조	
제3장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과 율령제도의 성립	1.추고조의 정치와 아스카문화	제3장 귀족정치 의 전개	1.섭관정치	제4장 궁정귀족 사회의 성립	2.천평문화
	2.율령국가성립기의 정치와 문화		2.국풍문화		3.율령국가의 전환
	3.율령체제와 그 실태		3.장원의 발달과 무사의 대두		1.섭관정치
	4.天平文化	제4장 섭관정치와 장원공령제 의 전개	2.국풍문화	2.국사의 지배와 사회의 변화	
	5.헤이안초기의 정치와 문화		3.장원의 발달과 무사의 대두	3.국풍문화	
제4장 섭관정치와 장원공령제 의 전개	1.섭관정치와 지방의 동향	제4장 섭관정치와 장원공령제 의 전개	3.장원의 발달과 무사의 대두	제4장 궁정귀족 사회의 성립	4.원정의 성립
	2.국풍문화		5.중세사회로의 태동		
	3.장원공령제의 형성과 무사단				

日本史B(三省堂)		高校日本史B(實教)		高等學校日本史B(清水書院)	
제1장 열도의 형성과 원시사회	1.구석기시대의 사회	제1장 문화와 국가의 형성	1.일본의 구석기문화	제1장 일본 문화의 어명	1.일본에 구석기시대는 있었는가
	2.요몬시대의 사회		2.요몬시대의 사회와 문화		2.왜 요몬시대라고 하는가
제2장 원시에서 고대로	1.야요이시대의 사회		3.야요이시대의 사회와 문화		3.요몬인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2.고분문화와 야마토 왕권		4.소국의 분립과 야마타이국		4.야요이시대는 언제 시작하였는가
제3장 고대 국가의 확립	1.추고조의 정치와 아스카 문화	제2장 고대 국가의 형성	5.야마토정권의 성립		제2장 고대 국가의 형성
	2.대화개신과 임신의 난		6.왜의 오왕과 야마토정권의 세력 신장	1.야마토정권은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는가	
	3.율령국가와 백봉문화		7.씨성제도와 군집분의 출현	2.왜왕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외교를 하였는가	
제4장 고대 국가와 천평문화	1.평성경과 율령체제	제3장 고대 국가의 성립과 도성	1.아스카시대의 정치와 문화	제3장 고대 국가의 성립과 도성	
	2.율령지배와 거듭되는 정쟁		2.고대국가의 형성		4.아스카문화를 탄생시킨 것은 누구인가
제5장 귀족 정치와 천평문화	3.天平文化		3.율령의 성립과 白鳳文化		3.나라시대의 정치와 문화
	1. 평안경과 율령체제의 동요	4.평성경과 율령정치	4.나라시대의 정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율령체제하에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당풍문화	5.나라시대의 사회와 정치	4.天平文化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3.나라시대의 정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3. 율령체제의 변질과 섭관 정치	6.국가불교와 天平文化	1.환무천황의 율령정치 재건이란?	4.天平文化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6장 고대에서 중세로	4.국풍문화	7.헤이안초기의 정치와 문화	제4장 고대 국가의 추이와 사회의 변화	제4장 고대 국가의 추이와 사회의 변화	2.헤이안 초기의 밀교적 문화란?
	1.장원공령제의 전개	8.섭관정치의 확립			3.후지와라씨는 어떻게 발전하여 갔는가
	2.원정과 평씨정권	9.국풍문화의 성립			4.문화의 국풍화, 정토사상이란 무엇인가?
	3.원정기의 문화				

위의 목차 내용을 서로 비교·개관해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각 장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소위 ‘국가’와 ‘일본문화’의 성립과 전개를 기축으로 하여 일본 고대사가 설명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목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요소는 국가의 성립이며 또 하나의 축은 문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

본문화의 여명> → <고대국가의 형성> → <고대국가의 전개> → <궁정귀족사회의 성립>의 순서로 고대사를 설명하는 新日本史(山川)의 체제는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1-2장으로 고대사를 구성한 高校日本史B(實教)의 경우는 <문화와 국가의 형성> → <고대국가의 확립>에서 알 수 있듯이 아예 장의 제목 자체가 국가와 문화 두 단어를 빼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 물론 모든 교과서의 목차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경향으로서 ‘국가’와 ‘일본문화’ 각각의 성립과 전개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점을 확인해 두고 싶다.

그렇다면 ‘국가’와 ‘일본문화’는 고대사 영역만의 독자적인 타이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문화’는 기술 내용상에서 뿐만 아니라 목차 상에서도 전근대의 전 시대에 걸쳐 골고루 소개되고 있다¹⁾. 다만 ‘문화’와는 달리 ‘국가’는 특정의 시대에만 집중적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중세와 근세의 목차에서는 ‘국가’가 한 번도 장의 제목 속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고대)국가’의 강

1) 참고로 각 교과서에 나타난 중·근세의 각장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日本史B(實教)		高校日本史B(實教)		新日本史(山川)
중세	제5장 무가사회의 성립과 문화의 신기운	중세	제4장 무가사회의 형성	5. 무가정권의 성립
	제6장 무가사회의 전개와 무로마치 문화		제5장 무가사회의 성장	6. 중세사회의 전개
근세	제7장 막번체제의 전개와 근세문화의 성립	근세	제6장 幕藩體制의 성립	7. 막번체제의 확립
			제7장 幕藩體制의 전개	8. 막번체제의 전개
	제8장 幕藩體制의 동요와 문화의 성숙		제8장 幕藩體制의 동요	9. 막번체제의 동요

日本史B(三省堂)		高校日本史B(實教)	高學校日本史(清水書院)	
제7장. 무가사회와 가마쿠라 문화	중세	제3장. 중세사회의 성립	중세	제1장. 중세성립기의 사회와 문화
제8장. 무로마치 막부와 동아시아				제2장. 무가정권의 성립과 가마쿠라 문화
제9장. 하극상의 사회와 무로마치 문화		제4장. 중세사회의 전개		제3장. 무로마치 문화와 北山文化
제10장. 중세에서 근세로	근세	제5장. 통일정권의 성립	근세	제4장. 하극상의 사회와 서민의 대두
제11장. 막번체제의 성립과 쇄국				제1장. 織豊政權과 桃山文化
제12장. 막번체제와 上方文化		제6장. 막번체제의 전개		제2장. 막번체제의 성립과 쇄국
제13장. 막번체제의 전환				제3장. 막번체제의 전개와 元祿文化
제14장. 근세에서 근대로			제4장. 막번체제의 동요와 化政文化	

조는 고대사 목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章의 제목으로 재등장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가서의 일이며 대부분의 교과서에 ‘근대국가(의 성립 혹은 형성)’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²⁾.

이렇게 놓고 보면 일본사의 서술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문제시되는 시기는 고대와 근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양 시기 모두 국가체제의 형성이 근본적인 문제 관심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율령을 근간으로 하여 일본열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체제를 성립시킨 것이 고대국가였다면, 서양으로부터 근대문명을 수입하여 근대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 바로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대였던 것이다³⁾.

그런 점에서 고대는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성립이 주요 설명의 지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국가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성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시스템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변질과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고대사의 주요 서술부임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표-2>의 각 節의 목차는 교과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율령’이다.

전체적으로 각 교과서를 관통하고 있는 고대사의 설명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일본고대사는 율령국가(체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대사의 흐름이란 율령국가의 성립(7세기 중후반-8세기)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은 성립 과정에 해당하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변질 내지 붕괴(헤이안 시대) 과정으로 각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율령국가는 구체적으로 6세기 말 7세기 초 推古(스이코)朝에 나타난 이른바 聖德(쇼토쿠)太子的 新政 단계- 7세기 중반의 대화개신 단계- 7세기 후반 율령국가의 등장이란 諸단계를 거치며 형성되어 갔다는 것이다⁴⁾.

-
- 2) 日本史B(實教)는 제10장이 <근대국가의 형성>이며 高校日本史B(實教)는 제9장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新日本史(山川)은 10장 <근대국가의 성립>과 11장 <입헌국가의 성립과 일청일로전쟁>으로, 日本史B(三省堂)은 15장 <명치유신과 근대국가>로, 高校日本史B(實教)는 7장 <대일본제국의 탄생>과 8장 <대일본제국의 전개>로, 高等學校日本史(清水書院)은 제4편 근대·현대의 제2장이 <입헌국가의 성립과 국제관계>로 편성되어 있다. 高校日本史B(實教)의 경우는 직접 ‘국가’를 명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대일본제국’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사실상 ‘국가’를 강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3) 중세와 근세에 대한 목차상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중세는 ‘(무가)사회’와 ‘문화’가, 근세는 ‘막번체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전계 주 1)의 표 참조) 이러한 용어들이 중·근세의 핵심 키워드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4) 이러한 관점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 坂本太郎(『大化改新の研究』, 『坂本太郎著作集』12, 吉川弘文館, 1989, 초출은 至文堂, 1938)이며 이후 이러한 관점은 大化改新에 대한 평가 여부를 떠나 일본고대사 연구의 기본 방향성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율령을 중심으로 일본고대사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소감과는 별개로, 일본의 고대국가는 곧 율령국가의 형태로 성립하였으며 따라서 고대국가의 성립이란 곧 율령국가의 성립으로 등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전개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곧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열도의 고대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가 고대사 체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일본사’가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이른바 ‘國家史’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는 영역이란 점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 자체가 가지는 중요도와 역사를 보는 시점을 ‘국가’에 두는 것은 원래 별개의 문제이다. 고대에서 유난히 ‘(고대)국가’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열도의 국가 형성은 한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서술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곳도 바로 이 국가형성기의 한-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를 일본 자체로 완결되는 역사가 아니라 주변국(동아시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점은 2007년 김정본 교과서 대부분이 기본 입장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⁵⁾. 그리고 근래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한 세계 환경의 조성 속에서 일본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고 있다⁶⁾.

그렇다면 이런 입장이 2007년도 김정본에서는 고대 한-일 관계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을까? 이제 장을 바꾸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5) 예를 들어 新日本史(山川)는 <역사의 추구 ; 세계 속의 일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다. 지구 뒤편의 사건이 일본에 큰 영향을 준다. 일본과 세계가 이어져 있음을 강하게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일본은 고립되어 역사를 새겨온 것은 아니다. … 일본사는 일본이란 국토의 범위 안에서만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도 諸外國과의 관계에 주의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9쪽)

위의 인용문은 왜 <세계 속의 일본>을 이야기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도 쉽고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느냐는 왜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며 중요한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6) 참고로 2007년도 김정본 역사교과서의 전체 서두(‘마에가키’)의 강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3종의 교과서가 서두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국제화 시대의 관계사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3. 고대사 서술의 문제점

이 장에서는 일본 고대사 속에서 한반도를 위시한 외부 세계가 어떻게 자리 매김되고 있는가를 유의하면서, 서술의 편의상 주로 관계사 부문에서 ‘문제성 있는 기술’로 생각되는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일본 고대사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에는 후술하듯이 응당 설명되어야 하거나 기술될 법한 내용인데도 설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혹은 조금 밖에 설명하지 않거나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때로는 그 반대로 특정 사항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과서 서술은 일차적으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서 단지 고대에 대한 인식 혹은 견해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단지 서술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술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있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없는 것>에서 왜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1) 야요이 시대 서술상의 문제점

농경의 개시와 금속(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핵심으로 하는 야요이 문화는 외부로부터의 문화 이식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이다. 그런데 일부 교과서에는 야요이 문화의 성립 주체에 관한 기술에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新日本史(山川)에서는 야요이 문화의 성립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 구분	교과서 전체 서두(‘마에가키’)의 강조 내용
日本史B(實教)	과거 일본인의 생활의 자취, 일본이란 국가가 걸어 온 역사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있음.
高校日本史(山川)	국제화의 시대에 21세기 일본의 역할이 크며 이를 위해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음. 다양한 자료와 주제, 지역사회의 역사에 관한 관심 필요
新日本史(山川)	‘현재’의 특징을 ‘국제화’의 시대로 요약. 교류·관계사의 중요성. 사회사의 매력 강조.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일본인의 일본사를 추구.
日本史B(三省堂)	특별히 서두 부분은 없으나, 문자사료, 역사 자료에 대한 테마학습 코너를 배치하여 역사에 대한 다양한 소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高校日本史B(實教)	자기 나름의 역사적인 사고력·판단력의 단련. 지역·사회사에 대한 관심 필요
高等學校 日本史B(清水書院)	自他の 역사와 문화 및 상호교류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ㄱ) 新日本史(山川)

“(전략)전국 동란의 시대가 되어 秦의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대륙에서의 동란이 많은 流民을 낳아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도 이르렀던 것이다.**”(20-21쪽)

위의 기술에서는 야요이 문화의 전래자가 마치 流民 집단이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 집단 중에는 실제 流民 집단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 모두를 流民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한반도의 동향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야요이 문화는 대륙의 동향과 관계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야요이 문화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일본열도와 가장 가까운 한반도 남부였다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야요이 문화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동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교과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한반도는 문화 전래 루트상 하나의 경유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야요이 문화는 신기술을 가진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재래의 조몬인과 함께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된다. 양자의 문화와 혼혈이 진행되어 현재의 일본인의 原形이 만들어졌을 것이다(同, 21쪽).”라고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의 사람들의 역할과 동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작 한반도의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 高等學校日本史B(清水書院)의 경우는 야요이 문화의 전래 주체에 대하여 아예 언급조차 없으며⁷⁾ 日本史B(實教)의 경우는 “야요이 문화의 개시 과정에서 대륙으로부터 집단의 도래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37쪽)”라고 기술하여 역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의 도래 사실은 추정단계를 이미 지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추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사실 관계의 불명확성을 높여 인식의 혼란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야요이 시대의 개막은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열도 사회의 큰 변혁을 초래하였으며 일본열도의 사회가 외부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일본열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성립한 것이 ‘倭(人)’이었다. 그런데 일본사B(三省堂)에는

7) 高等學校日本史B(清水書院), <야요이 문화의 성립>(22쪽)에서 문화전래의 주체는 무시되어 있다.

‘倭’에 대한 보충 설명에서 “왜는 중국에서 보아 동방의 한반도 혹은 일본열도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여 부른 말이다. 중국의 역사서 중에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남부를 합쳐서 倭로 부르고 있는 것도 있다(15쪽)”라고 하여 한반도도 倭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남부도 왜였다는 설명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부정확한 소개이며 하물며 한반도까지 倭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설명이다.

2) 4-7세기 국가형성기의 관계사 기술

① 백제·신라의 건국 시기

일부 교과서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시기에 관하여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기술이 보인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日本史B(實敎)
 “한반도 남부는 많은 소국들로 구성된 마한-변한-진한 3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4세기 중엽 무렵에는 마한에는 **백제가**, 진한에는 **신라가** 일어나 각각 소국을 통일하고 건국하였다.”(44쪽)
4세기 중엽 - 660년 4세기 중엽 - 935년

ㄴ) 高校日本史B(實敎)
 “4세기에는 마한에서 백제가, 진한에서 신라가 **탄생하였다.**”(23쪽)

ㄷ) 新日本史(山川)
 “4세기 전반에 마한에서 **백제가**, 진한에서 **신라가 건국하여**··”(30쪽)
前 187 - 660 前 577 - 935

위의 사례에서는 모두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시기를 4세기 중엽으로 간주하고 있는데⁸⁾ 이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기술의 배경에는 소위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해 백제와 신라가 각각 영역 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와, 소국의 형태였지만 당초 국가가 성립하는 시기는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와 신라가 마한과 진한을 각각 병합하는 시기는 4세기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그렇다고 백제와 신라 자체가 이때 처음 건국된 것은 아닌 것이다.

필자는 소국으로서의 건국 자체는 『三國史記』의 연대를 신뢰하여 각각 기원전 18년

8) 日本史B(實敎)의 경우 백제와 신라 아래에 4세기 중엽-660년, 4세기 중엽-935년을 각각 명기하고 있어 건국 시기 자체를 4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음이 확실하다. 또한 日本史B(三省堂)의 경우 관련 지도에서 백제와 신라의 존속 시기에 대하여 각각 4세기 중엽-660년, 4세기 중엽-935년임을 명기하고 있다(본장의 제4절<연표·지도의 문제> 참조)

과 기원전 57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백제의 경우는 시조인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명왕묘를 세워 대대로 그 계승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는데⁹⁾ 이것은 백제의 건국 연대가 고구려의 건국 연대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정작 고구려의 존속 시기는 『日本書紀』에도 “今此國亡者, 當在七百年之末也”¹⁰⁾라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 700년의 역사임이 이미 고구려 멸망 당시에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 연대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 연대가 대단히 신뢰할 만한 연대임을 방증해준다. 따라서 온조와 주몽의 부자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한, 온조의 백제 건국 시기는 고구려 건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¹¹⁾.

② 광개토대왕 비문의 문제

광개토대왕 비문의 해석 문제는 소위 ‘임나일본부’론의 시발점으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쟁이 전개되었던 영역이며 주지하듯이 역사교과서의 기술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2007년도 검정본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기술이 발견된다.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日本史B(實敎)

“**대화정권은 조선반도에 침입하여 고구려와도 싸웠다.** 414년에 세워진 고구려 호태왕(광개토왕) 비문에는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 무렵 諸國이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싸웠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대화정권은 그 무렵에도 소국분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변한의 땅에 세력을 뻗쳤다.** 이 지방은 加羅라고 불리웠다.

<보주; “碑는 압록강 중류 北岸의 중국 길림성 집안 부근에 있다. 비문의 일절에 “百殘(백제) 신라는 舊是屬民으로 由來朝貢하였다. 그런데 倭, 신묘년(391년)부터 바다를 건너 백잔을 破하고 신라를 □□하고 臣民으로 삼았다”라는 글귀가 있어, **왜가 조선에 침입하여 백제와 기타 나라를 지배하였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왜를 대화정권으로 보는 의견이 유력하지만 구주 지방의 왜로 보는 설도 있는 등 비문의 해석에는 문제가 많다**“> (44-45쪽)

9) 예를 들어 『三國史記』 백제본기 溫祚王 원년 5월조, 동 多婁王 2년 춘정월조, 동 仇首王 14년 4월조 등

10) 『日本書紀』 天智天皇 7년 10월조

11) 新日本史의 경우는 백제와 신라가 건국한 시기를 4세기 전반으로 명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각의 건국 시기를 <前18?> 및 <前57?>로 附記하였는데 이런 어정쩡한 기술은 학생들에게 더욱 혼란을 줄 수 있다.

ㄴ) 高校日本史(山川)

“이 비문에는 왜병이 신묘년(391) 이후 한반도에 건너가 고구려 군과 싸운 일이 새겨져 있다. … (* 광개토왕비문 사진설명 부분에서 신묘년조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야마토 정권은 일찍이 뛰어난 문화와 철 자원을 구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4세기 후반 이후 북방의 고구려가 남으로 진출해 왔기 때문에 백제 등과 함께 고구려와 싸우게 된 것이다. (20-21쪽)

ㄷ) 高校日本史B(實教)

“조선의 뛰어난 생산기술과 철 자원을 구한 야마토 정권은 변한의 지역에 성립한 가야제국에 4세기 후반 백제와 결탁하여 출병하였다. 또 신라를 압박하고 북방의 고구려와 싸웠다. 이에 대해 고구려는 신라를 구원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왜의 군대와 싸웠다. 그간의 사정은 고구려 호태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23쪽)

ㄹ) 日本史B(三省堂)

<표-3> 일본사 · 세계사 對照年表 (383쪽)

年代	政治 · 經濟 · 社會
391	倭人, 渡海하여 백제·신라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다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 414 건립)

이상의 기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문의 신묘년조에 대한 기술 태도이다. 예를 들어 ㄹ)의 경우처럼 연표에 신묘년조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당장 이 내용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ㄱ)과 ㄴ)의 경우처럼 비문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편에서는 왜가 한반도에 침입하여 고구려와 싸웠다고 하는 식의 기술은 마찬가지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

물론 비문에 신묘년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문 속에 신묘년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도 아니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묘년조에 대한 사실의 여부를 전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묘년조의 사료 비판과 함께 그 문구가 가지는 사실성을 알려주어야 그것을 읽는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판단에 관한 기준 내지 연구 성과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비문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만 기술하면 대개의 경우 그것을 곧장 사실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현재 비문의 신묘년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 이 문구가 비문 속에서 광개토대왕의 군사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삽입된 하나의 ‘前置文’이며 또한 이

것이 곧장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한·일 양국에 공통의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만약 ㄷ)에서 이 내용을 아직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간주하고서 연표를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를 심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ㄱ)처럼 “왜가 조선에 침입하여 백제와 기타 나라를 지배하였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비문의 해석상의 문제로서 그 왜의 주체가 어느 지역의 왜인가를 거론하는 것도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이다¹³⁾.

이미 학계의 상식(통설)이 되어 있는 ‘前置文’설이 반영되어 있는 교과서 기술은 현재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왜 반영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¹⁴⁾. 교과서 기술과 연구 성과 사이의 遊離는 ㄷ)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야제국에 4세기 후반 백제와 결탁하여 출병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日本書紀』神功皇后 49년조의 기사¹⁵⁾를 전제로 한 서술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적어도 이 기사의 원문 그대로 양국이 가야에 결탁하여 침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¹⁶⁾ 또한 그것이 학계 일반의 이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日本書紀』의 내용을 그

12) 비문에 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연민수 「국내학계의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고대한일교류사』, 해안, 2003, 22-24쪽)을 참조 바란다.

13) 비문에서 왜의 주체세력 비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락10년조 이후의 왜군의 활동기사에 대해서이지 신묘년조에 보이는 것과 같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세력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왜의 주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ㄱ)은 신묘년조의 사실 판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이 왜의 어느 세력이었는가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14) 이 점은 궁극적으로 당시 4-6세기의 왜와 한반도 남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15) 『日本書紀』神功皇后 49년 3월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以荒田別. 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上沙白. 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 沙沙奴跪 *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 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林.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七國. 仍移兵西廻至古奚津. 屠南蠻. 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四邑. 自然降服. 是以百濟王父子. 及荒田別. 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 *今云州流須祇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彥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數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窮. 常稱西藩.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彥. 至都下厚加禮遇. 亦副久氏等而送之.”

16) 물론 신공황후 49년조의 해석에 대해서 일치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4세기 당시 백제의 단독 군사 행동으로 보는 학설(예를 들어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 일지사, 2002, 97-113쪽)에서 사실의 시기를 5세기로 보는 견해

대로 전하는 기술이 교과서 상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비문의 내용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려고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 신묘년조의 속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¹⁷⁾ 그 위에서 당시 각국의 사정과 입장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문의 내용을 왜국 중심으로 읽으면 마치 당시의 전쟁이 고구려와 왜국의 격돌로 오해될 수도 있으며¹⁸⁾ 왜를 끌어들이 세력인 백제의 의도가 처음부터 捨象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왜국 출병의 이유가 처음부터 부풀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¹⁹⁾.

과거 노골적으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본다면 지금의 교과서는 많이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문의 시대부터 6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달리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왜국 출병의 전후 사정과 관련하여 “한반도 남부와 깊은 관계(ㄴ)²⁰⁾”, “가야제국에·출병(ㄷ)”, “변한의 땅에 세력을 뻗쳤다(ㄱ)” 등의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1995, 199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어느 학설이든지 적어도 『日本書紀』의 기술대로 백제와 왜가 결탁하여 가야를 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17) 단적인 예로 ㄷ)의 경우 “아마도 정권은··가야제국에 4세기 후반 백제와 결탁하여 출병하였다. 또 신라를 압박하고 북방의 고구려와 싸웠다.··그간의 사정은 고구려 호태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비문에 대한 <보주>(23쪽)에는 신묘년조에 대한 내용만 소개하고 있다.
- 18) 단적인 예로 ㄱ)의 경우 출병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백제와의 和通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화정권’의 입장만 부각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왜가 왜 고구려와 싸워야 하였는지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사이기 때문에 일본(왜)을 중심에 두고 서술한다는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여야 함은 중요한 원칙이다.
- 19) 고구려의 남하로 한반도 남부의 문물 유입에 영향을 받게 되었기에 출병하였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ㄴ)에서 “일찍이 뛰어난 문화와 철 자원을 구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4세기 후반 이후 북방의 고구려가 남으로 진출해 왔기 때문에 백제 등과 함께 고구려와 싸우게 된 것”이라는 설명은 이런 논리를 가장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의 도치이다. 즉 고구려의 남하가 한반도 남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가야와 왜가 對고구려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지 먼저 남하의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왜가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석 「5세기 백제와 왜국의 관계」(『백제연구』39, 2004, 42-47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 20) 新日本史(山川)는 이와 관련하여 “왜는 4세기에는 한반도 남부의 변한 지역에 있었던 가야제국(가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철 자원을 확보하였다. 그곳은 생산 기술을 수입하는 반도의 거점이며 왜인도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30쪽)”고 기술하고 있는데, 다만 왜인의 왕래는 부정할 수 없으나 ‘집단적’ 이주를 보여주는 증거는 대단히 미약하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²¹⁾. 전체적으로 위의 교과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표현들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③ 5세기의 제문제

5세기의 문제로서는 왜의 五王 문제와 渡來人²²⁾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왜의 五王에 관한 기술부터 살펴보자.

ㄱ) 日本史B(實教)

“송서 왜국전 등의 중국 사서에 의하면··왜의 다섯 왕이··**한반도 남부의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칭호를 얻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화정권의 왕이 중국 황제의 권위를 빌어 조선 諸國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철 자원을 장악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칠지도의 명문에 의하면 이 당시 왜와 백제가 통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5쪽)

ㄴ) 新日本史(山川)

“왜는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외교 군사상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 등이 한 것처럼 중국의 남조에 사자를 보내어 조공하였다.···왜왕은 중국의 남조에 遣使하여 황제의 신하가 되고 관작을 수여받았으며 **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을 남조에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다.”(31쪽)

ㄷ) 日本史B(三省堂)

“송서 왜국전에는 5세기에 찬·진·제·흥·무 왜의 오왕이 고구려와 대항하여 **한반도 남부의 지배권**을 인정받고자 중국 남조의 송에 각각 사신을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다”(19-20쪽)

위의 기술에서는 모두 한반도 남부의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으로 상징되는 왜왕의 자칭 칭호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지배권이라고 하면 포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세기의 설명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22) 渡來人이란 표현은 일본 중심의 표현이나 여기서는 일본 교과서의 용어를 그대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도래인이라고 쓰기로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기점으로 한 표현으로서 渡倭人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예컨대 이재석 「5세기말 곤지의 渡倭 시점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백제문화』30, 2001)에서 ‘渡倭’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김기섭, 「5세기 무렵 백제 渡倭人の 활동과 문화 전파」(『한일관계사연구논집2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에서는 渡倭人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괄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당시 왜왕이 자칭한 것은 軍事号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의 행정권과는 구분되는 칭호였다는 점에서²³⁾ 지배권 일반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ㄱ)의 경우 왜의 오왕의 對宋 조공 외교가 왜국의 국내지배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²⁴⁾ 언급에서 제외되어 있으며²⁵⁾ 주로 對한반도 관계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이점 역시 편향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諸軍事号의 칭호가 한반도 諸國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설명은 그 자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송으로부터 받은 칭호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이 이루어지는 평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칭호의 획득이 철 자원 장악 목적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왜왕이 한반도에 대하여 정치적 우위성을 가지려고 한 궁극적인 이유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나 구체성에서 떨어진다²⁶⁾. 아울러 칠지도의 명문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당시 왜와 백제가 통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언급한 것도 부적절한 표현이다. 칠지도의 명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설이 있지만²⁷⁾ 현재 4세기 중후반 백제와 왜의 통교 때에 백제가 왜왕에게 준 贈與品이라는 것이 통설이며²⁸⁾ 따라서 5세기의 양상을 설명해주는 증거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ㄴ)에서는 왜의 오왕의 조공 당시 신라도 남조에 사신을 파견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5세기 당시 신라는 남조에 조공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사실 관계에서 오류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宋書』 왜국전에 나오는 왜의 오왕 관련 기사는 국내적·국제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고려한 위에 평가를 내려야 하며 또한 왜왕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그 주장 내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내지 실천력이 수반된 것이었는지도 아울러 검토해

23) 예를 들어 ‘安東大將軍倭國王’의 경우 ‘安東大將軍’은 군사권을 관장하는 칭호이며 왜국에 대한 일반의 행정적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은 ‘倭國王’이다.

24) 예를 들어 鈴木靖民 「倭の五王の内政と外交」(『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続群書類從完成會, 1985)

25) 이점은 ㄷ)도 마찬가지로서, 국내 정치사의 관점에서 본 대송외교 관련 기술은 없다.

26) 왜국이 철 자원을 비롯한 제반 문물의 확보에 관심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왜국의 입장이 5세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게다가 군사호의 자칭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하여 철 자원 확보에 연결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

27) 기존 연구에 대한 소개는 연민수, 주 12)의 전계 논문, 30-33쪽을 참조 바란다.

28) 연민수, 주 12)의 전계 논문, 30쪽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이 도외시되어서는 그야말로 왜왕의 일방적 주장만이 과대평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학계에서 왜왕의 군사호 주장과 고구려 적개심 표출이 대외용이라기보다는 국내정치용이었다는 견해가²⁹⁾ 제기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도래인 관련 기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도래인 관련 기술은 각 교과서마다 대체로 이들이 왜국 왕권에게 어떻게 조직되어 활용되었는가에 관하여 서술되는 경향이 강하다³⁰⁾. 그리고 도래인 기술 부분에는 도래인 대부분이 전란 피난민 혹은 군사 대가로 지불된 사람들이란 이미지로 일관하며 특히 전쟁 난민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서는 新日本史(山川)의 기술을 예를 들어보자.

ㄷ) 新日本史(山川)

“한반도로부터는 전란을 피하거나, 군사원조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과 기술 등이 일본열도로 들어왔다. 5세기 초가 도래의 제1波로, 왕인, 아지사주, 궁월군은 웅신천황 때에 도래하였다고 記紀는 전하고 있다. …백제는 475년…남천 하였다. 이러한 전란의 영향을 받아 今來漢人이라 불리는 백제계 사람들이 도래하였다. 5세기 후반이 도래인의 제2파이다”(30-31쪽)

“도래인에 제2파가 있었던 웅락천황의 시대는 야마토 정권 내에서도 획기적 시기가 되었다. …명문에 <治天下~大王>이라든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보좌한다>고 나오는 것에서 신하가 되어 있는 송 황제 중심의 천하와는 별개로 왜의 대왕 중심의 천하가 독자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대왕의 아래에 중국의 권위로부터 독립한 질서가 만들어져”(32쪽)

5세기 초가 도래의 제1파, 5세기 후반을 도래의 제2파로 보는 것은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며³¹⁾ 岸俊男와 井上光貞 중심의 웅락조에 대한 적극

29) 이재석 「5세기 倭王之 對南朝外交와 통교 단절의 요인」(『일본역사연구』13, 2001, 16-17쪽), 동 「송서 왜국전에 보이는 왜왕(무) 상표문에 대한 검토」(『신라문화』24, 2004, 20-24쪽)

30) 예를 들어 日本史B(實教)에 다음과 같은 기술은 그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세기에는 조선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도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들 도래인은 …등의 새로운 기술과 말 사육과 승마의 술을 전하였다. 문자의 지식도 도래인에 의해 전래되었다. 대화정권은 이들을 …등의 品部로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문필에 뛰어난 자를 史部로서 활용하여 정치, 외교에 필요한 기록, 문서의 작성과 재무상의 사무를 담당시켰다…”(51-52쪽)

31) 예를 들어 上田正昭 『歸化人』(中央公論社, 1965, 23-26쪽), 加藤謙吉 「渡來人」(『古代史研究の最前線 第1卷』, 雄山閣, 1986, 56-59쪽)

적 평가 논의와³²⁾ 西嶋定生の 소위 <웅략조=倭의 天下의 성립>론을³³⁾ 교과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의 西嶋說은 현행 교과서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³⁴⁾. 다만 <왜적 천하>관의 성립을 이야기 할 때에는 이 시기가 동아시아의 다원적인 천하관이 공존하는 시대였음을³⁵⁾ 전제한 위에 왜왕의 이런 내부적 治世의 표현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는 당시 오직 중국과 왜왕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 양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래인의 이주 시기에 대해서는 5세기 초기와 말기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시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란이 어떻게 도래인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양자 사이의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만 구체성에서는 막연한 상관관계 설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ㄱ)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래의 사례로서 왕인, 阿知使主, 弓月君이 應神天皇 때에 도래하였다고 하는 『古事記』·『日本書紀』의 전승을 소개하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도래 전승은 어디까지나 전승일 뿐이며 반드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④ 아스카 시대의 한일 관계

④-1. 6세기의 관련 기술

6-7세기 아스카 시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임나(가야)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백제의 불교 전래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백제의 불교 전래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술 태도이다.

ㄱ) 日本史B(實教)

“불교는 북방불교 계통의 것이 서역, 중국을 거쳐 6세기 초두 이전에 백제에 전해졌는데 일본에 전래된 것은 6세기 중엽 무렵이다.”(53쪽)

32) 岸俊男 「劃期としての雄略朝」(『日本政治社會史研究』上, 塙書房, 1984), 井上光貞 「雄略朝における王權と東アジア」(『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 4 朝鮮三國と倭國』, 學生社, 1980).

33) 西嶋定生 『日本歴史の國際環境』(東京大學出版會, 1985)

34) 현재 일본의 고대사에 대한 통사적 서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가 웅략조의 획기성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西嶋定生の 倭의 天下論에 입각한 독자적 세계관이 이 무렵 형성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교과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점에서 新日本史(山川)의 기술은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35) 예를 들어 고구려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미 밝혀져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서 노태돈 「삼국시대인의 천하관」(『강좌한국고대사 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을 들 수 있다.

백제의 경우 불교가 전래된 것은 침류왕 시대로서 『삼국사기』에 전래 기사가³⁶⁾ 남아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적당히 6세기 초 이전까지는 백제에도 전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본 중심적인 서술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일본에 6세기 중엽에 불교가 전래되므로 전래 당사자인 백제에는 그 이전인 6세기 초 이전에는 전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래 받는 일본 중심의 時制 표현이다. 하지만 이렇게 본문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4세기에 백제에 전래된 불교가 왜 일본에는 6세기 중엽이 되어야 전래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오히려 사상시켜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다음에는 임나 관련 부분에 대한 각 교과서의 기술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각 교과서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ㄴ) 日本史B(實教)

“5세기 이래 조선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대립이 계속되었는데 6세기에는 백제 신라가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적 통일이 되쳐져 있던 가라(임나)지방으로 세력을 넓혔다. **대화정권도 이전부터 이 지역의 일부에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562년에 가라제국의 주요부를 영유하였다.”(54쪽)

<보주 ; “일본서기에는 562년에 신라가 임나일본부 또는 관가(미야케)를 멸망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부란 말은 이 무렵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관가로 불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국가체제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6세기 전반 大連인 大伴金村이 對조선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실각한 뒤 欽明天皇의 아래에서 大臣인 蘇我稻目과 大連인 物部尾輿가 권력을 잡고 중앙집권을 강화해나갔다.”(54쪽)

<보주 ; “대화정권은 512년에 백제의 가라(임나) 4현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하였으며 **금촌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비난받아 실각하였다고 한다.**”>

ㄷ) 高校日本史(山川)

“대련인 **대반씨가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의 실패도 있어 물러나자** 대련인 물부씨과 대신인 소아씨가 대립하였다.”(26쪽)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의 西進을 받아, 백제는 남으로 세력을 넓혀 가야 서부를 지배하에 넣었다. 이 무렵 야마토 정권의 담당자였던 **대반씨는 뒤에 권위를 잃었다.**”(26쪽. 지도에 대한 설명)

36) 『삼국사기』 백제본기 침류왕 원년 9월조에 마라난타의 불교 전래 기사가 보인다.

“백제 신라는 국내의 지배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야마토 정권과도 관계가 깊은 가야제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 562년 신라는 마침내 가야제국을 지배하에 넣어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발판을 상실하였다.” (26-27쪽)

ㄹ) 삼성당 일본사B

“527년 야마토 왕권은 깊은 관계에 있던 가야에 원군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신라와 결탁하였다고 일컬어지는 축자국조 반정에 의해 좌절당하였다.(반정의 난)··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대련인 대반금촌이 백제에게 가야 영토에 대한 확대를 인정해 준 것도 있어, 신라와 백제의 가야에 대한 침입은 강해져, 562년 가야는 신라에 멸망당하였다.··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후퇴당한 야마토 왕권은 국내에서도 반정의 난··등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허약함이 국내외에 알려졌다.”(24쪽)

ㄱ) 新日本史(山川)

“512년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남부의 가야제국 중 서부의 4개국(임나 4현이라 칭함)을 백제가 지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562년까지 가야제국은 백제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멸망하고 야마토 정권도 반도에 있어서의 거점을 상실하였다. 가야 서부에 대한 지배의 승인과 교환으로 백제로부터 513년에 오경박사가 도래하였고 게다가 易박사 曆박사 醫박사도 도래하고 유학과 기타 학술이 전해졌다.··6세기 초에는 대반금촌이 정치를 지도하였는데 한반도에서의 실정의 책임을 추궁당해 은퇴하고 대반씨는 세력을 상실하였다.” (33쪽)

ㄴ) 高等學校 日本史B(清水書院)

“선진문화를 섭취하는 거점을 상실한 왜국은 백제에 접근하여 유교·· 등의 박사 파견을 요구하여 기술자, 문물의 도입을 피하였다.”(31쪽)

이상의 서술에서 임나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은 야마토 정권과 가야와의 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소위 임나 4현에 대한 할양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광개토대왕 비문과 관련한 기술에서 필자가 유보해두었던 ‘한반도 남부와와의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왜와 가야의 관계는 6세기 가야의 멸망 과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위 임나 4현의 할양과 관련된 ㄴ)-ㄱ)에 걸친 4종의 교과서 기술은 분명하게 임나 4현을 야마토 정권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ㄱ)에서 자신의 실각을 초래하였다는“大伴金村의 對조선 정책” 실패란 그 보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위 임나 4현의 지배권 용인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ㄷ)·ㄹ)·ㄱ)에서도 공통적으로 기

재되어 있다³⁷⁾. 문제의 임나 4현 할양 기사란 『日本書紀』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日本書紀』繼體天皇 6년(512) 冬12월조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合爲同國. 固存之策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具得是言. 同謨而奏. 迺以物部大連鹿火宣勅使. 物部大連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 (중략)·於是或有流言曰. 大伴大連與哆唎國守穗積臣押山. 受百濟之賂矣.”

여기에 보이는 任那國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4縣은 과거 末松保和가 전남의 영산강 유역에서 섬진강 유역에 걸친 지역으로 비정한 이래³⁸⁾ 현재 일본 학계에서는 대체로 전남 지역을 4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³⁹⁾. 그리고 과거 末松保和처럼 야마토 정권의 임나지배를 사실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백제에게 넘겨준 것을 임나의 쇠퇴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사건으로 평가하였다⁴⁰⁾. 하지만 末松保和 류의 임나지배 설은 현재 퇴조하였으며 따라서 일본학계에서도 임나 4현 할양 기사를 노골적으로 그와 같이 평가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학계에서는 末松保和의 지명 비정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⁴¹⁾ 임나 4현의 할양 자체를 야마토 정권의 임나지배를 전제로 조작된 기사로 간주하는 견해가 유력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 상황을 감안한다면 위의 교과서의 기술은, 비단 한국학계의 견해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매우 낡은 견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반대련금촌의 실각을 임나 4현 할양기사와 관련짓는 것은 『日本書紀』의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은 물론 오늘날의 연구 성과와도 저촉된다⁴²⁾. 그 중

37) ㄷ)에서 ‘대반씨의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의 실패’는 그 관련 지도에 대한 설명(26쪽)에서 백제의 가야 서부(지도상에서는 현재의 전라도 지역) 영유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 가야 서부는 소위 임나 4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ㄹ)에서는 “대반금촌이 백제에게 가야 영토에 대한 확대를 인정해 준 것도 있어”라는 대목이 여기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본사·세계사 對照年表> (383쪽)에서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기재하고 있다. 연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49, 118-122쪽)

39) 예를 들어 田中俊明 「韓國の前方後圓形古墳の被葬者・造營集團に関する私見.」(朝鮮學會編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同成社, 2002)

40) 예를 들면 末松保和, 주 38)의 전개서, 115-129쪽

41) 예를 들어 김현구 『大和政權의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1985, 21-22쪽)

42) 대반대련금촌의 실각과 소위 임나 4현 할양 기사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일찍이 八木充 「大伴大連金村の失脚」(『日本書紀研究』1, 塙書房, 1964)에서 지적된 바이다. 다만 八木の 논문은 임나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지만 적어도 『日本書紀』상의 자체 논리 위에서도 위의 두 사안은 일단 별개

에서도 특히 ㄷ)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562년까지 가야제국은 백제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멸망하고 야마토 정권도 반도에 있어서의 거점을 상실하였다.”고 한 기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가야의 멸망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즉 신라의 가야 병합이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가야 병합’이라는 관점인데 간단히 말해 전남 지역 영유는 백제가, 경남 지역 영유는 신라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제기된 배경에는 전남 지역이 임나 4현이며 그곳을 백제의 지배 영역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나의 한 축이 백제에 귀속되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⁴³⁾.

또한 “가야서부에 대한 지배의 승인과 교환으로 백제로부터 513년에 오경박사가 도래하였고” 게다가 여러 박사들과 문물이 전해졌다는 기술은 전체적으로 군사원조와 문물제공의 상호 교환관계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⁴⁴⁾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지배 승인의 대가로 이러한 인적 제공이 이루어진 것인 양 서술하고 있다.

한편 위의 교과서 기술에는 표현이 부적절한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ㄴ)에서 선진 문화를 섭취하는 거점 가야를 상실한 왜국이 문물의 유입을 위해 백제에 접근하였다는 식의 서술은 『日本書紀』繼體·欽明朝에 가야가 멸망하기 이전에도 백제와 왜 사이에 많은 문물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⁴⁵⁾ 6세기 후반기부터는 신라와 고구려와도 외교 관계를 갖는 이른바 多面外交의 시대로 들어가⁴⁶⁾ 이들 나라로부터도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위의 기술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ㄷ)에서 527년 가야에 원군 파견 운운은 명백하게 『日本書紀』에 보이는 소위 近江毛野臣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⁴⁷⁾, 원군의 파견이 축자국조 반정에게 저지당하였다는 것은 『日本書紀』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원래 사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기사를 그대로 믿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ㄴ)에서 당시 신라가 멸망시킨 가야가 일본부가 아니라 실은 ‘官家’였다는 기술은 『日本書紀』의 기사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야가 일본의 관가였다는 것을 거꾸로 강조하는 기술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6종의 교과서 중에

라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3) 한 가지 유의해서 볼 점은 전남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의 해석 문제는 아직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4) 김현구, 주 41)의 전개서, 14-65쪽, 鬼頭清明 『日本古代國の家形と東アジア』(校倉書房, 1976, 83쪽)

45) 이점은 『日本書紀』繼體·欽明朝의 많은 대외관계 기사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46) 김현구, 주 41)의 전개서, 260-300쪽

47) 25쪽의 보주에서 근강모야신의 파견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서 야마토 정권의 임나 지배를 사실상 긍정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④-2. 6세기 말 7세기 초의 관련 기술

한편 가야 멸망 이후 추고조를 중심으로 한 시기의 외교관계는 한반도 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한반도 관계 기술에서 『日本書紀』의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임나 관련 기술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술을 보자.

ㄱ) 日本史B(實教)
 “외교에서는 추고조 초기 가라에서의 세력 회복을 피하여 조선에 출병하려고 하였지만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으며 이후는 신라와 화평을 유지하였다.……(56쪽).”

ㄴ) 新日本史(山川)
 “추고조에서는 처음에 임나부흥 문제로 신라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지하고……(38쪽).”

여기에 보이는 임나부흥 문제 즉 가라에서의 세력 회복이란 곧 『日本書紀』 추고천황 8년 2월조, 동 10년조, 동 11년조 등에 보이는 일련의 기사를 전제로 한 기술이다. 7세기 왜국의 대외관계의 핵심적 과제를 임나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日本書紀』이다. 이것은 신공황후 이래로 임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기술로서 향후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대항 의식이 당시 왜국 조정의 국가의식이었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의 기술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ㄷ) 高等學校 日本史B(清水書院)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급속히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국력을 충실하게 하자,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왜국에서도 급속히 정치체제와 조직을 개혁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또 대외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위12계제를 제정하고……신라와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던 왜국은 600년에 견수사를 파견하여 스스로 천자를 칭하고 중국왕조와 대등한 입장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신라와 백제에 대한 왜국의 정치적 입장을 우위로 하기 위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32쪽)

추고조의 체제정비는 일차적으로는 왜국 내부의 지배질서의 정비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었으며 정비의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국가들과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의 관위(冠位)제와 헌법17조 등도 대외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타당한 서술이라고는 하기 어렵다⁴⁸⁾. 물론 당시 왜국의 조정에 그러한 경쟁의식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한 경쟁 대항의식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강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⁴⁹⁾.

셋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등외교를 추구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위의 ㄷ)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ㄷ) 日本史B(實教)

“조정은 수서에 의하면 600년에 수에 사자를 파견하였다고 나오는데 일본서기에서는 607년에 소야매자를 견수사로 파견하여 대등한 국교를 요구하였다고 나온다. 이것은 복속하여 조공을 행함으로써 중국황제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하였던 왜의 오왕 시대와는 다른 것이었다(56쪽).”

ㄹ) 日本史B(三省堂)

“이 시기 조정의 외교 자세는 중국의 관위를 구한 5세기 무렵과는 달리 때로는 수와 대립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신라와 고구려 등에 대한 대항도 있어 국가의식을 고양시킨 때문이었다.”(26쪽)

위의 기술에서는 대등외교 재개가 가지는 의미와 왜 견수사 파견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는 일본은 중국과 대등하고자 하였다는 국가적 입장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의 오왕 시대와의 차이점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ㄹ)의 기술은 이 점을 간단하면서도 요령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왜국의 대수 외교관계 개시에는 재고해야 할 점들이 많다. 먼저 대등외교의 개시 운운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근년의 연구에 의하면 대등외교 주장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國書 사건의 이면에는 고구려의 對隋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⁵⁰⁾ 따라서 고구려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수와 왜국 간의 관계 속에서만 사건

48) 예를 들어 조정에 출사하는 호족들의 위계질서를 마련하고자 한 관위12계제의 시행이 대외 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9) 高校日本史B(實教)에서는 “수에 왜국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천황기 국기 등의 역사서를 편찬하였다.(29쪽)” 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기서도 대외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서술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50) 이성시 「高句麗と日隋外交」(『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 초출은 1990)

의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기술은 당시의 외교의 관행이나 실태 면에서 볼 때 왜국이 조공외교에서 탈피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조공외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隋書』 왜국전의 원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듯이 수나라는 왜국사신을 명백하게 蠻夷로 인식하고 있었으며⁵¹⁾ 이러한 인식은 후대 당대에도 마찬가지였다⁵²⁾. 오히려 왜국(일본)의 대중국 관계의 특징은 조공관계 속에 있으면서 책봉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책봉하는 주체의 피책봉국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이점을 무시한 채 피책봉국의 대등 의식 때문에 책봉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설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④-3. 7세기 중·후반기의 관련 기술

한편 7세기 중·후반기의 한일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는 대체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율령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술을 비교해 보자.

ㄱ) 日本史B(實教)

“대륙에서는 618년에···당이 일어났다. 당은 율령제도에 기초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여 주위 나라들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각각 국력의 강화에 힘썼다. 긴장된 내외 정세 속에서 중대형황자는 중신검족등과 도모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완성시키고자 하였다.”(58쪽)

ㄴ) 新日本史(山川)

“630년에 犬上御田鍬·藥師惠日 등이 최초의 견당사로서 파견되어, 당의 실정을 보고 귀국하자 율령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이 움직임은 아마토 정권 이래 호족이 세습하여 직무를 분담해 온 체제를 고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당에서 귀국한 유학생인 고향현리 등이 개혁의 중심이 되었다.”(42쪽)

통상적인 기술은 ㄱ)의 경우처럼 隋唐의 등장 이후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왜국 조정에서도 권력 집중이 일어나 蘇我氏가 타도되고 신정권이 등장하였다는

51) 『隋書』 왜국전에는 수 양제가 왜국의 국서 내용에 대하여 불쾌히 여기며 “蠻夷書有無禮者，勿復以聞”하였다고 한다.

52) 예를 들어 大町健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律令国家」(『日本史講座2 律令國家の國家』, 東京大學出版會, 2004. 226-230쪽)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ㄴ)에서는 645년의 소위 개신 쿠데타의 발발이 율령제의 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쿠데타의 발생 배경에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및 왜국도 여기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捨象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개신 쿠데타의 성공, 그리고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따라 왜국의 제체정비가 급속히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소위 大化改新이 처음부터 율령제 시행을 지향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령제 국가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모든 교과서에 걸쳐, 7세기 후반 당과 왜국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동안 신라와 왜국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언급한 경우가 전무하다는 점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天武-持統朝를 중심으로 한 율령국가 형성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당과는 통교가 단절되어 있던 상태에서 율령 시스템이 도입·정비되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왜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신라였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사신을 주고받는 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⁵³⁾ 율령제 국가가 성립해 갔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이 시기 신라의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일본열도의 율령제 국가의 성립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반면, 오히려 당-일본과의 대비에 치중하고 있음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나라·헤이안 시대 관계사의 제문제

8-10세기 관계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신라·발해 관계에 대한 기술이 소략해지고 對唐 관계 중심의 서술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 절에서 나타났던 국가형성기에서의 對韓 관계의 비중이 8세기 이후에는 극도로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당과의 관계가 중심축으로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다음의 기술 사례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확인해 보자.

ㄱ) 日本史B(實教)

“정부는 8세기 초에 건당사를 파견하여 669년 이후 두절되었던 당과의 국교를 회복하였다. 나라시대에 건당사는 6번 파견되어 외교와 문화의 유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건당사에 의해 당의 정치제도와 국제적인 문화, 선진기술 등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吉備眞備, 승 玄昉 등 유학생, 학문승의 공적이 컸다.

신라와는 종종 사절을 교환하였는데, **일본이 신라를 종속국으로 대우하려고 하였기**

53) 7세기 후반 신라·고구려(안승)와 왜국의 사신왕래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때문에 양국 관계는 종종 긴장되었다. 7세기 말 중국 동북부에서 일어난 발해는 당과 신라에 대항하기 위함도 있어서 727년 일본에 통교를 요구하였고 일본도 이에 응해 이후 종종 사절을 교환하였다.”(67쪽)

ㄴ) 新日本史(山川)

“일본 율령국가 안에서는 천황이 황제이며 일본이 중화가 되는 당과 동일한 제국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신라와 발해를 번국으로서 위치지우고 종속국으로 취급하려고 하였다.··한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사이에 빈번하게 사신을 왕래시키며 8세기 초까지는 일본에 종속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이윽고 대등외교를 주장하였지만, 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藤原仲麻呂는 신라에 대한 정토전쟁을 준비하였다.

한편 신라는 민간교역에 힘써, 당보다도 일본과의 교류가 질량 모두 크게 되었다. 현재의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당과 남방의 보물에는 신라상인이 증개한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7세기 말 諸민족을 통합하여 중국 동북부에 일어났던 발해도 당과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사자를 종종 파견하여 臣從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55-56쪽)

위의 기술에서 신라와 발해는 건당사 기술에 비하면 지나치게 간단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8세기 일본의 외교관계를 건당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균형감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⁵⁴⁾. 또한 신라 및 발해와의 관계를 상하관계에서 주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도 편중된 기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에 종속하는 모양새 운운은 『續日本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측 기록에만 의존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점이다. 『續日本紀』에 묘사된 일본 우위의 대신라 관계도 사료 비판에 의거하여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이 현실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일본 조정의 입장 중심으로 기술된 것임이 이미 일부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⁵⁵⁾.

누가 상위의 국가였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거꾸로 기타 많은 측면의 양국 관계의 실상이 사상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실제로 8세기 이후의 신라·발해와의 관계는 上記한 정치적 상하 관계 관련 기술과 일부 교과서의 정창원 유물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기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다분히 8세기 율령국가의 위용을 唐과 대비되는 하나의 帝國의 구조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하지만 근대 이후의 생성어인 제국이란 용어를 고대에 적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⁵⁷⁾.

한편 위의 기술 내용에는 부정확한 사실관계도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당시 교역 관계에서 신라의 대당 교역량이 대일 교역량보다 밀돌고 있었다는 ㄴ)의 기술은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교섭 횟수 면에서는 신라-당의 관계가 신라-일본의 관계를 압도하고 있다⁵⁸⁾. 또한 新羅坊의 존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에서의 신라인의 활발한 활동을 감안할 때 오히려 대당 교역량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⁵⁹⁾.

연대		신라 · 고구려의 遣使		외국의 遣新羅 · 高句麗使	
신 라 문 무 왕	天武1(672)	11월	金押實 등		
	天武2(673)	윤6월	韓阿浪 金承元, 一吉浪 金薩儒 등		
		8월	上部位頭大兄 邯子, 韓奈末 金利益(송사)		
	天武4(675)	2월	왕자 忠元 등	7월	小錦上 大伴連國麻呂, 少錦下 三宅吉士入石
		3월	級浪 朴勤脩, 大兄 富干		
	天武5(676)	11월	沙浪 金清平, 汲浪 金孝儒 後部注薄阿于 등, 大奈末 金陽原(송사)	10월	大乙上 物部連麻呂, 山背直百足
	天武7(678)	미상	奈末 加良井山 등		
	天武8(679)	2월	上部大相桓父 등, 奈末 甘物那(송사)	9월	遣新羅使, 遣高麗使의 귀국(사신 명단, 파견 시기는 미상)
		10월	阿浪 金項那 등		
天武9(680)	5월	南部大使卯問 등, 大奈末 考那(송사)			
	11월	沙浪 金若弼 등			
神 文 王	天武10(681)	5월	西部大兄俊德 등, 大奈末 考那(송사)	7월	小錦下 采女臣竹羅, 當摩公楯 小錦下 佐伯連公足
		10월	一吉浪 金忠平		
	天武11(682)	6월	下部助有卦婁毛切 등, 大那末 金釋起(송사)		
	天武12(683)	11월	沙浪 金主山		
	天武13(684)	12월	大奈末 金物儒	4월	小錦下 高向臣麻呂, 小山下 都努臣牛甘
				5월	三輪弓田君難波麻呂
	天武14(685)	11월	波珍浪 金智祥, 大阿浪 金健勳		
	持統天皇 원년(687)	9월	왕자 金霜林, 급찬 金薩慕	정월	田中朝臣法麻呂
	持統 3(689)	4월	級浪 金道那		
持統 4(690)	10월	송사 金高訓, 당 학문승 등 호송			
孝 昭 王	持統 6(692)	11월	級浪 朴億德		
	持統 7(693)	2월	沙浪 金江南	3월	息長真人老, 大伴宿禰子君
	持統 9(695)	3월	왕자 金良琳 외	9월	小野朝臣毛野, 伊吉連博德

* 도표의 고구려국은 안승의 고구려국을 말한다

54) 왕래의 빈도수나 역할 등을 고려해도 예컨대 신라와의 관계가 이렇게 경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예를 들어 ㄱ)의 경우 신라가 나라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균형감 상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사적인 부분의 기술에서 신라와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함은 예컨대 아래의 日本史B(삼성당)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위의 기술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발해에 대한 기술 태도이다. 필자가 주시하는 것은 위의 두 서술의 예에서는 적어도 발해가 한국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국가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⁶⁰⁾. 이것은 위의 두 사례뿐만이 아니라 07년

분류	기술 내용	특징
아스카 (飛鳥) 문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 이 문화는 한반도로부터 중국의 남북조시대의 고도의 기술에 뒷받침되는 불교문화가 도입된 것이었다.”	
하쿠호 (白鳳) 문화	“7세기 중엽 건당사가 가져온 初唐文化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불교문화가 꽃을 피웠다 (백봉문화).”	여기서도 건당사의 역할 강조뿐이다. 하지만 실제 이 시기는 건당사보다 신라와의 교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백촌강 전투 이후에는 아예 당과는 관계 단절 상태였음.
덴표 (天平) 문화	“나라시대에는 건당사가 가져온 국제정보와 문물로 인해 국제색이 풍부한 국가불교를 특징으로 하는 천평문화가 평성경을 중심으로 꽃을 피웠다.”	특히 건당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천평 문화를 설명하면서 발해 신라는 아예 언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신라와 일본의 교류 관계는 한 마디도 안 나옴.

- 55) 예를 들어 大町健, 주 52)의 전개 논문, 231-238쪽
- 56) 예를 들어 특히 위의 ㄴ) 新日本史(山川)의 일부 구절에 직접적으로 그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또 同 <3장 율령국가의 전개>(55쪽)에서도 ‘帝國’의 구조를 논하고 있는데, 1절인 <天平時代>에 관한 서술을 <건당사와 제국구조>라는 제목의 설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당을 의식하면서 일본의 고대국가의 구조를 논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서술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됨 → 일본은 8세기 건당사를 파견하여 당과 교류함(건당사의 역할 강조) → 일본도 당과 같은 <帝國構造>를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 → 조공국으로서의 신라와 발해와의 관계를 언급(주변국에 대한 상하관계 강조) → 일본 국내의 에미시, 하야토 집단과의 관계를 언급(국내의 夷狄集團에 대한 복속관계 강조)
- 57) 근현대의 개념인 <제국>을 그대로 고대 일본에 적용하면 마치 근대 이후의 산물인 <대일본제국>의 전신이 고대 단계에 이미 출현하였다는 듯 오해를 하게 할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의 <제국>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위의 교과서는 石母田正의 소위 <동이의 소제국> 논리를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지하듯이 그의 논리는 <제국주의> 개념을 고대에 적용한 것으로서의 <(소)제국>이며 이와는 별도로 황제국의 준말로써 제국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왕왕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이의 소제국을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이러한 소위 소제국 구조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이다. 이것은 일본 고대국가의 한계성과 현실성을 대변하는 것인데 위의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일본국가가 동아시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그 객관적인 평가를 알기 어렵게 될 소지가 크다.
- 58) 이점에 대해서는 윤재운 『한국고대무역사연구』(경인문화사, 2007. <부록-남북국시대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항해 사례(종합)>)를 참고하였다.
- 59)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고대무역사의 전문가인 윤재운 박사로부터 많은 교시를 받았다.
- 60) 위의 신일본사의 경우는 ‘제민족을 통합’한 발해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도 김정본의 모든 일본사 교과서에 공통된 사항이다. 물론 일본사 교과서이므로 그 내용 안에 굳이 발해의 계통관계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방기함으로써 발해에 대한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이 굴절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적어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정도는 명기해주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⁶¹⁾.

한편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당과의 공적인 관계 단절에 관해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과의 단절은 나아가 일본적인 문화(소위 국풍문화)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기술을 보자.

ㄷ) 日本史B(實教)

동아시아 제국에서 큰 변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견당사를 파견할 필요가 퇴색하여 894년 菅原道眞의 건의로 견당사의 파견은 정지되었다. 그 이후 조정은 외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느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일본 상선의 도항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의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교류가 두절된 것은 아니었다. 9세기 이래로 당, 신라의 민간 상선이 종종 대재부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10세기 후반 이후는 송의 민간 상선이 계속해서 내항하여 무역품을 가져왔다. 귀족들은 이것들을 唐物이라 하여 진중하게 여겼다. 또 일본에서 송으로 가는 승려도 있었다. (88쪽)

일본의 문화는 오래 동안 대륙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견당사가 정지되고 당이 멸망하자 대륙문화의 영향이 점차 퇴색하여 10세기에는 종래의 대륙문화를 소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풍토에 맞는 우아하고 섬세한 귀족문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國風文化라고 한다. 국풍문화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가나문자였다. 가나문자는 일본인의 감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89쪽)

위의 기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견당사의 중지가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日本史B(實教)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견당사의 파견 중지가 과연 그렇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기술은 흡사 菅原道眞의 건의가 종래의 견당사 파견 사업 전체에 대한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이해하

61) 2007년 김정본 통과 세계사의 경우를 보면 발해와 당의 책봉관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동경서적의 세계사A와 청수서원의 세계사B)와 고구려인(유민)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명기하는 경우(산천출판사의 신세계사B와 제국서원의 신상세계사B)로 크게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는 발해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 실태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만큼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菅原道眞 자신의 견당사 중지 건의는 그 후 조정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그의 좌천 등 정치적 사건의 발생과 당의 멸망 등으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⁶²⁾. 물론 견당사로 상징되는 對中 외교사절단의 파견이 결과적으로 이후 두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菅原道眞의 건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연구의 도달점인 것이다.

菅原道眞의 견당사 중지 건의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⁶³⁾ 위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사적으로 국풍문화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한 복선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견당사 정지 및 당이 멸망하자 대륙문화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인식은 매우 단선적인 이해이며 문제가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신라와 당 상인의 왕래는 이전의 국가 간 공적 관계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당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일본풍의 문화가 꽃피었다는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이러한 기술 태도의 이면에는 의식적으로 당풍 문화에 대해 일본풍 문화의 성립 즉 다시 말해 중국 문화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립하기 시작하는 일본 민족문화의 성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풍 문화와 일본풍(국풍) 문화를 현재의 방식처럼 대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국풍문화의 시대로 이야기되는 10세기 이후에 당의 문화와 문물의 영향이 과거 이전 시기보다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⁶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교과서 지면에서 진지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⁶⁵⁾. 대부분의 교과서가 당풍문화(弘仁·貞觀文化)에서 국풍문화로 이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⁶⁶⁾ 국풍 속에 내재한 당풍의 존재감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는 並置關係였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⁷⁾.

한편 마지막으로 10세기 동아시아의 변동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언급해 두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술을 보자.

62) 森公章 「菅原道眞と寛平度の遣唐使計劃」(『續日本紀研究』362, 2006)

63) 신라와의 공적 관계 단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은 점과 비하면 견당사의 중지 건의는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07년 검정본 중 신라와의 공적 관계 단절을 언급한 교과서는 한 종도 없다.

64) 榎本淳一 「〈国風文化〉と中国文化」(『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 吉川弘文館, 1992)

65) 적어도 <대륙문화의 영향 감퇴 - 일본의 기존 대륙 문화의 소화 - 일본적 문화의 형성>라는 등식으로 국풍문화의 성립을 이해하는 도식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향후 이러한 기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66)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ㄷ) 高校日本史(山川)
 894년의 菅原道眞의 제안으로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907년 당이 망하자 동아시아는 대변동기에 들어가 발해도 망하고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일어나고 신라가 망하였다. 중국은 이극고 송에 의해 통일되었는데 일본은 송과 고려와는 정식의 국교를 열지 않았다.(54쪽)

ㄹ) 日本史B(三省堂)
 9세기 후반 당은 내란과 토지제도의 해체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여 갔다. 당의 약체화는 주변제국에 영향을 주어, 중국으로부터 자립하는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 발해도 926년에 북방민족인 요(거란)에 멸망당하고 한반도에서도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의해 무너졌다.(54쪽)

위의 사례에서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후삼국 시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견훤의 후백제 건국은 처음부터 기술에서 제외되어 있다⁶⁸⁾. 고려가 일어나고 신라가 망한 것이 물론 틀린 기술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신라와 고려만이 역사의 주역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기술이 가장 적절하다고는

문화	기술내용		비고
高等學校 日本史B (清水書院)	天平文化	“盛唐의 국제적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다.”(40쪽)	<盛唐의 문화 도입 - 晩唐의 문화 도입 - 일본적 문화의 개화>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다.
	弘仁 貞觀 문화	“평안 초기에 晩唐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일본적으로 소화된, 밀교적 색채가 강한 귀족 문화가 일어났다.”(46쪽)	
	국풍 문화	“평안시대 중기에 그 동안 섭취해 온 중국문화를 소화하여, 일본의 풍토와 일본인의 감성에 융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세련된 귀족문화가 개화하였다”(50쪽)	
일본사B (삼성당)	당풍 문화	“9세기가 되자 당은 쇠퇴하기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일본에서는 당풍문화의 영향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것을 弘仁·貞觀文化라고 한다.”(51쪽)	9세기의 흥인·정관문화를 당풍문화라고 명명함으로써 뒤에 국풍문화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부각되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임. 즉 당풍과 국풍을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국풍의 의미가 당풍에 대한 국풍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국풍 문화	“10세기가 되자 당의 문화를 일본의 풍토와 감정에 適合시킨, 귀족을 중심으로 한 세련된 문화가 꽃을 피웠다. 이것을 국풍문화라고 부르고 있다.”(59-60쪽)	

67) 西村さとみ 「唐風文化と国風文化」(『日本の時代史 5 平安京』, 吉川弘文館, 2002)

68) 이것은 예로 든 위의 두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교과서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⁶⁹⁾.

둘째 일본사B(삼성당)의 경우 발해 신라 고려 등의 동향을 “중국으로부터의 자립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실 관계에서 볼 때 신라의 쇠퇴와 고려의 흥기, 나아가 견훤의 후백제 세력의 대두는 당과의 관계를 위요하고 전개된 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과 거리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술을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 마치 한반도의 재통합이 중국으로부터의 자립과 관련이 있는 식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으며 또한 나아가 그 이전의 관계를 중국에 대한 종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4) 연표·지도의 문제

각 교과서에는 설명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페이지 혹은 교과서의 말미에 각종 연표와 지도를 게재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연표의 문제를 살펴보자.

앞서 日本史B(三省堂)의 경우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조의 내용을 그대로 연표에 실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표에는 아래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512년의 사건으로서 소위 임나 4현의 백제 할양을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日本書紀』의 기술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으로서, 더군다나 연표에 이것을 기재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표-4> 일본사 · 세계사 對照年表 (日本史B(三省堂), 383쪽)

年代	政治 · 經濟 · 社會
391	倭人, 渡海하여 백제·신라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다(고구려 광개토왕 비문, 414 건립)
512	大伴金村, 백제의 요구에 의해 伽耶 4縣의 지배를 용인

그런데 이 소위 임나 4현 문제는 각 교과서에 예외 없이 4-6세기의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도 속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⁷⁰⁾. 지도는 연표보다

69) 대륙 정세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요의 건국을 아예 소개하지 않고 당의 멸망 후 중국을 통일한 것은 송이었다는 기술도 문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을 통일한 것이 송이라고 기술한다면 당시 화북 일부를 영유하고 있던 요의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그 상관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70) 교과서의 관련 지도 게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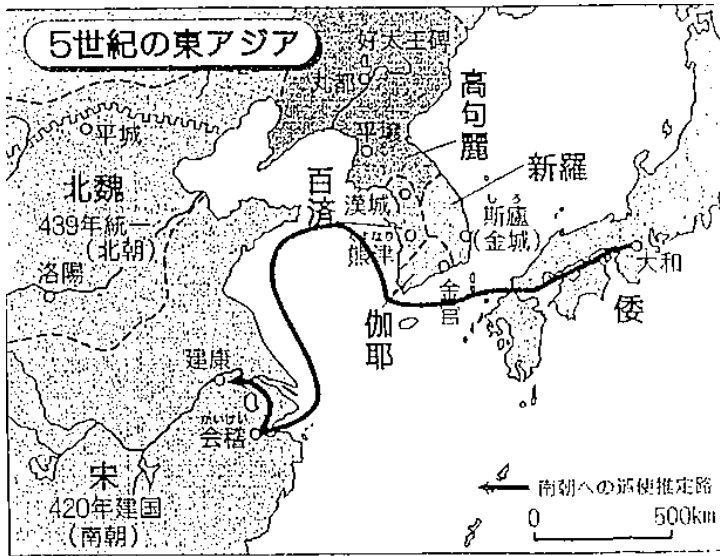
시각적인 효과가 월등하다. 따라서 지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표와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지도는 高等學校 日本史B(清水書院)와 日本史B(三省堂)에 게재된 것인데 타 교과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지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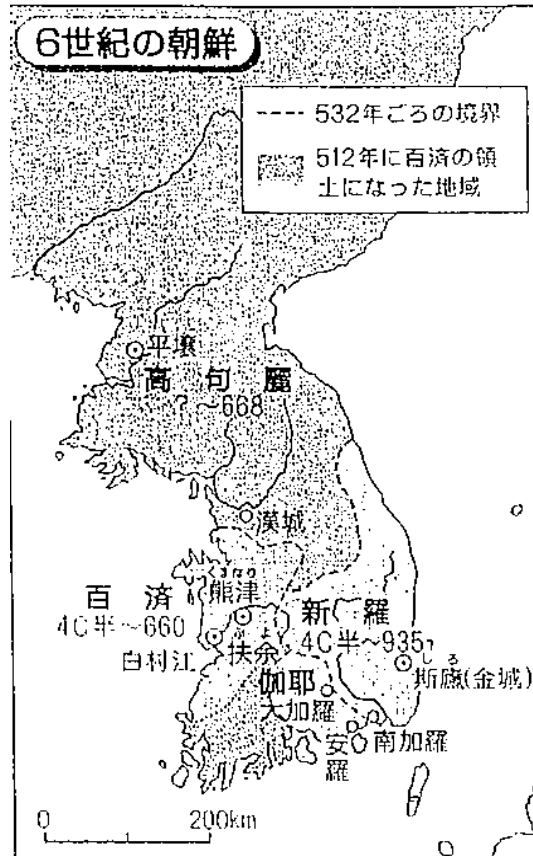


<그림-1 高等學校 日本史B(清水書院), 26쪽>

新日本史(山川) 29, 33쪽. 高校日本史(山川) 21, 26쪽. 高校日本史B(實教出版) 22, 28쪽.
日本史B(實教出版) 44, 54쪽. 高等學校 日本史B(清水書院) 26쪽. 日本史B(三省堂) 18, 24쪽



<그림-2 日本史B(三省堂), 18쪽>



<그림-3> 日本史B(三省堂), 24쪽

우선 눈에 띄는 것은 4-5세기 무렵까지 가야(임나)의 영역이 상당히 크게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도 가야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 경상남도 일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대략 과거의 가야 諸國 전체의 범위였다는 우리의 통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물론 오늘날 전북 남원 임실 등지도 가야의 일부였다는 견해가 한국에서도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⁷¹⁾, 전북의 상당 부분과 전남의 대부분 지역이 모두 가야였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전라도 일원이 가야였다고 보는 근거는 다름 아닌 이 지역이 바로 ‘임나 4현’ 지역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의 지도가 나타내는 것은 5세기까지는 전라도 지역이 모두 가야였는데 6세기 초 이들 지역을 백제에게 할양해 주었기 때문에 가야의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위 임나 4현의 지명들이 현재 분명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며⁷²⁾ 더군다나 전라도 영역까지 가야였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도 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위와 같은 지도는 이미 과거에도 줄곧 교과서에 게재되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로서 저명한 『詳說 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 1965년 초판, 1971년 개정판)에 실린 지도(아래)를 보면 위의 지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⁷³⁾. 임나 4현 자체의 위치 비정이 명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임나 4현설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1) 김태식 「5세기 후반 대가야의 발전에 대한 연구」(『한국사론』 12, 1985)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72) 임나=가야는 舊 변한 계통이며 舊 진한 계통은 신라로, 舊 마한 계통은 백제로 각각 통합되어 갔다는 것이 통설이며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전라도 일원은 과거 마한 계통의 영역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임나 4현=전라도 소재였다는 견해도 뿌리깊게 남아 있으며 근래 전남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방후원분의 분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남 지역이 『宋書』에 보이는 5세기 왜왕들의 자칭 군사호에 등장하는 ‘馬韓諸軍事’ 호칭의 마한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전남 지역의 고대사는 이 지역이 백제로 편입되는 시기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편입 이전의 전남 지역의 명칭에 대해서는 마한설과 임나설이 있는 셈이다. 참고로 전라도=가야설은 3세기 단계의 변한의 영역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교과서(高校日本史(山川) 19쪽, 高校日本史B(實教出版) 18쪽, 日本史B(實教出版) 42쪽)에는 3세기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도를 제시하면서 현재 전남의 일부 지역까지 변한 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73) 『詳說 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 1998년)은 집필자의 교체에 따른 일종의 신판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도 가야의 영역에 대한 지도 표시(34, 45쪽)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게재되어 있다.



<그림-4> 『詳説 日本史研究』, 38쪽



<그림-5> 『詳説 日本史研究』, 50쪽

한편 高校日本史(山川)에는 제1부 <원시·고대>의 도입 부분에 원시-고대에 걸친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표를 작성하여 놓았다. 그런데 아래의 연표<표-5>를 보면 금방 알겠지만, 특히 한국의 원시-고대에 대하여 역시 오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한국사의 경우 삼국 이전 시기의 역사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예컨대 한국 고대사의 중요 영역인 위만조선, 부여 등도 없고 삼한도 없다. 다시 말해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아예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삼국의 성립 시기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연표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개시는 서기 300년 무렵에 라인이 맞추어져 있다. 이 도표만 보면 한국의 역사는 일본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심각한 역사 왜곡과 오해를 줄 수 있는 역사도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인접국의 역사까지 상세하게 기술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할 작정이라면 적어도 오해는 일어나지 않게 정확하게는 기술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 통일기의 신라와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발해는 아예 한국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실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발해를 한국사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아래의 연표에서는 발해가 완벽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표-5> 원시 · 고대사 연표

서력	시기		중요사항	조선	중국
	정치	문화			
		구석기			
	繩文 \	繩文			
	彌生				秦 前漢 新
BC AD		彌生			
100					後漢
200					三國
300	\				
400	古墳	古墳	(생략)	三國	西晉 東晉
500				^ 高句麗 百濟 新羅	南北朝
600		飛鳥		v	隋
700	- 奈良	白鳳 天平			唐
800	-	弘仁		新羅	
900	平安	貞觀 國風			五代

4. 맺음말

전체적으로 2007년도 검정본 일본 역사교과서는 대개 2003년도의 기술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각 교과서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본고대사의 전체 설명 구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 혹은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가를 유의하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교과서에는 연표와 지도 등에서 부정확한 기재를 포함하여 여전히 한반도와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인 것은 7세기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 과정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한반도 관련 기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다가 8세기 이후에는 중국 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8세기 이후의 대신라·발해 관계가 지나치게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당과의 관계는 국가 구조의 문제에서 문화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게중심의 이동은 현재 일본 고대사의 일반적인 인식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항목 중심으로 검토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각 교과서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으며 또한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없어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친 감이 있으며 근거가 되는 사료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모두 나중의 과제로 남겨둔다. 그리고 2003년도 검정본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전 연구와의 대비 없이 오로지 2007년도 검정 통과본의 자체 내용만을 검토하였음을 밝혀둔다. 내용상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이전의 검정본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각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허 동 현(경희대학교)

1. 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은 계속되는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있어 너무도 대조적이다. 침략의 역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참회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1955년 평화헌법 개정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후 우익진영의 교과서 공격의 포화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으며, 냉전 붕괴이후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려는 우익과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¹⁾ 특히 일본의 우익들은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일본 정통 역사학계의 실증적·성찰적 역사연구를 “동경재판사관의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며 이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일본근대사 인식을 내세우며 학계의 전통적·정통적 역사해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였다.²⁾ 1993년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가 결성되고 1995년에는 “자유주의사관 연구회”가 등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 약칭)이 결성되었다. “새역모”가 만든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검정을 통과한 데서 알수 있듯이, 일본우익이 주도하는 역사수정주의의 도전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³⁾ 일례로 2005년 1월 “새역모”의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전 회장은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남경대학살 등 학문적으로 근거 없는 ‘날조’된 사실들이 역사교과서나 공민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고 주

-
- 1) 이에 관한 한국학계의 비판은 다음을 참조. 정재정,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관련 서술의 변화-동경서적 간행 신구교과서의 대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69(2003), pp.171~222 ; 박찬승,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 후소샤판 교과서의 “전쟁” “식민지”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2005), pp.275~310 ; 한철호,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역사인식」, 같은 책, pp.243~274 ; 박수철,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논리와 천황관」, 『역사학연구』 26(2006), pp.183~218 ; 柳鏞泰, 「日本 歴史教科書の 동아시아 인식 : 脫亞觀念의 지속과 변화」, 『역사교육』 98(2006), pp.101~132.
 - 2)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岩崎 稔, 「歴史修正主義 : 1990年代以後の位相」, 倉澤愛子 等編, 『なぜ、いまアジア・太平洋戦争か :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1』 (岩波書店, 2005), pp.357~392 참조.
 - 3) 줄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샤 판) 문제의 배경과 특징 :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한국사연구』 129(2005), pp.155~156.

장한 바 있으며,⁴⁾ 최근 오키나와 집단자결 사건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삭제 지시도 2005년 5월 일본군이 주민을 강제로 자결하도록 강요한 집단 자결사건의 실체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⁵⁾ 또한 “새역모”는 출판사를 후소샤(扶桑社)에서 자유샤(自由社)로 바꿨지만, 2008년 4월 문부과학성에 2010~2011학년도 중학교에서 사용할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개정3판에 대한 검정신청을 내었으며, 이 책은 현재 검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검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⁶⁾ 이들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본정부에 의해 추동되는 교과서 공격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31-1945)”에 범한 남경대학살·종군위안부·강제연행·집단지결 강요 등과 같은 전쟁범죄와 침략행위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이 시기의 침략전쟁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하는가하는 문제는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군국 일본의 침략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직결된다.

특히 2006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올랐던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재임 중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내세우며 평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새역모”에 가까운 역사관을 견지해 도쿄전범재판을 비판함으로써 우파 세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⁷⁾ 2007년 9월 아베 정권이 물러나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이 들어섰지만, 2006년 12월 15일 이미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의 걸림돌이었던 교육기본법과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0년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⁸⁾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의 우경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역사교과서 등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한 국가권력의 역사기억에 대한 신화화와 독점화 기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군국주의 교육을 이끈 천황의 “교육칙어”를 대체해 전후 일본 교육에서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의 육성”을 모토로 내세워 국가주의 교육의 대두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애국심 함양”이란 미명하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개인보다는 공익을 중시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⁹⁾ 교육기본법의 개정

4) 八木秀次, 「年頭に 당하여 일본의 자웅을 결정할 해 전쟁의 일각을 담당한다」, 『史』48, 2005년 1월호, 君島和彦, 앞의 글, p.295 재인용.

5) 岩崎 稔, 앞의 글, p.357.

6) 조홍민, 「日 ‘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 『경향신문』, 2008년 4월 23일자.

7) 아베정권 하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관해서는 李信澈,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일 역사논쟁 :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40(2007), pp.224~247 참조.

8) 다카하시 데쓰야, “아베퇴진과 일본의 우경화”, 『한겨레』2007년 9월 17일자.

9) 교육기본법 개정의 목적은 군대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즉 애국하는

교육 현장과 교사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으며, 2007년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과학성이 일본군이 오키나와주민의 집단자결을 강제한 사건을 삭제토록 지시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국가권력이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자율 규제”나 “자발적 수정”이라는 미명아래 시민의 역사기억을 왜곡하고 통제하려는 경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여기에 더해 교과서에 침략의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는데 있어 안전판 역할을 해 온 1982년에 만들어진 “근린제국조항”을 “새역모”와 “교과서개선연락협의회”가 집요하게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우경화와 역사왜곡 기도에 대해 2007년 4월 미국의회에서 2차 대전 중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고,¹⁰⁾ 같은 해 9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며 역사바로잡기에 나선 오키나와 주민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¹¹⁾ 최근 몇 년 일본의 역사왜곡을 둘러싸고 국제전과 내전의 포연이 가득한 이유는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결과할 미래상에 대해 일본과 세계의 시민사회가 품는 우려 때문이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왜 독일과 달리 역사 왜곡세력의 움직임이 그 관성(*momentum*)을 잃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냉전 붕괴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동이나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식의 확산 등 1990년대 이래의 우경화 추세에서 찾는 것은 현상만보고 본질을 못 보는 격이다. 그 주된 이유는 독일에서는 전범세력이 아직도 추적·처벌되고 있지만, 전후 일본에서는 세계를 향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세력의 청산되지 않고 지배세력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¹²⁾ 이들에게 패전 이전 제국 일본에 대한 기억은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이지 반성해야 역사가 아닌 것이다. 냉전 붕괴 이후 “새역모”에 의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일과성(一過性)의 사건이 아니다. 이

젊은이들의 욕성이 제일 큰 목표이다. 君島和彦,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최근 일본의 정황」, 『역사교육』93(2005), p.288.

10) 2007년 4월에 나온 미 의회 조사국의 “일본군 위안부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완역본을 볼 수 있다. http://www.historyfoundation.or.kr/Inform/InformView.asp?p_gubun=hotissue&FIELD=&KEY=&PAGE=2&IDX=715

11) 오키나와 주민의 역사바로잡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재정, “일본의 역사내전”, 『조선일보』, 2007년 10월 3일자; 연민수, “오키나와 주민의 역사바로잡기”, 『한겨레』, 2007년 10월 12일자.

12) 역사교육에 있어 독일이 이웃나라와 과거사 청산에 기울인 노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유경,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비평』 59(2002), pp.363~385; 한운석,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일·폴란드간의 화해노력」, 『서양사론』 75(2003), pp.203~236.

는 1955년 평화헌법의 개헌을 당현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침략의 과거사 기술에 불만을 품은 우익진영의 기획에 의해 꾸준히 추동(推動)되는 계기적(繼起的) 사건으로 자국사를 신성화함으로써 타국사에 대한 일반적·보편적 시각을 왜곡해 온 메이지 이래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왜곡사태의 이면에는 냉전의 해체와 같은 전후 세계질서의 변동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 요소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

메이지 유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신성시·절대시하고 그 진리성과 표준성을 믿는 전통이 강했다. 역사교과서도 국가권력의 공교육을 통한 국민 동원과 교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민족중심주의와 집단주의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특히 문부성은 천황·민족·국가를 하나로 묶은 “일본”이란 가치를 절대화하고 이를 손상시키려는 모든 움직임을 억누르는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검정제도를 통해 침략의 과거사를 감추는 역사관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에는 여전히 역사교육을 국민교화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이 살아 숨 쉰다. 후소샤 역사 교과서도 메이지 이래의 천황 중심 사관과 1930년대 황국사관 같은 초국가적 전체주의를 강제한 패전 이전의 역사교육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은 국가주의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맹목적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1872년 프랑스 교육제도에 미국의 교육사상을 가미해 만든 근대적 ‘학제’는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교과서의 자유 발행과 채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0년초 입헌정체 수립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격화되자 일본정부는 1880~83년간에 운동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92종의 교과서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국가 통제 하에 교과서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1886)와 “교육칙어(敎育勅語)”(1890)를 통해 교과서를 통한 국민의 사상통제가 본격화되었다. 교육칙어는 “대일본제국헌법”(1889)에 규정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천황대권(天皇大權)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천황에의 충성을 강요하는 ‘국민도덕의 최고 경전’으로 추앙됨으로써 국수주의를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초등 역사 교과서는 1903년 국정이 된 이래 패전까지 총 6종의 교과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개정·편찬의 역사는 군국주의 침략사와 맞물려 전개되어 나간 것이었다. 1900년대의 『소학일본역사(小學日本歷史)』는 러일전쟁 개전을 앞두고 국민통합의 선창에,

1910년대의 『심상소학일본역사(尋常小學日本歷史)』는 러일전쟁의 승리와 한국병합의 예찬에, 1920년대의 『심상소학국사』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교육정책의 강화에, 1930년대의 『심상소학국사』와 『소학국사심상과용(小學國史尋常科用)』은 각각 만주침략 이후 황국사관에 의한 “국체명징(國體明徵)”의 강조와 중일전쟁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집단 최면에, 그리고 패전직전의 『초등과국사(初等科國史)』는 전시 비상체제하 학생들에게 광신적 황국사관을 불어넣기에 초점이 두어졌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역사교육은 황국사관에 입각한 초국가주의를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이나 한반도 흥기론 등과 같은 왜곡된 한국사상(韓國史像)을 일본 국민의 의식과 기억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다.¹³⁾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세계질서의 변동에 따른 내전과 국제전의 이중주

패전 이후의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재벌의 해체와 육·해군성 폐지(1945)를 단행하고, 천황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제정(1946)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전쟁에 책임이 있는 천황을 포함한 전범세력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의 지배세력이 다시 집권할 여지를 남겼다. 군국주의 청산은 미흡했지만 역사교육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31일에 발표한 「修身, 日本歷史 및 地理 停止에 관한 건」에 의해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역사교육이 중단되고 인간의 존엄, 기회의 균등 및 정치·경제·사회 제 방면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초등 『くにのあゆみ(국가의 발자취)』, 중등 『日本の歴史』, 그리고 사범학교용 『日本歷史』를 발간했다.¹⁴⁾ 『くにのあゆみ』는 1947년 검정제가 채택되면서 사라졌지만, 1948년 “교과용 도서위원회”의 발족 이후 1955년까지 일본교직원조합이 지지하는 연구자와 지식인들에 의해 잇달아 민주적인 교과서가 출간되었다.¹⁵⁾

미국이 택한 원래의 일본 점령정책은 군정을 통한 직접 지배였지만, 점령 직후 천황을 포함한 일본의 기존 통치기구를 통한 간접지배로 정책을 바꾸었다. 당시 미국은 천황을 축으로 삼아 일본을 보수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로 유지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일

13) 줄고,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 管見 —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경기사학』5(2001), pp.43~57.

14) 家永三郎, 「戦後の歴史教育」, 『(岩波講座)日本歴史』22, pp.313~318.

15) 윤건차 저, 정도영 역, 앞의 책, p.135 ; 이충호, 앞의 글, pp.114~129.

본 국민들이 이러한 지배질서 온존정책에 저항할 경우 “일본국민 자신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한다. 그러나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민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정세의 변화, 1947년 들어 중국 국민당이 공산주의자에게 그 기반을 잠식당하자, 1948년 11월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쪽으로 점령정책을 전환하였다.¹⁶⁾

1940년대 후반 이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본전략은 미국에 종속적인 일본의 공업화와 일본의 원조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한국은 일본 방위를 위한 반공완충국으로 만들고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반공의 보루로 기능하게 하는 지역통합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본을 한국 보다 우위에 두는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은 19세기 이래의 뿌리 깊은 한국에 대한 미·일 양국이 공유하는 경멸감에서 기인한다. 일본 패전 이후에도 한국인을 해방된 민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저한 미국은 일본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재발시켰다.¹⁷⁾ 1947년 3월만 해도 미국은 한국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평화조약에 서명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4년 뒤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은 일본과 영국의 반대로 참석할 수 없었다.¹⁸⁾ 왜냐하면 1948년 11월 대한민국이 세워진지 3달 뒤에 “역코스(reverse course)”로 알려진 점령정책의 전환에 따라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군사동맹이자 우방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특히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다음해 6·25전쟁이 터지자 역코스는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反)공산권을 위한 “무기고” 내지 한미군사동맹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령정책의 전환은 일본 중화학 공업시설을 철거해서 군국 일본의 침략 피해국에 배상하게 한다는 배상정책의 수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¹⁹⁾ 일본은 더 이상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패전국이 아니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6.25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1955년 평화헌법 개정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후 힘을 얻은 우익진영의 교과서 공격의 포화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civil war)”이 시작되었다. 자민당은 미국의

16) 전후개혁을 되돌리려는 1940년대말에 시작된 군국주의의 부활현상 즉 “역코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宮 地正人, 『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日本通史Ⅲ』(山川出版社, 1987), 342~345; 吉田 裕 편, 『戰後改革と逆コース：日本の時代史 26』(吉川弘文館, 2004), pp.21~85;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저, 김우영 역, 『현대일본의 역사(A Modern History of Japan)』(이산, 2005), pp.422~432; 하버트 p.빅스, 「지역통합전략: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 김성환 등, 『1960년대』(거름, 1984), pp.208~229; 6·3동지회, 앞의 책, pp.52~53 참조.

17) 하버트 p.빅스, 위의 글, pp.208~209.

18) 다카사키 소우지 저, 김영진 역, 『검증 한일회담』(청수서원, 1998), pp.18, 21.

19) 하버트 p.빅스, 앞의 글, pp.215~217; 吉田 裕 편, 앞의 책, pp.35~39.

목인 하에 자위대라는 미명하에 재무장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범세력과 그 뿌리를 같이하는 전후의 집권세력은 마치 형상기억합금처럼 미군정에 의해 구부러지기 전 일본의 원형-전전의 군국주의체제-으로 돌아가려는 기지개를 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집권하자 재군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우익 진영은 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문제 삼는 “1차 교과서 공격”에 착수했다. 당시 문부성은 일본교직원조합 및 진보적 연구자와 지식인을 공격하고 모든 역사교과서를 불합격 처리하면서 “교과서 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검정을 강화함으로써 이후 교과서에서 일본의 가해 사실 등에 대한 기술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한 반격의 포화는 2001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도쿄 교육대 교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문부성 검정이 부당하다며 검정 불합격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두 차례의 소송을 65년과 67년 제기하였으며, 이 ‘이에나가 소송’을 계기로 성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시민사회가 역사의 기억을 왜곡하려는 왜곡세력들에 대한 저항에 나섰다. 이 때 교사와 학부모·시민·연구자·문화인·출판노조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역사 왜곡 시정 등을 위한 반격이 전국적으로 전개됐고, 그 결과가 “검정 불합격 처분 취소”라는 승소 판결(1970년)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권 자민당 등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며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우익 세력에 대한 이에나가라는 한 지식인의 용기 있는 저항은 성장하는 시민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가 소송과 1972년 중·일 국교 회복의 결과 난징(南京)학살 사건 등 일본의 가해사실을 부각시킨 기술이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왜곡세력들은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우익의 “2차 교과서 공격”은 이에 동조한 문부성이 “침략”을 “진출”로 고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982년의 교과서 파동이라는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이에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은 한국과 중국 등 침략의 기억을 공유한 이웃나라들과의 국제전으로 비화하였으며, 이 전쟁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한 일본정부가 “근린제국 조항”이라는 정치·외교적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일단 “종식”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기억을 왜곡하려는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65년에서 1997년까지 32년간 3차례에 걸친 교과서 소송의 역사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일본에서 밀로부터의 힘에 의한 전전(戰前)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데 있다. 근대 이후 일본은 천황제 국가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해 군국주의 세력을 내부의 동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군부와 재벌을 해체해 군국주

의의 독아(毒牙)를 뽑은 것은 미군정이란 외세의 힘이였다. 그러나 이에나가의 교과서 소송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우경화에 맞선 역사적 사건으로 냉전 붕괴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과거회귀 세력에 맞서 밑으로부터의 제기된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역사 발전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전에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와 군국주의에 동원되어 무모한 침략전쟁에 희생되었던 일본의 시민사회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공존의 희망을 품게 해준데 있다. 일본과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로서 공통의 역사기억을 갖고 있다. 이에 나가의 교과서 소송은 이러한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갖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에 대한 품고 있는 공통의 역사기억을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아시아 지역 공동체로 가는 강물에 놓기 시작한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이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내전과 국제전이 병행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 정치권에서 견제세력이 사라지자 왜곡세력들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1993)와 “자유주의사관 연구회”(1995) 발족을 계기로 국내외에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도발하였다. 1997년 우익진영은 “중군위안부” 기술 삭제를 구실로 세워진 “새역모”가 만든 후소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3차 교과서 공격”을 펼쳤다. 2005년 두 번째로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는 “4차 교과서 공격”이라 할 수 있으며, “새역모”가 2008년 4월 지유사로 출판사를 바꿔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정 3판에 대한 검정을 신청한 것은 “제5차 교과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1982년과 1986년의 역사교과서 왜곡기도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좌절되고 2001년 후소샤 교과서가 일본 시민단체의 저지 운동의 결과 극히 저조한 채택률을 보였으며, 2005년에도 한·일 두 나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한·중 두 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항의가 지속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내전을 넘어선 국제전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역사기억을 둘러싼 전쟁은 2007년 4월 미국의 회에서 2차대전 중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9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며 역사바로잡기에 나선 오키나와 주민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일본의 역사왜곡을 둘러싸고 국제전과 내전의 포연이 가득한 이유는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결과할 미래상에 대해 일본과 세계의 시민사회가 품는 우려 때문이다.²⁰⁾

20) 줄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와 교과서 재판의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2006, pp.69~85.

4. 2004년 검정통과 후소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1) 균형감각의 결여된 자민족 우월주의

2001년에 이어 2005년에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여전히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일그러지고 비틀린 서술이 넘친다. 첫째, 이 책은 유사 이래 일본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책갈피 이곳저곳에서 일본의 독자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의 종속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치졸함이 묻어난다. 예컨대 한국은 고대에 임나일본부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직접 지배를 받거나, 역대왕조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었지만, 일본은 중국의 천자와 어깨를 겨루는 천황이 다스리는 독립국이었으니 일본이 한수 위라는 식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 대한 서술과 달리 서양 특히 미국과 영국에 대해 강한 국력과 앞선 문화를 가진 따라 배워야 할 문명국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도 배어 나온다. 이 책은 일관되게 “일본과 서양은 있다”와 “한국과 동양은 없다”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서술을 함으로써 한국이 독자 문화 생산 능력과 자치능력이 결여된 이질적이며 마땅히 멸시해야할 존재라는 부정적 관념을 갖게 한다.

셋째, 이 책은 “유럽인도 겁내며 몽골인을 두려워하였다…2회 모두 원군은 후에 ‘가미카제(신풍)’으로 불리는 폭풍우에 시달리며 패퇴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독립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해 유럽을 떨게 한 몽고조차도 일본을 점령하지 못했으며, “근대국가로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색인종의 나라 일본이, 당시 세계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이겼다”고 해 유색인종 국가로는 유일무이하게 백인종 국가인 러시아와 겨뤄 열강의 대열에 들어간 강대국이니 자긍심을 가지라고 속삭인다. 또 일본은 현존 목조건축으로 가장 오래된 호류지(法隆寺), 가장 큰 목조건축과 부처인 토다이지(東大寺)의 다이부츠덴(大佛殿)와 다이부츠(大佛), 인구 100만의 18세기초 세계 최대의 도시 에도(東京), 그리고 고히도 모방한 “우키요에(浮世繪)”라는 화풍을 뽐낼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의 앞선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다리 역할만 했지 이렇다 할 문화가 없다는 서술을 산견할 수 있다.

넷째, 이 책은 일본 인근의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더불어 살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거나 존중할 만한 것이 없는 열등한 존재로 묘사한다. 서양을 제외하고 더불어 살기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대목은 메이지초 일본에 왔다 조난당한 터키 군함의 생존자를 구조한 일과 1985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터키가 테헤란 공항에 비행기를 보내 일본인의 귀환을 도운 일을 대응시켜 “은혜 갚기”라는 표현으로 소

개한 것 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을 자랑하고 그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자와 종속,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 진보와 정체, 우군과 적군이라는 균형감이 결여된 도식적 이항대립의 수사법을 남용하고 있다.

(2) 침략의 과거사 부정과 전체주의 찬양

첫째, 이 책은 전쟁을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이자, 국력 향상의 지름길로 예찬한다. 왜냐하면 군대 보유와 전쟁을 합법화 해주는 개헌을 꿈꾸며, 일본시민들이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전쟁을 혐오하지 않도록 침략의 과거사를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제국의 복원을 위해 목숨을 바칠 군인으로 일본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교과서에 거짓을 적는 것이다. 예컨대 왜구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연합세력인 것처럼 서술하여 일본사의 영광에 배치되는 해적행위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한반도가 적대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자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한반도 흥기론”을 되풀이 하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같은 명백한 침략전쟁을 방어전쟁으로 호도한다.

둘째, 일본은 한국 근대화의 옹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침략자였다. 그러나 정한론과 운양호사건의 침략성과 식민지 지배의 약탈성을 은폐하고 한국의 근대화를 도운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다. 또한 군대 위안부의 존재를 기술하지 않거나 징병·징용의 강제성과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범죄에 눈감는 것도 여전하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침략자 노릇을 한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허나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이 책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 책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침략전쟁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러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은 러시아나 미국 같은 백인종 제국주의에 맞서 황인종의 공동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자,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는 복음이었다는 식이다.

셋째, 독일·이탈리아·소련의 과시즘을 전체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성찰은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는다. 나치와 스탈린의 학살은 지적하지만, 일본이 저지른 남경학살이나 군대 위안부와 같은 만행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경재판에서 전범자로 처벌된 이들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쇼와 천황을 국민과 함께 한 애국자로 미화하거나,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의 난민 박해를 과장함으로써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한다.

한 마디로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자궁과잉과 성찰결여로 요약된다. 진정한 자

공은 과오에 대한 성찰이 동반할 때 가능한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자화자찬은 이웃의 존중과 인정을 얻어낼 수 없는 법이다. 성찰이 결여된 과거사 학습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그 악영향이 인접국과 세계에도 미친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국민국가의 국민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체로서 그 수록 내용 여하에 따라 국민 의식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강조하고 타자·타민족과의 더불어 살기를 전파하는 교과서와 국가와 민족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민족사로 미화하는 교과서가 결과할 미래상은 판연히 다를 것이다. 성찰이 결여된 과거사 학습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그 악영향이 인접국과 세계에도 미치기 때문에 역사왜곡문제는 그 나라의 지성이나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과 연대를 꾀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이다. 이제 역사교과서 등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한 우익과 국가권력의 역사기억에 대한 신화화와 독점화 기도를 막는 것은 일본 내 왜곡세력과 시민단체 사이의 싸움인 ‘내전’ 넘어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제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²¹⁾

5. 2007년도 검정통과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문제점

이 장에서 분석하려는 2007년도 검정합격본은 근현대사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일본사 A"는 東京書籍(日A 011)·三省堂(日A 012)·山川出版社(日A 013)·第一學習社(日A 014) 4종, 그리고 전시대를 망라하는 통사격인 "일본사 B"는 實教出版(日B 013 : 고교일본사)·實教出版(日B 014 : 일본사)·三省堂(日B 015)·清水書院(日B 016)·山川出版社(日B 017 : 고교일본사)·山川出版社(日B 018 : 신일본사) 6종이다.

역사용어에는 역사적 평가가 담겨있다. 1945년 8월 패전에 이르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지칭하는 역사용어는 전쟁이 치러진 동시대에는 “대동아전쟁”으로, 패전 후에는 “태평양전쟁”과 “15년전쟁”으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바뀌어 왔다. “대동아전쟁”이라 부를 때는 영·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대동아 공영권”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려는 방어 전쟁이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15년전쟁”이란 명칭에는 1931년 9월의 “滿洲事變”과 1937년 7월의 “中日戰爭”의 전면화

21) 줄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샤 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 :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한국사연구』129, 2005.

과정도 포함해 패전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을 성찰 하려는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중군위안부” 출신 아시아 여성들이 일본의 전쟁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하자 1950년대 이래의 전쟁책임에 대한 연구, 즉 15년 전쟁사 연구가 “정부와 군부의 관계, 천황의 역할, 그리고 천황제의 성격” 구명에만 매달려 전쟁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아시아인의 시점을 결여한 일본 일국사적 차원의 접근에 불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역사학계에서 침략전쟁과 제국 지배의 영향과 흔적이 전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며, 전쟁경험도 일본인만이 아닌 아시아인과 세계인에 미친다는 역사인식이 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사라는 일국사의 시공간을 넘어서는 제국과 식민지주의의 관점을 반영한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역사용어가 통용 되고 있다.²²⁾

반면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본정부에 의해 추동되는 교과서 공격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31-1945)”에 범한 남경대학살·중군위안부·강제연행·집단지결 강요 등과 같은 전쟁범죄와 침략행위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즉 일본의 정통적·성찰적인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해석과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등 역사수정주의 쪽의 주장이 마주치는 쟁점은 황민화 정책과 중군위안부의 동원이 “강제”였는지 여부이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강제”를 지시한 공적 문서의 유무 여부 검증에 집착하는 반면 정통학계의 비판은 식민지 사람들이 황민화정책에 응하거나 “중군위안부”에 동원된 것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자유지사”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7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10종에 보이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한국 관련 서술 내용에 보이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정통적·성찰적인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해석과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등 역사수정주의 쪽의 주장이 마주치는 쟁점은 황민화 정책과 중군위안부의 동원이 “강제”였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따라서 교과서 서술이 성찰적인지 아닌지 여부도 황민화 정책의 강제성과 “중군위안부”의 동원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얼마나 적확하게 기술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2007년 문부과학성의 검정 합격본 고등학교일본사 10종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31~1945)” 한국 관련 서술, 특히 일본학계의 정통적·성찰적 역사해석과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서술

22) 成田龍一·吉田裕, 「まえがき」, 倉澤愛子 等編, 『앞의 책』, pp.vii~xi 참조. 이러한 성찰적 입장에 선 역사학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는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1~8(岩波書店, 2005)에 집적되어 있다.

을 검토한 결과 실교출판의 『고교일본사 B』(日 B 013)의 경우와 같이 “종군위안부”의 동원과 운영에 일본군의 직접적인 간여를 적시하고 황민화정책의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 다른 9종의 교과서들의 경우 기술 내용의 다이나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황민화 정책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의 경우 그 동원과 운영에 국가나 군대의 개입에 대해 서술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고, 그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서술 보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구사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산천출판사의 『일본사 A』(日A 013)의 경우 “자유의지”로 “종군위안부”가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큰 표현을 구사한 경우도 있으며, 산천출판사의 『고교일본사B』(日B 017)와 실교출판의 『일본사 B』(日 B 014) 같이 아예 그 존재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다.

셋째, 실교출판의 『고교일본사 B』(日 B 013)의 경우와 같이 일본 학계의 정통적·성찰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교과서도 있다. 그러나 황민화 정책의 강제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식민지 공업화에 대해서도 당시 조선에 건너와 살았던 일본인 소녀의 삶의 질이 본국에서보다 상승한 것이 식민지 사람들의 희생에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한 東京書籍(日A 011)판 교과서도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학설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의식해 “종군위안부”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는 그 강제성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회피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수정주의의 압력과 검정의 칼날을 의식해 침략전쟁의 본질과 황민화정책의 강제성, 그리고 “종군위안부”에의 국가 개입 등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천출판사의 『일본사 A』(日A 013)나 삼성당의 『일본사 B』(日 B 014)와 같이 식민지근대화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식민지 지배의 혜택을 기술한 경우도 산견된다.²³⁾

6.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대 이후 일본은 천황제 국가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해 군국주의 세력을 내부의 동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군부와 재벌을 해체해 군국주의의 이빨과 발톱을 뽑은 것은 미군정이란 외세의 힘이 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와 6·25전쟁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수정되면서 전전의 지배세력의 후예 자민당이 집권하고 자위대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침략

23) 줄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국관련 서술」, “한일관계사학회 하계워크숍 : 2008년도 일본역사교과서 서술과 문제점”(2008.07.05)

의 과거사를 분식하려는 왜곡세력의 교과서 공격도 시작되었다. 특히 냉전 해체이후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미국이라는 바깥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벌일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길을 가려는 일본의 주류집단은 전쟁을 혐오하는 일본시민의 역사 기억을 조작해 전쟁에 대한 혐오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침략의 과거사 기술 내용을 왜곡하려 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통 역사학계의 침략전쟁에 대한 성찰적 연구를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으며, 교과서에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있어 준거가 되어 온 “근린제국조항”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공세를 막는 관건이다. 특히 2006년 12월 국가주의 교육의 대두를 막는 안전관 역할을 해 온 교육기본법이 개정되고, 침략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기술하는데 준거가 되어 온 “근린제국조항”에 대한 우익의 철폐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자율규제”나 “자발적 수정”이라는 미명하에 역사기억에 대한 통제를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교과서에 침략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 내용은 점점 더 이를 은폐하는 쪽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 우익과 일본의 국가권력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자학”이라고 매도하면서 역사의 기억에 분칠을 하려할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한 세력의 적자(嫡子)로서 제국 일본의 옛 판도와 영화를 되찾고 싶어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60년전 제국 일본의 꿈을 무산시킨 미국은 이제 그들의 재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 일본사회의 역코스는 그 관성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만든 후소샤 관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에 합격해 일부 학교에서의 채택되었으며, 다른 검정 교과서에서 침략행위에 대한 기술의 수위도 후퇴하였다. 또한 최근 각급 학교에서 일장기(日の丸) 게양과 기미가요(君が代) 제창의 강제, 평화헌법 개헌 기도, 그리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전(戰前)으로 돌아가려는 극우세력에 맞서 타자타민족과 더불어 살기를 꿈꾸는 시민사회 사이에 내전이 한창이다. 이러한 과거 회귀에 제동을 거는 힘은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공통의 역사기억을 갖는 일본 시민사회와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에서 나온다.

지금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에나가 교과서재판을 계승한 다카시마(高嶋) 교과서재판이 진행 중이고, 교과서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거나, 평화학습을 위한 전쟁 유적 보존에 노력하는 전쟁유적보존전국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처럼 각성된 개별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연대만이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국의 지배를 깰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이다. 이미 한·일 두 나라 시민사회는

2001년과 2005년 역사 기억을 둘러싸고 국제전과 내전이 벌어졌을 때 역사 왜곡세력에 맞서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경험이 있다. 두 차례에 걸쳐 후소야 교과서 채택을 저지한 일본 풀뿌리 시민사회의 저력을 보며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에 희망을 품는다.

끝으로 남의 잘못을 나무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결함을 살펴야 하는 법. 반면교사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싸우는 일본 시민사회 내부 양심세력들의 고투를 보면서 우리도 국사교과서를 반성적·비관적 입장에서 성찰해야만 함을 절감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타자와의 공존을 지향한다면, 지난 고난의 역사에서 배태된 저항민족주의에서 기인하는 배타성과 우월의식 같은 우리 안의 특수를 어떻게 남의 눈을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²⁴⁾

24) 줄고,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실태와 그 영향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의회가 “竹島の 날”을 제정하면서 한일간에는 독도(일본명, 竹島)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2005년 검정합격한 후 쇼사의 중학교 공민교과서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검정신청본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竹島”라는 표현이 검정과정에서 “영유권에 대해 오해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라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으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竹島”라는 표현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첫 번째 “竹島の 날” 행사를 가지면서 독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2006년 3월 29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竹島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오해가 없도록 수정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한국과 교섭 중”이라는 기술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에 따라,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게 된 것이다.

검정결과가 발표된 다음날(2006년 3월 30일) 한국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제가 과거 침략전쟁시 강탈했던 적이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시켜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의하였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기술을 ‘침략전쟁을 미화시키는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일본측은 전면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독도 주변바다로는 해양과학조사선 파견을 시도하고, 해외로는 독도 홍보책자를 우송하였다.

다시 1년이 지난 2007년 3월 30일 일본 교과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와 관련된 그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또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그날(3월 30일) 오후 즉시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통과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일

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는 시마네현의 “竹島の 날” 행사와 함께 마치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초, 중, 고등학교 각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실태를 검토하고, 교과서 기술이 독도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 서술에 있어서 독도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 남쿠릴열도(일본명, 北方領土)나, 尖閣제도(중국어명, 釣魚島) 등 일본의 다른 도서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남쿠릴열도, 중국과 尖閣諸島를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다.

II.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오사카 서적의 ‘소학사회 5년 上’에는 비록 독도라고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도상에 울릉도와 독도, 오키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있다(p.8)

이에 반해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지도와 사진을 곁들여 남쿠릴열도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제2차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하였으며,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그 섬들을 계속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가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였으며, 러시아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소원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남쿠릴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서 일본의 최북단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까지 “현상의 사실상태”를 부정하고 자국이 소망하는 국경선과 영유권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관련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동경 서적	새로운 사회 5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일본과 주변 국가의 국기> 독도 표기 없음(p.61) ○ <지도>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음. - <지도, 사진>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섬을 일본의 최북단으로 소개 	2001년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동경 서적	새로운 사회 5 下	- <지도: 북방영토의 섬들> 남쿠릴열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이다” 라고 하면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남쿠릴열도의 현황과 역사 그리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환 노력을 기술하고 하투라도 빨리 일본으로 반환되길 바란다 고 기술하고 있음(p.62)	
	새로운 사회 6 상	○ <지도: 북방영토, 4개의 섬> 1956년 일본이 소년과 국교를 회복했지만, 남쿠릴열도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소련이 일본의 영토인 북방 4개섬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p.121)	2004년
교육 출판	소학사회 5년 하	○ 독도 관련 기술은 없음 ○ <지도: 소야(宗谷)지방 주변>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표시(p.37), -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의 최북단으로 소개(p.41)	2001년
	소학사회 6 상	○ <지도: 미해결의 북방영토>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고, 최근 남쿠릴열도에 있어서 양국 국민간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고 기술(p.115)	2004년
오사카 서적	소학사회 5년 상	○ <지도: 일본 국토의 범위>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경계 표시를 하여 일본령으로 포함(p.8) ○ <지도: 일본 국토의 범위>에서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의 최북단으로 표시(p.8) - <지도/설명: 북방영토의 섬들> 남쿠릴열도는 2차대전 후 소련이 점령하였으나,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로서 하루라도 빨리 남쿠릴열도를 반환받는 것이 일본인들의 소원이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p.11)	2004년
	소학사회 6년 상	○ <지도: 북방영토>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이 2차대전후 점령했다고 기술(p.116)	2004년
광춘 도서	사회 5 상	○ <지도: 일본의 위치와 주변국> 독도 표기 없음(p.14) ○ <지도: 북방영토의 섬들>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의 북단으로 표시(p.14) - 북방 4개섬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섬이 일본의 국토이나,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반환을 요구하며 계속 교섭하고 있다고 기술(p.15) - 남쿠릴열도의 섬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남쿠릴열도 교류 사업을 사진으로 설명(p.15)	2004년
제국 서원	소학생의 지도장 4·5·6년	○ 세계지도(p.75) 및 일본 주변국과 아시아(p.50) -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남쿠릴열도는 일본 영토로 표시	2004년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3, 4학년과 5학년, 그리고 6학년 등 각 학년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남쿠릴열도는 “5학년의 목표와 내용”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즉 남쿠릴열도가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 등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이 남쿠릴열도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¹⁾에서는 이전에 러시아가 남쿠릴열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반면 일본의 영토분쟁 중 중국과 분쟁 중인 첨각제도(조어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한 오사카 서적의 경우, 첨각제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경계선의 위치로 보아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남쿠릴열도의 예에서 본 것처럼 교과서 집필은 해설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교과서가 해설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해설서는 검정기관인 문부과학성에서 작성된 것으로 교과서 기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일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명기되면 거의 모든 일본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될 것임을 가히 예상할 수 있다.

<표2>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구분	학습지도요령 (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소학교 (사회편- 5학년)	(내용의 취급) (6)의 가. “가”의 ‘국토의 위치’ 指導시에는 우리나라 의 영토와 근린 여러 나라를 다루도록 할 것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나라와 인접하는 여러 나라를 관련시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때,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하여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1) 현행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1999년 5월 공포되었으며,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올해 3월 28일 중고등학교 새로운 학습지도요령과 함께 게재되었다. 6월 30일 문부과학성은 해설서를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한 중앙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7월 1일,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구분	학습지도요령 (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해설서(2011년부터 적용)</p> <p>그 때,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하여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p>

III.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독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역사, 공민, 지리분야이다. 이하에서 교과서별로 독도 등 영토관련 기술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역사교과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공민, 지리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거의 유일하게 2005년 제국서원 교과서에서 “竹島”(독도의 일본명)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2001년판에는 없던 “竹島”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2001년판에 없던 내용이 2005년판에 삽입된 것은 청수서원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청수서원의 역사교과서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울릉도 바로 옆에 경계선이 그어진 형태로 보아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분리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이 2001년 이후 의도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일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중학교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가 남쿠릴열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남쿠릴열도 4개섬이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러시아)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것이다.

<표 3> 제국서원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사회과 - 중학생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전후 국경> 독도에 대한 표시 없음 - 일본의 국토가 포츠담 선언에 의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그 주변 섬으로 한정되었다고 기술(p.217) ○ <지도 : 일본의 전후 국경> 설명에서 남쿠릴열도가 소련에 의해 점거되었다고 하고, 1956년 국교 회복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미해결상태 그대로 있다고 기술(p.217) 	2001년
	사회과 - 중학생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전후 국경>에서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p..224) - 일본의 국토가 포츠담 선언에 의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그 주변 섬으로 한정되었다고 기술 ○ <지도 : 일본의 전후 국경> 설명에서 남쿠릴열도가 소련에 의해 점거되었다고 기술(p..224) 	2005년
일본 문교출판	중학생의 사회과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에 관한 기술 없음 ○ <각주> 일본의 고유영토인 남쿠릴열도가 소련에 의해 점거되었으며 현재 일본이 러시아 연방에 대해 조기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p.203) 	2005년
교육출판	중학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주>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p.214) 	2001년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에 관한 기술 없음 ○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일본이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지만, 소련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소련 해체 후에도 러시아와 간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p.209) 	2005년
청수서원	신중학교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전도> 오키도만 있고 독도 표시 없음(속표지) 	2001년
	신중학교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지도에서 찾아보기> 독도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경계표시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 가능(p.176) ○ <지도 : 일본전도> 독도 표시 없음(속표지) 	2005년

2. 지리교과서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독도 표기는 지도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즉 독도를 “竹島”라고 표기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명기하든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자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서적신사의 교과서(2001년)의 경우, 1999년 1월에 발효한 한일어업협정 지도를 게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竹島 주변> 지도에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약간 변형한 형태에 “잠정어업수역”이라 표시하고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해리시대의 일본 해역”이라는 주제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독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으며, 한일 양국이 교섭을 하여 “독도 주변수역을 공동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을 설정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었다”고 기술하고 있다(p.35).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중간수역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한국측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의 수역으로서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수역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반해, 일본측은 중간수역을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 하는 수역 또는 잠정어업수역이라고 해석하였다. 일본서적신사의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독도 주변수역을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으로 기술하였다.

제국서원과 교육출판의 교과서(2001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일부 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교섭 중”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지도상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문교출판(2001년)은 일본 경제수역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그리고 있다. 즉 일본의 200해리 수역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비록 독도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독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형태상 울릉도까지 무시하고 그 주변수역을 자국의 수역에 포함시키고 있다(p.40).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과 지도 교과서(2001년)의 “동아시아·남아시아” 지도에서는 독도를 “竹島”라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있다(p.18). 또 <일본전도> 지도에서 독도를 “竹島”라 표시하고 시마네현(島根県) 소속으로 명기하였다(p.56).

남쿠릴열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역사, 공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첨각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명, “尖閣(센카쿠)諸島”로 표시하고, 일본과 중국간에 동중국해에 잠정어업수역을 설정한 것도 기술하고 있다(p.35).

<표4>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일본서적 신사	중학사회 - 지리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영토와 해역> 독도 포함(p.34) ○ <지도 : 竹島 주변> 독도를 竹島라 명기하고 "잠정어업 수역"에 포함(p.35) ○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日本海의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교섭, 竹島 주변 수역은 우선 양국에서 공동 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으로 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했다"고 기술(p.35) 	2001년
제국서원	사회과 - 중학생의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선의 일부에 관해서는 한국 중국과 교섭중이다'고 설명을 덧붙임 (p.33) - 또한 남쿠릴열도, 조어도를 자국의 영역에 포함 ○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최북단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시하고 1945년 이후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p.33) - 또한 남쿠릴열도와 일본의 다른 섬들과의 면적을 비교해 보도록 함 	2001년
일본 문교출판	중학생의 사회과 - 지리 (세계와 일본의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국토 범위> 독도 표시가 없으나, 일본의 200해리 수역 범위가 독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울릉도의 해양법적 지위까지 무시하고 자국의 수역 표시(p.49) ○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 영역의 최북단으로 표시하고 북해도 소속으로 표시. 남쿠릴열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설명하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p.48, 49) ○ 조어도도 자국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서도 200해리 설정(p.49) 	2001년
교육출판	중학사회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 해역과 경제수역> 독도, 조어도,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수역의 일부는 현재관계국과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p.40) ○ "일본의 영토문제"에서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만 설명 -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미해결상태에 있다고 기술(p.41) 	2001년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과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동아시아· 남아시아> 독도를 竹島라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p.18) ○ <지도 : 일본전도>에서 독도를 竹島라 표시하고 시마네현(島根県) 소속으로 명기 (p.56) ○ 남쿠릴열도와 조어도도 일본 영토로 표시(p.18, 56) - 일본명인 센카쿠제도(尖閣諸島)로 표시 	2001년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지리	○ <지도 : 일본의 영토반환역사와 북방영토> <영역을 둘러싼 문제>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고 제2차 대전 후 소련에 의해 점령된 후 러시아 연방이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p.35)	2005년

일본 중학교 사회(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서적 등의 출판사들은 교과서에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이라든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중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대해석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독도에 대해서는 현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직접 명기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또는 “독도가 분쟁 중”이라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 점을 보아, 현행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 중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에서 “등”을 독도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해설서에는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현재 러시아에 의해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출판사들은 중학교 지리교과서 편찬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관련 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5>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구분	학습지도요령(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중학교 (사회-지리분야)	(내용의 취급) 나의 (가)에 대해서는 지구의 위치와 영역의 특색을 다면적·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착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착목시키도록 한다’(내용의 취급)고 되어있는데, 북방영토(하보마이제도, 시고탄섬, 쿠나시리섬, 에도로 후섬)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구분	학습지도요령(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p>※ 학습지도요령 (2008.3.28 고시) (내용의 취급) (가)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다룸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주목시키도록 할 것.</p>	<p>금년 7월 14일 발표</p>

3. 공민교과서

공민교과서는 역사, 지리 교과서에 비해 독도에 관해 제일 많이 기술하고 있다. 2001년 후쇼사 교과서는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제도의 北方領土, 일본해 해상의 竹島, 동중국해 해상의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 지배를 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pp.104-105). 독도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즉 “역사적”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이고 있다(p.128).

동경서적 교과서도 후쇼사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교과서에서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수역의 영역을 볼때, 독도가 일본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p.145). 2005년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남쿠릴열도, 첨각제도와 함께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다.

2001년보다 2005년에 독도에 관한 주장을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은 오사카서적 교과서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1년판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없었지만, 2005년판에서는 자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즉 "시마네현 해상의 竹島"에 대해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하고 있으나, 지도 <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에는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고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있다(p.159). 더욱이 죽도 주변에는 수산자원과 관산자원이 풍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공민교과서도 역사, 지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출판사가 거의 예외없이 남쿠릴

열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몇몇 교과서는 중국과 분쟁 중인 첨각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나, 독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표6> 중학교 공민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사회과 중학생의 공민	○ 영토문제로서 남쿠릴열도만 언급.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기술 (p.159)	2001년
일본 문교출판	중학사회의 사회과 공민	○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남쿠릴열도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조기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 (p.169)	2001년
교육출판	중학사회 공민	○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p.169) - 1990년대 이후 남쿠릴열도관련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2001년
일본서적 신사	우리들의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 <지도 : 북방영토문제> <금후 근린제국과의 관계>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러시아와 사이에 미해결상태로 있다고 서술 (p.135)	2001년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 공민	○ <지도 : 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 “竹島” 표기는 없지만 일본령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p.145) -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러시아)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2001년
	새로운 사회 공민	○ <지도 : 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 독도, 남쿠릴열도, 첨각제도를 표시하고 자국령에 포함 (p.155) - <설명 : 독도와 첨각제도>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서북에 위치하는 竹島,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의 북방에 위치하는 첨각제도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2005년
후쇼사	새로운 공민 교과서	○ <지도 : 일본의 주권범위> 竹島, 남쿠릴열도, 첨각제도를 표시 ○ <주권국가>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제도의 북방영토, 일본해 해상의 竹島, 동중국해 해상의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 지배를 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pp.104-105)	2001년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새로운 공민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보 : 우리나라 주변 문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아래)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침각제도, 및, (가장 아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竹島"(p.3) ○ <지도 : 일본의 주권범위> 독도, 남쿠릴열도, 침각제도를 표시(p.128) ○ <주권국가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주변국가와의 사이에 영토문제를 가지고 있다. 쿠나시리섬, 에도로후섬, 시고탄섬, 하보마이쇼섬의 남쿠릴열도, 일본해상의 竹島, 동중국해상의 침각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하고, 그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p.128) 	2005년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p><사진 : 북해도에서 본 북방영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남쿠릴열도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p.159)</p>	2001년
오사카 서적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고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p.159) - 침각제도와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표시 ○ <확정되지 않는 영토와 국경>(p.159) - “시마네현 해상의 竹島는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경선은 인접하는 국가들의 커다란 관심사항으로, 실제 이해관계도 관련됩니다. 특히 경제수역의 설정에서 작은 섬 하나도 영유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방영토, 竹島, 침각제도 주변도 수산자원과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5년
청수서원	신중학교 공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북방영토문제> 1945년 8월 하순부터 소련이 점령한 쿠릴열도를 일본은 그 이후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포기했으나, 북방 4개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p.176) 	2005년

IV.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가 거론되는 교과서는 일본사, 지리, 정치경제, 현대사회 등이다. 이하에서 교과서별로 독도 등 영토관련 기술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일본사 교과서

제일학습사(第一學習社) 2007년 일본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의한 일본의 영토”를 설명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명인 “竹島”를 표시하고 있다(p.141). 그런데 이 지도는 2003년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의 지도(p.141)와 동일한데, 지도상에 표시되었던 “竹島 영유권문제”가 삭제되었다.

2007년 교과서의 지도상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한일 양국 중 어느 쪽 영토로 처리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대일강화조약상 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와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는 쿠릴열도와 분리하여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남쿠릴열도 4개섬이 쿠릴열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7> 제일학습사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일 학습사	고등학교 일본사A	○ <지도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한 일본의 영토> 미해결의 영토문제로서 ‘竹島영유권 문제’를 표시 (p.141)	2003년
	일본사A	○ <지도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일본의 영토> “울릉도”와 “竹島” 표시(p.141) - 조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첨각제도 일본 영역외에 위치	2007년

삼성당의 2007년 교과서는 ‘한국과 1951년 이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교섭이 진행되었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하면서 (각주)에서 “그 중에서도 배상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이승만라인과 어업권문제, 영토(竹島, 한국명은 獨島(トクト))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고 서술하고 있다(365쪽). 독도에 대해 “한국명은 독도”라고 하고 한국어로 읽는 방법(トクト)까지 덧붙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보기 드문 사항이다. 그런데, 위에서 사용된 “이승만라인”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공식명칭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또는 일반적으로 “평화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승만라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평화선이 불법’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8> 삼성당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삼성당	일본사A	○ <지도 : 러일전쟁 관계> “울릉도(松島)” 명기(p.57)	2007년
	일본사B	○ <지도 : 러일전쟁 관계> “울릉도(松島)” 명기(p.271) ○ 1951년 이래 국교정상화를 위해 진행된 한일교섭은 “배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이승만라인과 어업권문제, 영토(竹島, 한국명은 獨島(トクト))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p.365)	2007년

그리고 삼성당(三省堂) 교과서(2007년)의 “영토의 획정” 부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편입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오가사와라제도 편입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종종 비교하여 설명이 되는데, 이곳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도 정부는 일시 점령한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1876년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여(35쪽), 이해 관계국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실교출판(實教出版) 일본사B(2007년)에서도 볼 수 있다. 그 곳에는 “1876년까지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를 각국에게 통고했지만, 영국과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261쪽). 청수서원(淸水書院)의 일본사B(2007년)도 같은 내용이다(165쪽). 이러한 서술은 일본이 1905년 한국측에 조회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조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9> 실교출판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실교출판	고교일본사 A	○ <각주 : 설명> 1965년 한일조약관련 설명에서 ‘일본의 영토 문제인 竹島(한국명은 獨島)의 귀속은 미해결로 되었다’고 기술(p.159)	2002년
	고교 일본사B	○ <지도 : 한국> 울릉도 위치만 표시(p.28, 104, 166)	2007년
	일본사B	○ <지도 : 한국> 울릉도 위치만 표시(pp.54, 172) ○ “국경확정”에서 오가사와라, 류큐, 남쿠릴열도 설명은 있으나, 독도 설명은 없음(p.261)	2007년

산천출판(山川出版)의 일본사 교과서는 2002년부터 대일강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의 영토’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교과서에

서도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는 등 내용상 이전 것과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기술은 없으나, 한반도가 태평양 전쟁 전에는 “일본령”이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쿠릴열도 4개섬에 대해서는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표시만 하고 있다.

<표10> 산천출판사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 내용	검정등과
산천출판사	일본사 A	○ <지도 :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p.224)	2003년
	일본사A	○ <지도 :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p.224)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	2007년
	신일본사 (일본사B)	○ <지도 :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p.375)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	2003년
	신일본사 (일본사B)	○ <지도 : 일본의 영토> 남쿠릴열도 설명(1954년 러일화친조약시 국경 등) ○ <지도 :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p.375)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	2007년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 한국관련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의 위치만 표시하거나 울릉도의 당시 일본명인 “松島”만을 명기하고 독도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대일강화조약 관련 부분에서는 작은 독도까지 명기하여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의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볼만하다. 또한 울릉도는 한국명인 “울릉도”로 표시하는 반면, 독도는 일본명 “竹島”로 표시하여, 기본적으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전제하고 있다. 2007년 동경서적이나 청수서원 교과서에는 독도에 관한 표기가 없으나, 향후 내용 기술의 변화가 주목된다.

2. 지리 교과서

제국서원(帝國書院)의 지리교과서는 2002년 “고교생의 지리 A”에서 독도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p.19). 그런데 2007년 검정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다(p.223).

제국서원의 지리A 교과서(2007년)는 “또한 시마네현에 귀속하는 일본해의 竹島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서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p.17)고 서술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독도가 “시마네현”에 귀속되어 있으며, “일본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존 지도와 비슷하여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p.17). 그리고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1951년 대일강화조약때 포기된 쿠릴열도에서 분리하여 일본의 영토로 남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p.17).

제국서원의 지리B 교과서(2007년)는 “일본의 영토·영해문제” 부분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p.223)고 하여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지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명치이래 침략과 할양에 의해 대만과 한반도까지 영토를 넓혔는데, 제2차 대전 이후 포기했다”는 내용도 있다(p.223).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침략에 의해 한반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쿠릴열도에 대한 설명에서는 제국서원의 지리A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국과 분쟁 중인 尖閣제도도 일본의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p.223).

<표11> 제국서원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新詳 지리 B	○ <일본의 영토 영해 문제> 남쿠릴열도 문제만을 지도와 함께 표기하고 독도는 기술하지 않음 (p.311)	2002년
	고교생의 지리 A	○ <지도 :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독도의 위치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독도를 일본영토임을 전제로 한 수역 지도를 게재 (p.19)	2002년
	즐겁게 배우는 세계지리 B	○ <일본의 영토 영해문제> ‘미해결의 영토문제의 하나로 서’ 남쿠릴열도문제만을 기술(p.221)	2003년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국 서원	세계를 배우는 고교생의 지리A	○ 독도관련 표기 없음	2006년
	지리A	○ “또한 시마네현에 귀속하는 일본해의 竹島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서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p.17) - 남쿠릴열도에 대한 설명도 있음 ○ <지도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독도 표시는 없으나, 독도가 포함된 기존 지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p.17)	2007년
	지리B	○ <일본의 영토·영해문제>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p.223) - 남쿠릴열도, 尖閣제도를 일본의 영토로 서술	2007년

동경서적 지리교과서는 2002년 교과서 지도상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거나 분쟁지역임을 표시하였다. 2007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지리B 교과서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명 “竹島”라고 하고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영토문제와 그 원인” 부분의 “세계의 주요한 국경분쟁지역” 지도에 “竹島문제(일본·한국) 1952년~”이라고 명기하여 독도와 남쿠릴열도가 “분쟁”상태에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독도가 1952년에 분쟁이 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데, 1952년은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한일 정부간에 독도가 외교적으로 쟁점화된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는 분쟁지역으로 표시한 반면, 尖閣제도는 분쟁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328쪽). 이것은 尖閣제도에 대해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12> 동경서적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동경 서적	地理 A	○ <지도 : 일본의 위치와 영역>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음 (p.10)	2002년
	지리 B	○ <지도 : 세계의 주요 국경 분쟁 지역> “竹島문제” 표시 (p.315)	2002년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표시, 독도를 “竹島”라고 하여 일본 영역으로 표시(p.256) ○ <영토문제와 그 원인> “세계의 주요한 국경분쟁지역”이라는 지도에 “竹島문제(일본·한국) 1952년~” 명기 - 남쿠릴열도(일본, 러시아)는 명기되어 있는 반면, 尖閣제도 문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p.328) 	2007년

그리고 2002년판 이궁서점과 교육출판 지리교과서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독도영유권문제가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청수서원 교과서는 독도문제가 있지만, “시마네 현에 속하는 竹島”라고 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13> 이궁서점 등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이궁서점	상설 新지리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국가영역> 한국과 독도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 - 지도에서 독도를 ‘분쟁지구’로 표시(p.316) 	2002년
	고교생의 신지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영역> 남쿠릴열도 문제만을 지도와 함께 기술 (p.17) 	2002년
교육출판	지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기술> 한국과의 독도 문제를 기술(p.10-11) 	2002년
	지리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북방영토> ‘한국과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기술 (p.277) 	2002년
청수서원	고등학교 현대지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영토 문제> ‘시마네 현에 속하는 竹島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p.21) 	2002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남쿠릴열도 문제 등 영토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서 출판사들은 “영토문제” 부분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해설서 내용 중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를 확대해석하여 독도까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영역”과 관련하여 남쿠릴열도에 대한 서술은 현행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는 없고 대신 해설서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해설서의 경우에도, 중학교의 그것에 비해서는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남쿠릴열도의 현황이나 역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고 서술하고 있음에 반해, 고등학교

의 경우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다만, “남쿠릴열도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비록 학습지도요령에는 남쿠릴열도에 관한 기술이 없고, 해설서의 기술이 단순하다 하더라도 실제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 같이 자세하게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14〉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구분		학습지도요령(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고등학교	지리 A	(내용의 취급) 가의 (나)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일본의 영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라고 기술된 점에 유의하여,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거론, 국경이 갖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리 B	(내용의 취급) 다의 (나)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문제도 거론할 것.	또한,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문제도 거론할 것’(내용의 취급)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각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더라도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 독도”라는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교과서의 부교재 형태로 활용되는 지리(역사)부도가 거의 예외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궁서점(二宮書店)의 지리부도(2006년, 2007년)는 일본 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의미하는 경계선을 긋고 “島根/竹島(隱岐의 島町)” 혹은 “竹島/島根”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가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행정구역상 오키섬(隱岐)의 시마마치(島町) 마을의 관할하에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pp.62, 64, 140). 특히 일본 류고쿠(中国) 지역 지도에서는 별도의 구획(Box)에 독도를 표시하고,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한 독도, 남쿠릴열도, 尖閣제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켜서 일

본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도서영유권문제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등 작은 암석이 EEZ를 갖는가’ 하는 섬의 법적 지위 문제로 아직 EEZ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들 문제되는 섬까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켜서 교과서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섬인 에토로후(択捉)를 일본 영역의 북단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현재의 사실 상태를 부정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표15> 이궁서점의 지리부도의 독도 기술행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이궁 서점	詳解현대지도	○ <지도 : 동아시아> 독도를 竹島라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 (p.35)	2006년
	기본 지도장 개정판	○ <지도 : 동아시아> 독도를 竹島라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 (p.13)	2006년
	지리역사(지도) (18-67)	○ <지도 : 일본전도> 울릉도와 독도간에 경계표시, “島根/竹島(隱岐의 島町)”로 표시(p.62) ○ <지도 : 일본의 위치>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표시, “竹島” 표시(p.64) ○ <지도 : 류고쿠(中國) 시코쿠(四国)> 별도 Box에 독도를 넣어, “竹島/島根” 로 표시(p.68)	2007년
	지리역사(지도) (18-68)	○ <지도 : 동아시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를 긋고, 독도를 일본영역의 “竹島”로 표시(p.71) ○ <지도 : 일본전도> “竹島(島根)(隱岐의 町)”로 표시(p.141) ○ <지도 : 일본의 위치> 일본의 EEZ내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竹島”로 표시(p.143) ○ <지도 : 류고쿠(中國)> 별도 구획(Box)에 독도를 넣어 “竹島/島根” 로 표시(p.154)	2007년

마찬가지로 제국서원의 지리부도(2007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 영역의 “竹島”로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 尖閣제도, 남쿠릴열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표시하고 있다(pp.34, 44, 91). 독도를 “竹島”라 칭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은 동경서적의 新高등지도(2002년)도 마찬가지이다(p.37).

<표16> 제국서원/동경서적 지리부도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국 서원	新詳고등지도	○ <지도 : 동아시아>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표시(p.10)	2002년
	신상지도 B	○ <일본의 영토·영해문제> 남쿠릴열도, 첨각제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기술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음	2006년
	지리역사(지도)	○ <지도 : 일본과 주변의 국가> 독도가 일본의 EEZ내에 “竹島”로 표시(p.34) - 독도를 확대하여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표시 ○ <지도 : 동아시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를 그어, 독도를 일본영역내에 “竹島”로 표시(p.44) - 첨각제도, 남쿠릴열도도 일본영역으로 표시 ○ <지도 : 한반도와 일본열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를 긋고, 독도를 일본영역의 “竹島”로 표시(p.91)	2007년
동경 서적	新고등지도	○ <지도 : 환일본해> 독도<竹島>가 일본영토임을 표시(p.37)	2002년

4. 정치경제

2007년 동경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전후의 일본외교” 부분에서 전후 미해결문제로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검정신청본에 “북방영토문제, 尖閣제도(조어도), “竹島(獨島)의 영유권 문제 … 등 미해결 문제도 있다.”(p.94)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尖閣제도, 竹島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이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동경서적은 문부과학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러나 일본의 영토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남쿠릴열도, 한국과의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고, 중국은 尖閣제도의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일본명 “竹島”와 병기된 한국명 “독도”와 “미해결 문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학생들에게 적극 교육하기 위해 관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러시아와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을 문장의 주어로 하여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 대부분이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남쿠릴열도를 독도와 같은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표17> 동경서적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동경서적	정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의 일본외교> 전후 미해결문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 언급 (원문) “북방영토문제, 尖閣제도(조어도), “竹島(獨島)의 영유권 문제 … 등 미해결의 문제도 있다.”고 서술((p.94) →(수정문) “그러나 일본의 영토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의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고, 중국은 尖閣제도의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 ※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 : “尖閣제도, 竹島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2007년

제일학습사 정치경제 교과서(2007년)는 “미해결의 영토문제” 부분에서 일본이 한국과 독도귀속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즉 “일본국내에서도 러시아와의 사이에 남쿠릴열도문제, 한국과의 사이에 竹島문제가 있다. 또한 尖閣제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p.47). 문장 표현으로만 보면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문제가 있다’는 단순 서술로 보이지만,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내용 중 그림 설명에서 ‘남쿠릴열도, 尖閣제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p.47).

또한 위 교과서는 ‘남쿠릴열도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분쟁해결’ 등을 독도와 같은 페이지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편재를 볼 때, 학교에서는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등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교육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표18> 제일학습사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일학습사	고등학교 개정판 정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한국과 竹島 귀속을 둘러싼 대립문제를 기술 (p.73) 	2006년
	정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일본의 EEZ> 동북아지도상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독도 포함(p.47) ○ <미해결의 영토문제> “일본국내에서도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영토문제, 한국과의 사이에 竹島문제가 있다. 또한 尖閣제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p.47) 	2007년

청수서원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일본 외교의 과제” 부분에서 영토문제가 일본의 외교과제 중 하나라는 것과, 그 영토문제 중에 남쿠릴열도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각주)에서 그 외에 독도, 尖閣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시마네현에 있는 竹島에 대해 한국이, 오키나와현에 속한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중국 등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2007년, 89쪽).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竹島” 앞에 “시마네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의식적으로 독도관련 사항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19> 청수서원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고등학교 신 정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 아시아 속의 일본>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로서 한국과 “竹島문제”가 있다고 기술 ○ <일본 외교의 과제> 독도에 대해 한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기술(p.80) 	2006년
청수 서원	정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외교의 과제> 일본외교의 과제 중 하나를 영토문제로 하고, (각주)에서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이라고 표시(p.89) -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고, “시마네현에 있는 竹島에 대해 한국이, 오키나와현에 속한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중국 등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5. 현대사회 교과서

청수서원의 현대사회 교과서의 경우, 2002년판에서는 독도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과 2007년으로 갈수록 그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교과서를 보면,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에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p.152)고 하여 “독도가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尖閣제도를 오키나와현 소속으로 표시하고 있다(p.152).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일본열도 남쪽의 작은 암석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 중인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영토 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다.

<표20> 청수서원 현대사회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청수 서원	新현대사회	○ <지도 : 주권국가와 국제법> 남쿠릴열도 문제만을 표기하고 독도는 기술되지 않음(p.144)	2002년
	고등학교 신현대사회	○ <일본의 영토문제> “일본 영토와 관련하여 竹島에 관해 한국이, 작어도 등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중국·대만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p.121) ○ <지도 : 일본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울릉도·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태상으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 수역 표시(p.182)	2006년
	현대사회	○ <국제법과 집단안전보장> (각주) “또한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에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 오끼나와현의 첨각제도에 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p.152)	2007년

6. 세계사 교과서

청수서원 세계사B의 2007년 검정 신청본은 일본 연표(年表)에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竹島문제 발생”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이 부분에 대해 “竹島 문제에 관해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하여 수정을 지시하여, 합격본에서는 그 내용 전체가 삭제되었다(p.240).

2007년 검정 신청본에서 기술한 “竹島”는 오늘날과 달리 1693년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지칭한 명칭이다. 1693년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를 둘러싼 소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라고 지칭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수정지시는 학생들이 갖게 될 독도와 관련된 명칭혼란에 대한 의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오끼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 위치만 표시할 뿐 영유관계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표21> 청수서원의 세계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청수 서원	세계사B	○ 독도관련 내용(p.240) (원문) (년표 일본) 1693 조선과의 사이에 竹島문제발생 ⇒(수정문) 삭제 ※ 문부과학성 수정의견 : 독도문제에 관해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2007년

2007년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실표출판 교과서에서 29세기 후반 조선반도 지도에 울릉도의 위치만 표시하고 있고(p.113), 그 외 산천출판, 동경서적, 제국서원 등에는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다.

V. 독도관련 기술이 독도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1.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의 특징

① 첫째, 일본 교과서는 2001년 이후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왜곡 심화시켜 왔다. 처음에는 독도의 위치표시만 했다가, 그 다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으로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즉 지도에 한 “점”을 찍은 후, 상황을 보아가면서 “선”과 “면”으로 확장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예는 동경서적, 후쇼사, 오사카서적의 중학교 공민교과서(2001년, 2005년 비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둘째,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실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상 “있는 법”(lex lata)이나, “현재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거나,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는 현재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 첨각제도도 중국과 분쟁 중이어서 해양경계를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섬들을 포함한 영역도를 교과서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아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해리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대해서도 200해리 기점을 적용하여 광대한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평화적인 국가,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는 일본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목표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③ 셋째, 독도 기술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를 보면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부교재 활용되는 지리부도나 지도를 보면, 독도는 예외없이 일본령으로 표시되거나, 시마네현 소속, 또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 교과서가 울릉도를 한국 지명에 따라 “울릉도”라고 표기함에 반해, 독도는 일본명, “竹島”라고 호칭한다

는 점도 그 한 증거라 할 수 있다.

④ 넷째, 독도 기술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적극 관여하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2005년, 2006년, 2007년 3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거듭 밝혀졌다. 출판사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에 따라,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것 뿐만 아니라, 2005년 3월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학습지도요령에는 써야 한다”고 발언한 당시 나카야마 문부과학성 장관의 발언과 최근 5월 19일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부과학성 차관 등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독도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 독도 기술이 독도관계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들간 시각차를 크게 하여 독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대해 상호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독도문제를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야기된 역사문제라고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 즉 영토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과서를 통해 자연 후세대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한 치의 의심 없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인식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며, ‘일본이 러일전쟁 직후에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여 침탈한 역사의 섬’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본의 학생들은 ‘독도를 새롭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즉 한국의 학생들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 학생들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 즉 영토문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역사문제와 영유권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역사문제라는 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영유권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과거 침탈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유권문제는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영유권 그 자체를 두고 한일 양국이 다투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의 본질(실체)이 무엇이나에 대한 고려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내지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독도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따라, 문제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역사문제로 인식하는 한국측은 ‘일본이 독도를 러일전쟁 직후에 침탈했다는 역사를 인정하고 독도에 관

한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영유권 문제로 인식하는 일본측은 독도문제는 영유권 문제로서 '국제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또는 향후 더욱 굳어지게 될 독도문제의 본질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독도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안이다. 독도문제의 본질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호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② 독도 기술이 독도관계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한일 양국의 국민간 대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에 심각성이 있다.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 비해 독도에 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후세대 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이는 독도 문제가 현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면서 독도와 관련된 한일 국민간 갈등과 대립이 永久化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 문제와 관련하여 내린 통치자의 결단을 기대하기란 차츰 어려워져 갈 것이다. 한국 국민 對 일본 국민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 갈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자국이 어떠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느냐' 하는 것은 국내적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일본의 교과서 관련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노정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은 여전히 우호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독도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투영해 주는 상징적 존재와도 같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을 자극한 일본의 왜곡된 독도 기술은 과거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교과서는 다른 국가와 국민을 이해하고 편견을 제거하면서 국가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독도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간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가? 한국과 일본은 유사 이래 이웃하는 국가로 존재해 왔으며, 냉전 이래 상당한 정도로 정치,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평가가 아직

도 정리되지 않고, 한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적대감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경우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경쟁과 대립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대결구도에 이르게 되면 어물쩍 애매한 형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편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과서는 역사인식의 기반이 되고 미래세대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이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독도 기술은 한일 양국의 후세대들에게 “사실과 역사인식”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영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 금번 중학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성해 나가려는 한일 양국의 전반적 협력분위기와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편찬

김 보 립(충신대학교)

I. 서론

문부과학성은 2008년 2월 15일 신학습지도요령안을 공표하였는데 소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도부터 완전실시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설, 각 교과 및 과목에 대한 목표, 내용, 수업방법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일본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틀을 제시한다.

중학교 사회과의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1947년 처음 발표된 후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51년, 55년, 58년, 69년, 77년, 89년, 98년,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일본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각 교과별로 자세한 지도요령내용을 보충해 제작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교과서 출판사들의 교과서 편집은 이 해설서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회사는 해설서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편집하므로 교과서 제작에 큰 영향을 준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서는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2001년 ‘후쇼사 교과서 문제’가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교과서로서 주변 국가에 대한 왜곡된 역사상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번의 해설서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과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설서를 기준으로 써야되는 검정 교과서 전반에 이르는 큰 문제이기에 다른 어떤 교과서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공표되는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새롭게 명기할 방침을 굳혔다.¹⁾ 이에 따라 교과서에 독도문제가 처음으로 ‘일본 영토’로 명기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제가 되는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와의 제 관계를 살펴보는 가운데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검정제도라는 큰 틀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読売新聞 2008. 5. 18.

II.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이 처음 발행된 것은 1947년부터이며 미국의 교육과정(course of study)이 그 모델이었다.²⁾

학습지도요령은 문부성(현재의 문과성) 편집·발행의 저작이었지만 58년 이후는 문부성 고시로서 공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이 고시화는 지도요령을 교사의 참고서 정도로 한 초기의 성격을 부정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성을 강화시키고 법적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사회생활과와 사회과로 각각 시작된 사회과는 생활중심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 알맞은 시민의 양성, 즉 공동생활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줄 아는 생활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과목이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양성을 요구하던 미국식 교육관의 반영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군정 성립 직후부터 1958년 학습지도요령이 법적 영향력을 가지는 ‘고시’ 형식으로 공포되기 이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학습지도요령이 시안의 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고,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은 일반편과 달리 따로 책자로 편찬되었다. 일본이 고시형식으로 안정된 후부터는 일률적인 주기로 변화되어 왔음에 비해, 한국은 급변하는 현대사를 대변하듯 교수요목기 이후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한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제8차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 비해 일본은 전면적인 개정을 2008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1977년판 학습지도요령에서부터 강조하여 온 ‘여유교육’이 ‘학력저하’로 사회문제화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2005년 교육기본법의 개정후, 첫 개정이 되는 지도요령에서는 ‘사는 힘’의 육성이라고 하는 종래의 이념은 바꾸지 않은 채 수업시간, 학습내용을 늘렸다. ‘여유교육’을 밝혀 학습내용을 약 3할이나 줄인 현행의 지도요령과는 대조적이다. 이해력이나 표현력등을 기르는 언어활동, 이수교육, 전통, 문화의 교육, 도덕교육, 체험활동, 외국

2) 이 시기의 학습지도요령은 미국의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생활경험 커리큘럼과 문제해결 학습이 기조가 되고 있다.(寄田啓夫, 山中芳和 編, 1998 《日本教育史》(ミネルバ書房, 東京) 134)

3) 처음에는 『일반편(一般編)』과 『각교과편(各教科編)』으로 나뉘어 학교별로 간행되었지만 때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포함하기도 하여 교과편이 간행되는 때도 있었다. 58년의 큰 개정 이후는 『일반편』과 『각교과편』의 구분을 폐지하고 학교별로 이것을 일체화하여 그것을 다시 각각 『총칙』, 『각교과』, 『도덕』, 『특별교육활동』, 『학교행사등』 등으로 구분하였다.(久保義三, 米田俊彦, 駒込武, 兒美川孝一郎, 2001 《現代教育史事典》(東京書籍, 東京))

어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2005년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교육의 이념이 된 ‘전통·문화의 존중’, ‘공공의 정신’을 각 교과·과목에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의 변천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후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연도	적용	특징
1947년	소·중·고	최초의 학습지도요령(시안), 경험주의(듀이), 1948년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보설 발행
1951년	소·중·고	시안 형식, 1947년의 시안을 답습, 시안의 개정판
1955년 1956년	소·중 고	개정판, 필수교과 및 과목의 증설과 코스제의 도입
1958년 1960년	소·중 고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의 성격의 명확화 고시형식-법률적 구속력이 명확하게 됨,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의 성격의 명확화 지식의 계통성(과학) 강조, 계통적인 학습을 중시,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의 성격의 명확화 도덕의 시간 신설 기초학력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1968년 1969년 1970년	소 중 고	수업시수를 표준시수로 나타냄. 이수계의 교과에서 교육내용의 현대화를 꾀함 교육의 현대화, 학문·지식의 강조, 브루너 교육내용의 일층의 향상(교육내용의 현대화, 시대의 진전에 대응한 교육내용의 도입)
1977년 1978년	소·중 고	‘여유와 충실’을 목적으로 하기 시작->‘여유의 시간’을 신설 고교에 습숙도(習熟度)별학급편제의 도입 교육내용 10% 감축 여유있는 충실한 학교생활의 실현=학습부담의 적정화(각교과 등의 목표, 내용을 중핵적 사항으로 만들)
1989년	소·중·고	체험적, 문제해결적 학습의 중시(新しい學力觀) 탄력화와 개성화(학생들의 발달도에 대응). 살아갈 방법(生きる方) 사회의 변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풍부한 인간의 육성(생활과의 신설, 도덕교육의 충실)
1998년 1999년	소·중 고	주5일제 하에서 각 학교가 특색있는 교육을 전개하고 생활력(生きる力)을 육성함. 수업시수의 큰 감소와 교육내용의 엄선을 행함.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신설.

연도	적용	특징
		교육내용 30% 감축 신학력관(新學力觀) 주5일제 수업 시작, 기초, 기본을 충실하게 몸에 익히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등의 '사는 힘(いきる力)'의 육성(교육내용의 엄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신설)
학습지도요령의 일부 개정 (2003년)		학습지도요령의 목적의 일층 실현 관점에서의 부분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최저화 인정 '확실한 학력' 강조 '여유 교육'의 노선 수정
2008년 고시 2009년 고시예정	소·중 고	'여유교육'의 수정, 수업시수 및 수업 내용 확충

<출전> 佐藤正昭, 2004 <'學力論爭'의 視座: 論爭が'實'あるものになるために> 《青森縣立保健大學雜誌》 5-1 (青森縣立保健大學雜誌編集委員會) 134.

1947년 사회과가 처음 설치된 후 1958년의 학습지도요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고시 형태로 시작될 때까지 경험주의 학습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단원의 구성도 문제해결중심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학문의 계열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학문의 계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1958년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고 이러한 상황은 1968년 학습지도요령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은 1977년 '여유교육'의 강조와 함께 사라지고 이러한 풍조는 2008년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전면 수정될때까지 1989년, 1998년 학습지도요령까지 지속된다.

일본의 교육과정 행정체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일본의 교육과정 관련 중앙의 일본 문부과학성의 직제에서 관련 조직을 보면 초중등교육국>교육과정과>교육과정기획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는 중앙교육심의회>초중등교육분과회>교육과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위원회에는 초·중·고등학교부회가 있고,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를 비롯하여 과목별 전문부회로 18개 부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수상 직속 기관으로 교육재생회의(08. 1. 31. 완료되고 그 계승기구인 교육재생간담회가 3월초에 발족됨)가 있다. 이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습지도요령을 편집, 제작하며 2008년 신학습지도요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교육과정 부회에서 '중앙교육심의회답신'이 만들어지는 3년여 기간(2005년 4월 심의 개시)에 教育課程部会를 60회, 小·中·高等学校部会를 16회, 각과과등의 전문부회를 125회 개최하고 심의를 행하였다. 한편,

지방의 교육과정 행정 체제는 都道府県 교육위원회와 市町村 교육위원회 내 교육과정 담당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都道府県 교육위원회와 市町村 교육위원회 내 교육과정 담당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지도주사’가 있다. 都道府県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관할하고, 市町村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관할하고 있다.

III.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과 독도문제

일본 정부는 14일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규정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류하거나 표현방법을 바꿔 애매하게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견해로 일관하고 있지만 현행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로 영토문제로 예시되어 있는 건 북방영토뿐이다.

2005년 3월,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성 장관이 국회에서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도 명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보류되었다. 또한, 지도요령안이 공포된 올해 2월은 한국 이명박대통령의 취임과 한일간 셔틀외교 부활이 겹쳐져 정치적인 배려로 명기되지 못했다.

2008년 7월 1일에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에 처음 게재된 소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개정의 경위, 사회과 개정의 취지, 개정의 요점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학습지도요령이 제시하고 있는 각 학년별 목표와 내용, 지도계획의 작성과 내용의 취급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7월 14일 지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발표에 독도의 명기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08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가 낸 답신에는 신학습지도요령의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하고 각 학교단계와 각교과등에 걸친 학습지도요령의 개선의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 ① 개정교육기본법등을 따르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 ② ‘生きる力’라고 하는 이념의 공유
- ③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
- ④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등의 육성
- ⑤ 확실한 학력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시수의 확보
- ⑥ 학습의욕의 향상과 학습습관의 확립

⑦ 풍부한 마음과 건전한 신체의 육성을 위한 지도의 충실

이 답신의 내용에는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의 개선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i) 개선의 기본방향

-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에 대해서는 이 과제를 기초하여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해 사회적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사회적인 견해와 생각을 성장시키는 것을 한층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사회적 사상에 관한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 개념과 기능을 충실하게 습득시켜 이들을 활용하는 힘과 과제를 탐구하는 힘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각학교 단계의 특질에 응해서 습득해야할 지식, 개념의 명확화를 피함과 함께 컴퓨터 등도 활용하면서 지도와 통계등 각종의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읽을 것, 사회적 사상의 의미, 의의를 해석할 것, 사상의 특색과 사상간의 관련을 설명할 것,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것을 한층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꾀한다.
- 우리 국가 및 세계의 성립과 지역 구성, 오늘날의 사회경제 시스템, 다양한 전통과 문화, 종교에 대해서의 이해를 통해 우리 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등, 공공적인 상황에 스스로 참여하여 가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꾀한다.

다음의 답신에서는 상기의 기본방침을 근간으로 하여 개선의 구체적 사항에 소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의 국토, 역사등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인 견해와 사고방식을 기르고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 개념과 기능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자질과 능력의 기초를 쌓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소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의 내용 개선은 ①지역사회에 관한 학습의 개선 ②우리 나라의 국토와 산업에 관한 개선 ③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학습의 개선 ④우리 나라의 정치의 움직임에 관한 학습의 개선 ⑤ 국제이해에 관한 학습의 개선등 5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중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소학교 5학년의 내용에 해당되는 ② 우리나라의 국토와 산업에 관한 개선을 좀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5학년에서는 3학년 및 4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의 집속과 5학년에서 학습하는 내용의 상호 관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을 꾀했다.

우리 나라의 국토의 모습과 국민생활의 관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이 ‘지구의(를 활용하여 조사하라)’, ‘세계의 주요한 대륙과 해양, 주요한 국가의 명칭과 위치’, ‘자연재해의 방지’를 더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온 ‘영토’를 내용에 위치시켜 ‘우리 나라의 위치와 영토’로 하고 ‘기후조건’에 대해서는 3학년 및 4학년부터 이행한 ‘지형조건’을 포함하여 ‘자연조건’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내용의 취급에서는 지금까지의 “국토의 위치”의 指導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영토와 근린의 제국을 예시하는 것으로 한다.”를 “주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근린의 제국을 포함하여 예시하는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였다.

제 5학년의 목표에는 우리 나라의 국토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의 이해와 태도에 관한 목표에 대해서는 새로이 ‘국토의 환경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와 ‘자연재해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한다)’를 추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산업의 모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의 이해와 태도에 관한 목표에 대해서는 새로이 ‘사회의 정보화의 진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를 추가하였다.⁴⁾

2011년에 전면 실시되는 소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관련 명기는 없었지만, 소학교 5학년 내용 해설에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러시아 연방이 일본영토인 북방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전 해설서에 기재되고 있던 ‘점거’에서 ‘불법점거’로 내용을 바꿨다.

7. 세계의 주요한 대륙과 해양, 주요한 국가의 명칭과 위치, 우리 나라의 위치와 영토

4) [第5学年]

1. 目標

- (1) 우리 나라의 국토의 모습, 국토의 환경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연재해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깊이하고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기르도록 한다.
- (2) 우리나라의 산업의 모습, 산업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우리 나라의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정보화의 진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3) 사회적 事象을 구체적으로 조사함과 함께 지도와 지구의, 통계등의 각종 기초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事象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힘, 조사하는 것과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우리 나라의 위치와 영토’

우리나라의 국토를 구성하는 북해도, 본주, 사국, 구주, 오끼나와도, 북방영토등의 주요한 섬의 명칭과 위치, 우리 나라의 영토의 북단, 남단, 동단, 서단, 일본 열도의 주변 해를 들어 지구본과 지구의등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백지도등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토를 구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 때 영토에 대해서는 북방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도 들어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인 齒舞群島(하보마 이 군도), 色丹島(이코단 도), 国後島(쿠나시리 도), 択捉島(에토로후 도)가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되어져 있는 것과 우리 국가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한다.(小學校 新학습지도요령 해설서 p.62)

우선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기존의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나 있는 사회과의 목표가 어떠한 변천을 거쳐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3>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서의 목표 변천

연도	목표
1989	넓은 시야에 서서 <u>우리 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u>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양을 쌓아 국제사회에 사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쌓는다.
1998	넓은 시야에 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자료에 근거하여 <u>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이 하고</u>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양을 쌓아 국제사회에 사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쌓는다.
2008	넓은 시야에 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자료에 근거하여 <u>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이하고</u> 공민으로서의 기초적인 교양을 쌓아 국제사회에 사는 <u>평화롭고 민주적인</u>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쌓는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중학교 사회과의 목표는 1998년도와 2008년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다만, 1998년도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민주적, 평화적인(民主的, 平和的) 국가사회의 형성자’를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근간으로 2008년도에는 ‘평화롭고 민주적인(平和で民主的) 국가사회 형성자’로 수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1998년도와 2008년도에는 1989년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는 지

리, 역사, 공민 3분야의 틀을 유지하는 이른바 π 형의 교과구조를 계속 취하고 있다. π 형의 교과구조는 1969년도 학습지도요령에서부터 계속 유지하여 왔는데, 표 4에서와 같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2년 동안 역사적 분야와 지리적 분야를 동시에 학습한 후에 3학년에서 공민적 분야를 학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표 4> 일본 소·중·고등학교 사회과·地歴科 교육과정 편제

학교	학년	과목 및 내용	
소학교	3·4학년	친근한 지역(가정, 지역,市(区, 町, 村))의 산업, 경제, 지도	
	5학년	사회, 국가, 세계의 산업, 경제, 지도	
	6학년	세계속의 일본사	
중학교	1학년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
	2학년		
	3학년	공민적 분야	
고등학교	地歴科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공민과	현대사회또는 윤리와 정치경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사회과의 목표와 각 학년별(3·4학년, 5학년, 6학년) 목표, 내용, 내용의 취급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도 계획의 작성과 내용의 취급이 다루어져 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역시 사회과의 목표와 지리과, 역사과, 공민과 별로 목표, 내용, 내용의 취급이 있으며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도계획의 작성과 내용의 취급이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리적 분야의 목표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 일본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 목표의 변천

1998년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8년도 신학습지도요령
(1) 일본과 세계의 지리적 事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넓은 시야에 서서 <u>우리 나라의 국토의 지역적 특색을 고찰하고</u> 이해시켜 지리적인 견해와 사고방식의 기초를 기르고 <u>우리 국가의 영토에 대한 인식을</u> 기른다.	(1) 일본과 세계의 지리적 事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넓은 시야에 서서 <u>우리나라의 국토 및 세계의 제지역적 특색을 고찰하고</u> 이해시켜, <u>우리 국가 및 세계의 제지역에 관한 지리적 인식을</u> 기른다.

1998년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8년도 신학습지도요령
(2) 일본과 세계의 지역의 제事象을 위치와 공간적인 넓이와의 관련하에 제시하고 그것을 지역의 규모에 응해서 환경조건과 인간의 경영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u>지역적 특색을 들기위한 시점과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u>	(2) 일본과 세계의 지역의 제事象을 위치와 공간적인 넓이와의 관련하에 제시하고 그것을 지역의 규모에 응해서 환경조건과 인간의 경영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u>지역적 특색과 지역의 과제를 예시하도록 한다.</u>
(3) 대소 다양한 지역으로 성립되어 있는 일본과 세계 제지역을 비교하여 관련지어 고찰하고 그들의 지역은 상호 관련지어져 있는 점과 각 지역의 특색에는 지방적 특수성과 일반적 공통성이 있는 점, 또한 그들은 제 조건의 변화등에 따라 변용하고 있는 점을 이해 시킨다.	(3) 좌동
(4) 지역조사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리적 事象에 대한 관심을 높게하고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선택, 활용하여 지리적 象을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공정하게 판단함과 함께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4) 좌동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중학교 지리적 분야의 내용 변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국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세계의 국토’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지역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를 통해 독도문제에 대한 명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졌다.

지리적 분야의 내용 개선 방향은 ‘세계의 지리적 인식을 심화하기 위해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과의 관련과 세계 제지역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하는 항목을 설치함과 함께 우리 국가의 국토에 대한 인식을 일층 심화하기 위해 일본의 제지역에서의 특색있는 사상을 다른 사상과 유기적으로 관련 지어 지역적 특색을 예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내용의 개선을 꾀한다. 또한 내용의 전체를 통해 지도의 讀圖와 作圖등의 지리적 기능을 익히는 것을 한층 중시함과 함께 친근한 지역의 조사 학습에서 제 과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역사적 분야 목표의 변천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일본 중학교 사회과 역사적 분야 목표의 변천

1998년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8년도 신학습지도요령
(1) 역사적 事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큰 흐름과 각 시대의 특색을 세계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해시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u>문화와 전통의 특색</u> 을 넓은 시야에 서서 생각시킴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	(1) 역사적 事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큰 흐름을, 세계의 역사의 배경으로, 각 시대의 특색을 <u>밟아</u> 이해시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 나라의 <u>전통과 문화의 특색</u> 을 넓은 시야에 서서 생각시킴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u>깊게</u>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
(2) 국가, 사회 및 문화의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의 향상에 힘쓴 역사상의 인물과 현재에 전해지는 문화유산을 그 시대와 지역과 관련에서 이해시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좌동
(3) 역사에 나타나는 국제관계와 문화교류의 상태를 이해시키고 우리 나라와 제외국의 역사와 문화가 상호 깊이 관련하여 온 것을 생각시킴과 함께 타민족의 문화, 생활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좌동
(4) 친근한 지역의 역사와 구체적인 사상의 학습을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상을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공정하게 판단함과 함께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4) 좌동

이상과 같이 1998년과 2008년의 역사적 분야 목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다만,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문화와 전통’이라는 표현이 ‘전통과 문화’로 수정되었다.

한편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의 지리적 분야의 내용구성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⁵⁾

5) 일본 중학교 사회과 역사적 분야 내용구성은 1998년에는 (1) 歴史の流れと地域の歴史 (2) 古代までの日本(3) 中世の日本 (4) 近世の日本 (5) 近現代の日本と世界으로, 2008년에는 (1) 歴史のとらえ方 (2) 古代の日本 (3) 中世の日本 (4) 近世の日本 (5) 近代の日本と世界 (6) 現代の日本と世界 로서 근현대를 따로 구성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표 7> 일본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 내용구성의 변천

1998년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8년도 신학습지도요령
<p>(1) 세계와 일본의 지역구성 ア 세계의 지역구성 (ア) 지구상의 위치관계와 수산의 분포 (イ) 국가의 구성과 지역구분 이 일본의 지역구성 지구의와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국토의 위치, 영역의 특색, 지역구분등을 들어 일본의 지역구성을 大觀시킨다. (ア) 일본의 위치와 영역 우리 나라의 국토의 위치 및 영역의 특색과 변화를 넓은 시야로부터 고찰하고 일본의 현상을 위치와 영역의 면에서 大觀시킨다. (イ) 都道府県の 構成과 지역구분</p> <p>(2) 지역의 규모에 응한 조사 ア 친근한 지역 이 都道府県 ウ 세계의 국가들</p> <p>(3) 세계와 비교하여 본 일본 ア 다양한 면에서 본 일본 (ア) 자연환경에서 본 일본의 지역적 특색 (イ) 인구에서 본 일본의 지역적 특색 (ウ) 자원과 산업에서 본 일본의 지역적 특색 (エ) 생활, 문화에서 본 일본의 지역적 특색 (オ) 지역간의 결부에서 본 일본의 지역적 특색 이 다양한 특색을 관련시켜 본 일본</p>	<p>(1) 세계의 다양한 지역 ア 세계의 지역구성 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 ウ 세계의 제지역 エ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조사</p> <p>(2) 일본의 다양한 지역 ア 일본의 지역구성 지구의와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국토의 위치, 세계각지와 의 시차, 영역의 특색과 변화, 지역구분등을 들어 일본의 지역구성을 大觀시킨다. 이 세계와 비교한 일본의 지역적 특색 (ア) 자연환경 (イ) 인구 (ウ) 자원·에너지와 산업 (エ) 지역간의 결부 ウ 일본의 제지역 (ア) 자연환경을 중핵으로 한 고찰 (イ) 역사적 배경을 중핵으로 한 고찰 (ウ) 산업을 중핵으로 한 고찰 (エ)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을 중핵으로 한 고찰 (オ) 인구와 도시, 촌락을 중핵으로 한 고찰 (カ) 생활, 문화를 중핵으로 한 고찰 (キ) 타지역과의 결부를 중핵으로 한 고찰</p> <p>エ 친근한 지역의 조사</p>

한편, 1998년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쓰여진 중학 사회 공민교과서에는 ‘일본 해상의 죽도이다’(p.140)이라는 표현이 있다. 즉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학습지도요령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필자에 따라 이러한 서술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02년 검정통과되고 2003년부터 사용중인 명성사 출판의 ‘최신일본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현대일본의 과제와 문화의 창조’라는 항목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방 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채로 있고 한국이 島根현의 죽도 영유권을 또한 중국등이 沖繩현의 조어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p.270)

라며 일본의 고유영토인 러시아의 북방영토, 한국의 독도, 그리고 중국의 센카쿠 제도가 이들 국가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유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⁶⁾

한국의 현행 중학교 ‘국사’ 교과서(p.240)에는 독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단원 주권수호운동의 전개

2. 일제의 침략과 의병전쟁

소주제 3)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

* 일본의 강탈 :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짓고 이른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1999, p.240)에는 2. 일제의 침략과 의병전쟁이라는 주제에서 ‘일제가 헤이그 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는 한편 러일전쟁중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고 간도를 청에게 넘겨준 사실을 파악한다’라고 하고 있다.⁷⁾

V.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검정제도

학습지도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표는 원칙적으로 교과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해 준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이 공포될때마다 일본

6) 이찬희, 임상선, 윤희탁,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동재, 2006, p.174.

7)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p.131)

3단원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4. 정치상황의 변동

소주제 5) 대외관계의 변화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숙종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의 우익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는데, 1998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입학식과 졸업식에서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사실상 의무화하였다.⁸⁾

이러한 학습지도요령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함께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어 왔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집필과 수업의 방향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교과교육의 내용과 유의할 점 또한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과 수업은 원칙적으로 학습지도요령을 따라야 한다. 1982년 일본은 의무교육제하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용 도서에 ‘교과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근린의 아시아 제국간의 근현대의 역사적 事像의 취급에있어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이하 ‘근린제국조항’이라 함)’는 규정을 추가하였다.⁹⁾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도서 검정 기준의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1998년도 학습지도요령에서 ‘근린제국에 대한 이해’가 언급되면서 교과용도서 검정기준도 변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검정,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때까지의 경위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¹⁰⁾

(1) 편집

현재의 교과서제도는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의 저작·편집이 기본이다.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 교과용도서검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검정 신청한다. 교과를 출판하고자 하는 회사가 사용개시 3년전에 기획회의를 열어 역사학자·교육학자·현직교사 중에서 편집·집필자를 선정한다. 편집·집필자는 학습지도요령의 편집협력자官製研究會 회원과 민간교육단체 회원 중에서 선정된다.

8) ‘입학식과 졸업식등에서는 그 의의를 생각하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함께 국가를 제창 하도록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文部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1989, p.387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제3장 특별활동의 제2의 3항)

9) 제3장 각 교과 고유의 조건

2. 선택·취급 및 조직·분량

(3) 근린의 아시아 제국과의 사이의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의 취급에 국제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로부터 필요한 배려가 되어 있을 것(www.monbu.go.jp/news/00000417 ; 高等學校教科用圖書檢定基準)

한편, 일본 자민당의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은 이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을 삭제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동아일보 1998. 6. 23)

10) 이충호(2008. 4), 「일본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교과서연구』 제53호, 교과서연구재단 참조.

(2) 검정

교과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쳐서 자격이 주어진다. 즉 교과서가 집필되면 회사는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教科用圖書檢定調査審議會에서 심사를 받는다. 검정조사심의회 위원(사회과 25명)은 대학교수, 소·중학교장, 전직 외교관(겸임) 중에서 선임된다. 발행자가 검정 신청하면, 그 도서는 문부과학성 내의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내용이 첨부되는 동시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자문을 받게 된다. 심의회에서 답신이 이루어지면, 문부과학대신은 이 답신에 근거해 검정을 실시한다(문부과학성 교과서과 담당). 즉, 심의회 심의 결과는 검정의견을 일람표로 만들고, 합격여부는 결정 보류인 상태로 교과서 조사관으로부터 교과서회사에 문서로 통지되는 것이다.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의 심사는 교과용도서검정기준에 근거해서 실시된다. 그 후 교과서회사는 검정의견에 따라서 수정표를 작성하여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검정조사심의회는 재심사를 하여 합격·불합격을 결정한다.

(3)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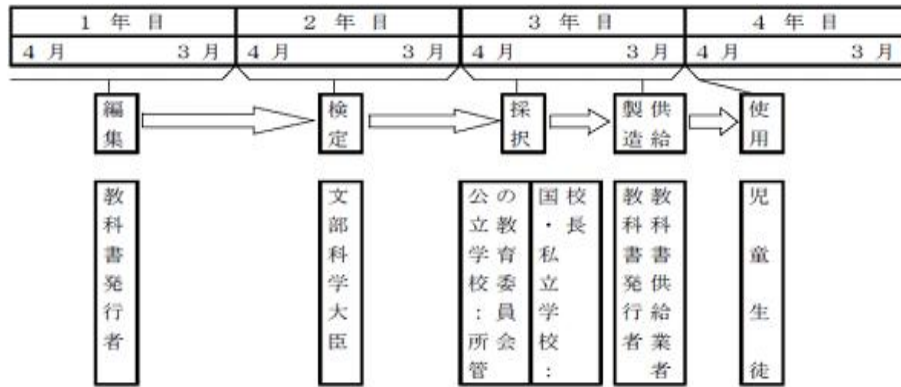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제출용·전시회용·납본용으로 견본 본을 1만 부 인쇄하여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교과서전시회는 47개 都道府縣에서 약 500여 곳의 채택구별로 열린 후, 현(縣)교육위원회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교의 교장, 교원, 교육위원회관계자,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설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검정될 교과서는 통상 1종목(교과서의 교과별로 분류된 단위. 예: 초등학교 국어(1~6년),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고등학교 수학 등)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채택은 공립학교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국·사립학교에서는 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를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한다.

(4) 발행(제조·공급)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집계에 근거하여 각 발행자에게 발행해야 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5) 교과서의 무상급여

국·공·사립의 의무교육학교(초·중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의 초·중학교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전 학생에 대하여 국가 부담으로 무상 급여되고 있다.



<그림> 교과서가 사용되기까지의 과정

VI. 결론

지금까지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차이,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신학습지도요령의 특징 및 교과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습지도요령에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며 개정의 취지, 방향, 배경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라 하겠다. 영토문제가 포함되는 소학교 5학년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러시아 연방의 북방영토를 ‘불법’ 점유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도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이미 ‘우리 국가의 국토에 대한 인식을 일층 심화’ 한다고 하는 내용의 ‘개선 방향’을 두어 독도에 대한 언급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2001년 후쇼사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검정, 채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그 해설서부터 ‘독도 표기’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의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독도'가 이번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가 된다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모든 일본의 중학생들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는 일본이 더 이상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고 자국사와 자국영토에 대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바른 지리교육, 역사교육을 시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서술의 변화

신 주 백(국민대학교)

1. 발표에 앞서

■ 인간의 기억은 堆積되어 가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당시의 상황과 처지, 가치관 등에 따라 과거의 경험은 새롭게 재생산된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을 놓고도 달리 기억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시도되는 제도화된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서 지배한 역사적 사실,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도 한국과 일본이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거칠지만 발표문은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그것의 변화를 추적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¹⁾

■ 주안점 : ① ‘한일병합’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과 그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② 일본이 한국에서 실시한 지배정책과 여기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1) 발표문은 새로운 내용을 분석했다기 보다, 발표자 그동안 발표한 아래 논문을 기저로 작성되었다. 특히 『민족주의와 역사교과서』(에디터, 2006.3)에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현행본 : 「南北韓·日·中·臺灣의 歷史教科書 속에 表現된 ‘戰後責任’과 歷史教育」, 『韓日民族問題研究』 2, 2002.4 ;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戰爭과 平和에 對한 記憶의 差異, 그리고 歷史教育 - 동아시아 5개국의 中·高·校用 自國史 및 世界史 教科書를 中心으로」, 『歷史教育』 83, 2002.6 ; 「韓國の新しい 歷史教科書 ‘韓國近·現代史’의 特徵と問題點」, 『日本史研究』 497, 2004.1 ; 「日本右翼 歷史教科書 教師用指導書에 나타난 歷史認識」, 『東方學誌』 127, 2004.9

* 2005년도 검정신청본 및 검정합격본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일 제강점기 및 현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6

* 「한국의 교과서 속에 기억된 8·15, 망각된 8·15」, 정근식 신주백 편, 『한·중·일 3국의 8·15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선인, 2006 ; 「Perception of August 15 Remembered in and Forgotten from Korean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8-1, 2005.3 ;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 『만주연구』 2, 2005.4 참조.

■ 접근방법 : 일본은 미군점령기를 제외하면 검정제이며, 중고교 합쳐 지금까지 수백 권의 역사교과서가 발행되었다.

발표문에서는 東京書籍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현재 일본 중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동경서적에서 출판한 책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²⁾

2. 한·일 역사교과서의 역사 개관

1)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5년 8월 일본은 패전한 이후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의 통치를 받았다. 교과서의 발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GHQ는 1945년 12월 31일 「修身, 日本歴史 및 地理 정지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이제까지 사용되고 있던 세 종류의 교과서를 모두 회수하도록 일본정부에 명령하였다.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1946년 9월 國民學校用的 『くにのあゆみ』上·下, 10월 中等學校用的 『日本の歴史』,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師範學校用的 『日本歴史』上·下が 각각 발행되었다.³⁾

사회과의 하나로 중학교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2년이였다.⁴⁾ 일본이 1951년 GHQ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후 처음 교과서 제작을 시도한 것이다. 1951년도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된 역사교과서는 당시 8개 출판사에서 발행했는데, 사회과 교과서 자체가 4종류였다.⁵⁾ 여기에서 집중 검토할 東京書籍의 역사교과서는 1954년 ‘歴史的 分野’로 처음 출판되었다. 이밖에 청수서원, 중교출판, 학교도서, 삼성당, 일본서적에서 교과서를 발행하였으며, 1955년부터는 대판서적, 교육출판, 제국서원도 참가하였다(9개).

일본 정부 스스로 내외적인 정책목표를 교육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은 1955년도 학습지도요령 개정판부터였다(제2차 개정).⁶⁾ 즉, 9년 의무교육의 방향을 사회과 교

2) 東京書籍의 역사교과서는 出版勞連에서 교과서 점유율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첫해인 1965년에 점유율 31%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이후 中教出版에 2위로 밀렸다. 그러다 1975년 2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다시 1위로 올라선 이후 점유율에서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3) 唐澤富太朗, 『唐澤富太朗著作集 7 - 教科書の歴史』, ぎょうせい, 1988, 326 - 340쪽.

4)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므로, 1951년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은 ‘제1차 개정’이라 한다. 1954년까지 일본사는 ‘일반 사회과’ 또는 ‘총합 사회과’의 일부였다.

5) 일반사회과, 종래의 일본사, 지리적 내용을 주로 하는 것, 역사적 내용을 주로 하는 것,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내용을 주로 하는 것.

6) 제2차 개정판부터 「官報」에 告示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육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지리, 역사, 정치·경제·사회의 세 분야로 사회과 교육을 系統化하였다. 다만, 세 分野마다의 分化的인 指導計劃을 수립하든지(B안), 綜合的인 指導計劃을 수립하든지(A안) 그것의 다양성은 인정하였다. 역사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의 내용 비율을 7 : 3 정도로 규정하였다. 1958년도 제3차 개정에서부터는 제도를 바꾸어 지리(1학년), 역사(2학년), 정치·경제·사회(3학년) 분야를 학습시킨다는 방침을 原則으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사회과 교육제도를 이렇게 정비하는 한편으로, 1955년 상설적인 교과서 조사관제도를 만들고, 교과서검정심의회회의 인원을 16명에서 8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학습지도요령을 기준으로 한 검정을 본격화하였다. 심지어 제3차 개정판에 의거하여 심사된 소학교용 교과서 가운데 82%가 불합격 처리되는 등 국정제도화를 시도하였다. 일본정부는 1958년도 개정 학습지도요령이 처음 적용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1962년에 발행하였다. 교과서 검정제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1962년 발행교과서 때부터 사용 개시 2년 전에 검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역사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는 1962년에 12개, 1966년에 9개, 日本書籍이 역사교과서 시장에서 받을 뻔 1967년의 경우 8개였다.

1969년에 개정된 제4차 학습지도요령은 1972년도 역사교과서에서부터 적용되었다. 역사교과서는 1980년까지 8개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國際冷戰秩序의 變化 등으로 사회과 교육의 현대화를 강조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명시하였다.⁷⁾ 이를 위해 1972년부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地理的 分野’, ‘歷史的 分野’, ‘公民的 分野’로 명칭이 정립되었다. 또 지리와 역사 분야를 기초로 공민적 분야의 학습을 전개한다는 社會科의 教科構造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새로운 교과구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80년까지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만주침략을 ‘침략’으로 표현하거나 日華事變을 ‘中日戰爭’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주저할 정도로 일본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다.

1977년에 다섯 번째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1981년도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이때부터 사회과 교육 내에서 역사교과서는 日本 通史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는 방침이 명확히 되었다. 때문에 일본과 세계와의 관계, 곧 세계의 역사도 이전처럼 많은 분량을 배정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역사의 배경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에서 한정하고 있다. 또한 1981년도에 출판된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특색을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육성”하는데 비중을 두었다.⁸⁾ 일본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영

7) 『改定 中學校 學習指導要領の展開 - 社會科編』, 1977, 3쪽.

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일 것이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1981년도 역사교과서 서술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침략과 지배에 관한 서술의 변화일 것이다. 다음 ‘제3장’에서 확인되겠지만, 이 시기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한국인과 대만인의 징용을 본토의 ‘국민동원’과 달리 ‘강제연행’ 차원에서 서술하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침략’으로 표현하는 교과서가 많이 늘어나는 등 이전과 확연히 다른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서술경향은 1997년도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역사교과서에서 그 절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7년도에 발행된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했으며, 식민지 지배책임과 침략책임, 곧 가해책임의 중심적 근거로 강제연행, 그 중에서도 일본군‘성노예’를 언급하였다.⁹⁾

그런데 침략과 지배 사실에 관한 서술분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가 있었다. 이를 흔히 교과서공격이라 말하는데, 1982년도 일본의 역사왜곡과동, 2001년도 역사왜곡과동, 2005년도 역사왜곡과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1979년부터 일본의 우파 정치인과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2차 교과서 공격의 와중에 불거져 나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문제가 되었던 때는 1982년도였다.

또한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이하 ‘새역모’)로 상징되듯이 1990년대 중반경부터 본격화한 우파 시민단체와 이들을 후원하는 우파 정치인의 제3차 교과서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은 교과서 비판세력의 움직임과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2 ; 2005)라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자신들의 역사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본 국민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확연히 구분된다. 교과서 비판이 일상화한 것이다. 이제 교과서 비판활동은 역사교육이란 측면보다 ‘정치운동’이란 측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 『改定 中學校 學習指導要領の展開 - 社會科編』, 1977, 186쪽. 사회과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

9) 이때까지 학습지도요령은 1988년도와 1998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다. 8종의 2005년도 역사교과서(검정합격본)에서는 2종의 교과서에서만 서술되어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한 분석은 앞의 각주 1)에 소개된 논문 참조. 덧붙이자면,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1994년도부터 일본군‘성노예’ 사실을 서술하였다.

3.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지배

1) 국정기(1946 - 1952)

앞서 언급했듯이, GHQ의 지시로 1946년 문부성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는 『くにのあゆみ』 上·下, 『日本の歴史』, 『日本歴史』 上·下 였다.

먼저 1910년 8월의 ‘한일병합’에 관한 서술을 보면, 『くにのあゆみ』 下에서는 러일 전쟁이 끝난 후 “한국(조선)과는 일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에 “相談을 한 結果 明治43年(西曆 1910年) 우리 나라(일본-인용자)가 한국을 병합하였다”고 나온다.¹⁰⁾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한일 양국 사이에 ‘상당’의 결과라고 하여 침략성을 부정하고 합법적인 지배였다고 강조한 것이다.

『日本歴史』 下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었는데, ‘日韓併合’이란 小項目에서 1905년 乙巳條約 이후의 과정을 거의 2쪽이 다 되는 분량으로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즉, 을사조약 직후 한국인의 저항이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통감부 설치 이후 “庶政은 一新”하였으며,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이후 “한국의 政情은 一變하고 정부의 실권은 완전히 통감에게 옮겨져 병합은 시기의 문제로 되었다”. 이어 伊藤博文이 “一 韓人에게 저격”당한 것이 “병합 추진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일부 한국인 유지의 일한합병건의서”를 받은 일본 정부가 “신중 고려 끝”에 “李首相과의 사이에 병합조약은 調印”되었다고 서술하였다.¹¹⁾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과정이 정당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지 않은 서술태도는, 식민지 조선을 지배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중일관계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5·4운동과 같은 중국인의 저항, 南京大虐殺과 같은 일본군의 잔악한 행위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くにのあゆみ』 下와 『日本の歴史』 下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를 일본의 국내정치와 중일관계를 언급하고, 곧 바로 군부의 정치지배와 태평양전쟁을 언급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그러면서 중국 침략의 원인을 軍部の 獨走와 一部 國家主義者에게 떠넘기고 있다.¹²⁾ 동시에 일본 자신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 고통받고 저항했던 다른 민족의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10) 文部省, 『くにのあゆみ』 下, 1946, 43쪽. 이 책은 上下本을 합쳐 1949년에 다시 검정을 받아 1950년 2월 발행되어 중학교 2,3학년용으로 사용되었다.

11) 文部省, 『日本歴史』 下, 1946, 142 - 144쪽. 이후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韓日間の流動하는 國民的 記憶-歴史教科書에서 安重根義舉와 伊藤博文狙撃事件, 그리고 ‘韓國併合’의 關係(1945~2007)」, 『韓日關係史研究』 26, 2007.3

12) 文部省, 『くにのあゆみ』 下, 48 - 51쪽; 文部省, 『日本歴史』 下, 202쪽

침략과 지배, 그리고 저항의 역사는 일본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야에 넣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군부 등 일부에 떠넘기고 소화천황과 일본국민의 책임에 면죄부를 준 東京裁判의 처리 방침과 일치하는 역사인식이다. 오늘날 일본인들의 不徹底한 侵略責任·支配責任·戰後責任의 내적 배경의 하나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역사인식이 지속되는 것일까. 다음의 ‘검정기’(1953-1974)에서도 GHQ시기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짚어 보겠다.

우선, 침략과 지배를 주도했던 일본의 지배세력이 교체되지 않은 채 다시 권력의 중심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냉전전략·반공전략의 산물이지만, 미국은 東京裁判 등에서 전쟁책임을 극히 일부의 군부인사와 관료에게만 물음으로써 침략과 지배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소화천황의 생존과 지위는 그 상징적인 결과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했던 주장이 뿌리 뽑히지 못한 채 여전히 주류적 역사인식으로 일본사회에 자리매김 되어 갔다. 그들로서는 자신의 과거행위를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재집권의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 같았던 것이다.

셋째, 일본은 연합국에 패전함으로써 식민지를 갑자기 상실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인) 자신이 피지배민족의 강력한 저항과정에서 상실의 고통을 겪은 경험도 없었다. 아니, 침략과 지배 당시에 피지배민족의 저항이나 현지의 실상을 본국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 국민 자신이 애초부터 현지 정보에 관해 격리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이탈은 용이했던 것이다. 더구나 식민지를 한순간에 강제로 상실당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입장에서 침략과 지배행위를 되짚어보거나 자기비판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곧 바로 관심의 영역에서 지워지는 한편, 일본사회 자체가 패전의 충격과 이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현실적 처지에 놓여 있었다.

넷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일본 본토 자체가 전투현장이 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일본군이 저지른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일본 국민이 제대로 알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는 와중에 1945년 3월의 동경대공습, 1945년 8월의 원자폭탄 투하 등으로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다섯째, 일본 지식인 집단의 불철저하고 허약하며 독특한 인식(사상) 때문이었다.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본 근대사에서 식민지가 시야에 들어와 역사서술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들어와서라는 사실에서 이를 시사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의 전

후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는 일본인 자신이 싸워서 획득한 것이라기보다 GHQ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다.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며 제도를 바꿔가는 과정을 밟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주류 지배집단과 지식인들은 탈아입구·탈아입미(脫亞入歐·脫亞入米)를 인식(사상)의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아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 편입해야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독일과 달리 반성해야 할 이유가 절박하지 않았던 것이다.

2) 과거에 눈을 감은 맹인기(1953 - 1974)

1954년에 검정을 받고 출판된 동경서적의 교과서 역시 ‘국정기’ 때 ‘한국병합’을 보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관련 부분의 목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7장 근대사회는 어떻게 해서 건설되었는가 - 근대사회 I (인용자)

3. 국제적 지위의 향상

(1) 대륙에의 진출 (2) 조약개정과 국외시장의 확대 (인용자)

제8장 근대사회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 근대사회 II

1.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의 움직임

(1)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 (2) 세계평화회의의 노력 (3) 정당정치
(4) 경제가 변천하다 (5) 사회의 불안

2. 태평양전쟁

(1) 대륙에의 진출 (2) 군부의 독재 (3) 日華事變
(4) 제2차 세계대전 (5) 태평양전쟁

제9장 새로운 일본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 근대사회 III (인용자)

한국병합에 관련한 부분은 제7장의 ‘3.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1) 대륙에의 진출’에서 언급하였다. 즉, 러일전쟁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해 커다란 세력을 갖게 되었고, 10월 8일에는 조선(1897년, 국호를 한국으로 바꾸었다)을 병합하였다. 이리하여 대륙에 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만주에 점차 진출”하였다.¹³⁾ 그러면서 역시 조선을 강제로 지배했다는 언급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배를 당연시 하였다. 러일전쟁을 일본방위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만주로 ‘진출’한 것(9사 교과서 모두 일화사변)으로 보고 있으니 한국병합에 관한 서술이 지배·침략으로 기술한다면 스스로 모순된 관점을 드러내는 것

13) 『新しい社會③ - 日本の社會の發展』, 東京書籍, 1954, 140쪽.

이다. 더구나 1957년도판 일본서적 대판서적 교육출판 제국서원, 중교출판은 친일파를 ‘독립당’이라 부르는 등 진보적인 세력으로 위치지우고 있고, 러일전쟁이 아시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서술이 일본서적, 중교출판, 학교도서의 교과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1923년의 關東大地震에 관해서는 ‘제8장 1절’의 ‘(4) 경제가 변천하다’라는 곳에서 별도의 小項目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불경기가 더욱더 심화되었다는 점만 서술하고 있을 뿐 일본인에게 한국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한 피해 등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¹⁴⁾ 따라서 GHQ시기의 역사교과서처럼 1954년판 동경서적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문제, 그리고 저항하는 한국인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전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1955년 檢定合格本에서도 마찬가지로였으며, 관동대지진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¹⁵⁾ 또한 침략과 지배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관점은 GHQ시기의 역사교과서처럼 군부 등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역사인식으로 이어졌다.

한국병합에 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도 검정합격본에서도 한국 지배의 합법성을 더욱 깔끔하게 서술하며 우측에 사진까지 곁들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3) 일로전쟁과 동아시아

(인용자)

한국병합과 만주진출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도적 입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로전쟁 뒤,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고, 외교와 내정을 감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인 사이에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1910년(명치43) 결국 한국을 병합하였다.

* 각주 : 조선은 1897년 국호를 한국으로 바꾸었다.¹⁶⁾

인용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병합’이 독립된 하나의 소항목으로 언급되지 않고 ‘만주 진출’의 교두보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1957년도 판에서는 ‘침략’이란 용어 사용). 더구나 ‘보호국’과 ‘감독’이란 용어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부당한 지배의 측면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

14) 『新しい社會③ - 日本の社會の發展』, 東京書籍, 1954, 163 - 164쪽.

15) 『新編 新しい社會③ - 日本の發展』, 東京書籍, 1957, 153쪽; 『新しい社會④ - 世界の發展, 現代の動き』, 東京書籍, 1956

16) 『新しい社會』2, 東京書籍, 1966, 250 - 251쪽.

함으로써 아시아민족에게 자극을 주었다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이상, 일본이 만주로 진출했지 침략한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한국병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등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강조하려는 伏線인 것이다. ‘한일병합’에 관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서술경향은 東京書籍의 교과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1966년도에 점유율 37.5%로 1위를 차지했던 中敎出版, 14.1%로 3위를 차지했던 日本書籍의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병합의 합법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은 文部省의 檢定指導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아주 강하였다. 문부성은 1964년 검정심사본을 제출한 사회과 교과서의 집필자들에게 “조선·중국에의 침략… 일본의 입장에서 하면 침략이라는 말은 이상하다. 일본의 교과서이므로 표현을 바꾸라”, “일본이 조선에 進出했다라는 표현은 一方的이다. 상대방에게도 나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기술하라” 등등의 수정요구를 하였다.¹⁷⁾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檢定合格本에서는 ‘침략’ 대신에 ‘진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에 관해 언급한 교과서가 없는 것도 문부성의 검정지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령 中敎出版의 『일본과 세계의 나라들』에서는 수풍댐 건설을 언급했는데, 문부성은 검정지도를 통해 70만KW를 생산하는 수풍발전소가 당시 世界 有數의 댐 가운데 하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요구 하였다. 이것이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사례를 강조하도록 하여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려는 검정의도라면, 그 반대의 검정의도를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가령 日本書籍의 『中學社會』에서는 ‘식민지 시대 조선’이란 소항목을 설정하고, 수풍댐과 비료공장 등의 건설, 교육, 강제연행, 재일조선인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모두 삭제당하여 검정합격본에 실릴 수가 없었다.¹⁸⁾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은폐하려는 검정의도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서 3·1운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였다.¹⁹⁾ 심지어 1965년도 檢定合格本에서는 처음으로 5·4운동을 언급하였는데 그 원인을 靑島강화회의의 결정에 대한 중국인의 불만에서 찾았다.²⁰⁾ 중국인의 항일행동을 왜곡한 것이다.

지배와 침략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전쟁의 반성 등은 어린이와 관계가 없다”고 하며 필자들에게 수정요구를 하는 것으로까지 표출되었다.²¹⁾ 때문에 이러한 검정지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17) 『教科書レポート』 13, 1966.1, 34 - 35쪽.

18) 『教科書レポート』 13, 1966, 5쪽. 두 출판사의 교과서 1964년도 白表紙本인지 아니면 1950년대에 심사를 받은 교과서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19) 1965년도 검정심사본도 적용받았던 ‘학습지도요령 제3차 개정판’에 의해 출판된 1962년도 교과서 12종 가운데 3·1운동을 언급한 책은 단 3개 출판사의 교과서 뿐이었다(함창조, 「일본역사교과서들에 날조되고 있는 조선관계 서술비판」, 『력사과학』 2, 1967, 39쪽).

20) 『新しい社會』 2, 東京書籍, 1966, 273쪽.

1957년부터 1974년도까지 사용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모두 만주침략을 ‘일화사변’이라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을 ‘침략’했다는 서술기조가 위축되었다. 역사교육을 통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린 일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달리 말하면,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본이 발표된 시점인 1965년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맺게 된 시점에서 과거사를 더욱 강하게 왜곡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며 교과서를 기술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즈음부터 일본이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일본인의 정서도 반영되어 근대 일본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려는 서술 태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3) 주변에 시선 두기와 국제교과서과동 (1975 - 1984)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형식은 1969년도와 1972년도에 발행된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도 역사교과서부터였다.

(3) 일로전쟁과 동아시아

한국병합과 일본의 식민지정책 포츠머스조약으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자,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관리하고, 통감부에서 내정·경찰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하여, 朝鮮 全土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군대를 출동시켜 이것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1910년,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조약에 조인시켜, 조선을 식민지로 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토지조사를 실시, 그 때문에 많은 조선인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소작인으로 되고, 浮浪人으로 되고, 이윽고 일본에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한 조선사를 가르치는 일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사이에 조선인을 차별하는 의식이 강해졌다.²²⁾

21) 『教科書レポート』 13, 1966, 35쪽.

22) 『新訂 新しい社會 - 歴史的分野』, 東京書籍, 1975, 246-247쪽. 글자의 크기 차이는 원문대로 이다.

앞서 인용한 1966년도 교과서와 비교할 때 국제적 지지를 언급한 부분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을 이전보다 강조하였고, 일본군이 이를 진압했다는 점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항목의 제목에 ‘식민지 정책’이란 말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저질렀던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전과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이 부분이다. 일본의 근대사에서, 또는 일본의 대외침략 과정에서 한국을 지배했고 그것이 문제였다는 관점이 역사교과서에 처음으로 서술된 것이다. 같은 시기 日本書籍, 教育出版의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술경향은 1978년도판 교과서에서 더욱 확대되어 중학교의 모든 역사교과서에서 일반화하였다. 더구나 식민정책을 언급하면서 동경서적의 교과서처럼 ‘부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서술기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學校圖書의 1984년부터 1986년판본과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扶桑社版을 제외하면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서술기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한국인이 일본의 지배에 그저 순응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3·1운동을 언급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즉, 小項目을 설정하고 인도의 비폭력운동, 중국의 5·4운동을 언급한 이후에 3·1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와 일본
.....(인용자)

아시아의 움직임 ... 조선에서도, 동년 3월 1일에, 경성(서울)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이 일어났다(3·1운동). 이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 받고 있던 민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각지로 확산되었지만, 일본의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²³⁾

또한 전시동원체제 아래에서 한국인의 생활도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3) 태평양전쟁 (인용자)

전쟁과 국민생활...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까지도 강제적으로 데려 와서, 가혹한 조건 아래, 탄광 등의 중노동에 종사시켰다.²⁴⁾

이처럼 식민지 정책에서 또 하나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강제적’이란 용어를 사용하

23) 『新訂 新しい社會 - 歴史的分野』, 東京書籍, 1975, 267쪽.

24) 『新訂 新しい社會 - 歴史的分野』, 東京書籍, 1975, 288쪽.

며 전시동원체제가 인력동원이 강제동원이었음을 사실상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敎育出版, 淸水書院도 이와 같이 기술하였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조선인의 인력동원을 처음 언급한 출판사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사용된 日本書籍이다. 하지만 이때는 ‘징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판 역사교과서부터 강제동원이었음을 언급한 교과서가 등장하고, 이후 1978년도판에서는 學校圖書, 中敎出版의 교과서도 이 흐름에 합류한다.

東京書籍 등의 교과서가 1975년부터 강제인력 동원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급격히 조선에 관한 부분을 보강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1969년도와 1972년도 역사교과서의 ‘감수자’와 ‘편집위원’이 거의 그대로이고, 1975년도 역사교과서는 1971년도 것과 마찬가지로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적용된 1969년도의 ‘학습지도요령 제4차 개정판’에 입각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1965년 한일협정과 1972년 중일수교 및 미일공동성명은 대외침략과 지배의 일본근대사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역사서술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의 관여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²⁵⁾

둘째, 일본 역사학계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1968년은 明治維新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역사학계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근대사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더구나 제일조선인 역사학자 박경식은 1960년대 중반경부터 일본에 의한 조선인 강제연행 사실을 일본사학계에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²⁶⁾ 그는 강제연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이었다고 밝혔다.

셋째, 이에나가 사부로를 중심으로 한 제2차 교과서 소송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제2차 교과서 소송은 ‘일·소 중립조약’ 등 여섯 가지 서술에 관한 ‘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여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교육이론과 법이론에 명쾌한 판결을 내려주었다(杉本判決). 즉, 1970년 7월 동경지방법재판소는 ① '국가의 교육권'과 '국민의 교육권' 가운데 어떤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가, ② 역사교육이 국가에 의해 국민을 교화시키는 수단으로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진리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③ 검정이란 이름 아래 학설을 포함하는 교과서 집필자의 사상까지 심사하는 것은 올바른 검정기준인가 아닌가라는 쟁점 가운데 모두 후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관한 서술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

25) 「東京書籍의 中學校 歴史敎科書を 통해서 본 滿洲事變」, 2004년도 북경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참조. 완성된 논문은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

26) 이를 모은 성과물이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未來社, 1965)이다.

다. 1978년도판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이 만주에 눈독을 들인 것은 소련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해서였다는 관점이 사라졌다. 대신에 ‘浸出’ ‘侵攻’이란 용어를 사용한 교과서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日華事變’이란 용어도 사라졌고, 대신에 ‘日中戰爭’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더구나 教育出版의 1980년판에서 처음으로 南京事件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遼東半島의 남쪽을 租借하고 南滿州鐵道株式會社를 설립한 것을 여전히 ‘滿洲로의 進出’이라고 표현하거나, 1931년 滿洲事變부터를 ‘大陸進出’이라고 표현하는 교과서가 대세였다.

한편, 1980년도 檢定合格本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3·1운동에 관한 서술부분이다.

1. 제1차 세계대전과 아시아 (인용자)

아시아의 민족운동 ...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경성(현재의 서울)에서, 지식인 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 받고 있던 민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것을 **3·1운동**이라 부른다. 운동은 일본의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은 그 후에도 조선의 내외에서 계속되었다.²⁷⁾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소항목의 제목에 ‘민족운동’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전처럼 단순히 움직임 내지는 동향 정도로 無色無臭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반제국주의와 접목시켜 명시적으로 언급하려는 서술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저항이 3·1운동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계속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지배에 저항한 한국인의 활동이 지속된 사실을 일본학생들이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교과서는 3·1운동 이후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운동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서술태도는 현행 역사교과서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1982년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둘러싸고 역사왜곡과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해 아시아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큰 파동이였다. 그래서 1981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底本으로 하는 1983년도 檢定合格本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전쟁과 국민생활’이란 부분에서 본문은 그대로이지만, 脚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27)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980檢定合格本, 267 - 268쪽.

戰時下가 되자, 정부는,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더욱더 강력하고(->237쪽),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신사에 참배하는 것, 성명을 일본 풍으로 바꾸는 것(創氏改名) 등을 강제하였다.²⁸⁾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한국인의 삶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은 이전보다 더 식민 정책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원한 사실에 대해 엄연히 다른 관점이 병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강제동원을 기술하려는 측이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문부성은 “많은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일본 본토에 이주되고”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당시 조선은 일본령이고, 국민징용령에 기초하여 모았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하며 개정을 ‘지시’하였다. 또한 노동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약 150만의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일본(내지)으로 보내져, 탄광이나 광산·토목 공사장 등에서 엄격한 감시 아래 空腹·피로·병기·겨울의 추위를 참고 일하게 되었다”고 기술된 부분에 대해 “국민 일반의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여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침략과 가해의 부분이 정확하게 복구되는 것을 저지했던 것이다.²⁹⁾ 결국 1937년 이후 시기의 동원역사를 기술할 때, 국민동원의 역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강제동원의 역사로 볼 것인가를 놓고 다른 관점이 있으며, 문부성은 전자의 관점을 교과서 필자에게 강요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국제문제화는 만주에 대한 서술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1980년 東京書籍의 검정합격본에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대륙진출’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1983년의 검정합격본에서는 中項目의 제목을 ‘3. 세계공황과 일본의 중국침략’으로 설정하여 ‘침략’을 명확히 했다.³⁰⁾ 다만, 1983년도 검정합격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에 21개조를 요구하는 문제 등을 언급한 소항목의 제목이 ‘일본의 중국진출’로 되어 있는 경우, 만주사변의 배경을 언급할 때 ‘진출’로 서술한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교과서 내에서조차 서술이 아직 일관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반성적 성찰과정에서 나온 고백의 결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1982년도 역사왜곡과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近隣諸國條項’이란 새로운 검정기준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측의 저간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할 점은, 1982년도 역사왜곡과동은 일본 역사교

28) 『改訂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983檢定合格本, 284쪽.

29) 『教科書レポート』 24, 1980, 31쪽.

30) 『改訂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983檢定合格本, 268쪽.

과서의 서술 내용을 크게 바꾸도록 한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³¹⁾ 과동은 1975년경부터 내외적 요인에 의해 조금씩 바뀌어 가던 변화에 좀 더 확실한 가속도를 붙이도록 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히려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원동력은 연구성과의 진전과 더불어 '제3차 교과서소송'이었다. 즉, 1980년 교과서를 개정하여 검정을 신청한 이어나가 사부로는 1983년에 통보받은 문부성의 검정 의견이 이전과 마찬가지로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1980년의 검정 때 '일본의 침략이라는 용어', '남경대학살', '일청전쟁에서 조선인민의 반일저항', '731부대' 등 사상심사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을 선정, 교과서 검정이 위법·위헌이므로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³²⁾

4) 교과서의 본격적 개선과 반격 (1984 - 2001)

앞의 시기에 일어난 일제강점기 서술에 관한 변화를 이어 받으면서도 1982년도 일본 역사교과서의 국제적 파문을 계기로 침략과 지배를 둘러싼 내용이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도판부터였다. 위에서 인용한 '한일병합', 3·1운동,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한국인의 생활에 관한 서술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과서 재판 등 시민운동의 성과와 학계의 연구를 나름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1987년도판부터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강제연행에 관해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경향은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연결시키는 서술방식을 취하지, 전후 동남아시아의 독립과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연결시키는 관점이 폐기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4년에는 清水書院만이 동남아시아에의 침략이란 관점을 견지했다면, 1987년에는 대판서적, 종교출판, 교육출판, 청수서원, 동경서적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공격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려는 관점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려는 관점, 곧 15년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일관된게 보려는 역사관과도 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만주사변과 중

31) 1982년 과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朴成壽 著, 『일본 교과서와 韓國史의 歪曲』, 民知社, 1982, 279-319쪽 참조. 한국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신주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1965~2001) -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6 참조.

32) 최종 판결은 1997년 8월에 있었다(일명 大野判決). 재판부는 검정제도가 합헌이며, '731부대'에 관한 전문을 삭제하라는 '수정의견' 등 네 항목에 대해 문부성의 지시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원고측에 40만엔을 지불하라고 선고하였다. 원고측이 부분적으로 승소한 것이다.

일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위치지는 관점은 1987년도판 모든 교과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강제연행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침략전쟁이란 관점을 견지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는 일본정부의 교과서정책은, 일본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2년 역사왜곡과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역사왜곡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등 일본인 개개인의 대외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세계경제의 리더로 성장한 일본은 1980년대 들어 해외투자 활동을 왕성하게 벌였다. 그중 하나가 동남아시아지역,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늘렸다.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일본의 광역경제권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였다. 그런데 역사갈등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를 체험한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에 역사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하였다. 더구나 1982년 11월에 등장한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의 ‘국제화’를 선언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정치적 지도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외교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런데 침략과 지배책임의 문제가 이를 방해한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와 기업인들은 역사문제가 외교정책과 경제활동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2의 역사왜곡과동’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1990년도 역사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관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한국인의 저항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3. 파시즘과 일본의 중국침략

.....

일중전쟁... 이 무렵 조선에서도 일본에 대한 저항조직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한, 조선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중에는 金日成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유격대를 조직한다든지 조선의 조항조직과 연계한다든지 하여 조선독립 투쟁을 계속한 사람들이 있었다.³³⁾

1930년대 국내외에서의 항일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在滿韓人祖國光復會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직접 거명하고, 그의 항일투쟁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저항이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며, 중일전쟁이란 와중에 한국인도 싸웠다는 사실을 일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서술은 2001년도 교과서까지 계속 나왔다가

33) 『新訂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1990, 280쪽.

2002년판 교과서에서는 생략되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진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즉, 동원되어 조선신궁에 참배한 조선 학생들의 사진(1990년 - 2001년), 동원된 한국인 日本兵의 사진(1993 - 현재), 그리고 의병 사진(1993 - 1996년) 등이 새로 등장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이해시키는데 아주 좋은 자료이다. 이것은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제시하여 해당 주제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책임, 식민지책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려는 흐름의 정점에 1997년도에 발행된 역사교과서 곧, 모두 7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993년도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은 일본의 가해책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역사적 진실로서 일본의 대외이미지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우파의 역사적 존립기반 내지는 명분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역사문제였으므로 일본의 우파로는 이에 대해 적극 반격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의 우파는 1995년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이름으로 『大東亞戰爭の總括』을 발행하였고,³⁴⁾ 1997년 1월 ‘새역모’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제3차 교과서 공격을 벌였다.

5) 교과서 공격에 따른 진실의 위축과 역사갈등의 심화(2002 - 현재)

제3차 교과서 공격은 2002년도, 2005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이전과 크게 달리 기술하도록 만들었다. 조선에 관한 서술만이 아니라 일본근대사의 중심축인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서술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된 것이다.

첫째, 일본의 강제성, 수탈성에 관한 서술이 크게 후퇴하였다. 2006년도판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관한 간접적인 서술은 일본서적신사, 제국서원의 교과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나마 있던 2002년도판 清水書院의 교과서에서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전후책임과 관련하여 강제동원에 관한 사실적 언급, 이후 전후보상 재판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많은 교과서들이 컬럼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해 왔으나, 2006년도판에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동원과 관련된 조선인에 관한 사진을 수록한 경우도 없다. 결국 타인에게 가한 고통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존을 위한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반성적 역사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실은 그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식민지 지배의 실상에 대한 풍부한 서술의 후퇴는 조선인의 항일운동에 대한

34) 1995년 8월 15일 展転社에서 출판하였다.

언급을 회피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실 1997년에 발행된 중학교의 7종 교과서 가운데 東京書籍, 大阪書籍, 帝國書院, 日本文教出版, 教育出版에서 3·1운동을 언급할 때 東京書籍처럼 ‘독립운동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맥락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2002년에도 大阪書籍은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과 만주항일무장투쟁 등을 언급하였다.³⁵⁾ 그런데 2006년도 大阪書籍의 검정신청본만이 유일하게 3·1운동 관련 부분에서 이후에도 저항운동이 계속되었다고 언급한 이외에 별도의 항목에서 ‘광주학생사건’이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도만 짧게 언급되어 있다. 이밖에 東京書籍의 교과서처럼 3·1운동 부분에서라도 간략히 언급한 경우는 日本文教出版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고 독립을 위한 조선인의 몸부림이 3·1운동 이후 없었던 것처럼 일본인 학생들에게 이미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셋째, 그런데 이러한 서술 경향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45년 8·15를 조선인은 어떻게 맞이했는가에 대한 역사인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東京書籍 207쪽에는 “2. 두개의 세계와 아시아”의 “식민지의 해방과 아시아”란 소항목에서 “조선은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만” 곧 바로 분단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우리의 역사교육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조선인 나름대로의 ‘건국 준비’에 대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거나, 조선인의 저항이 1940년대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일제강점기 주권을 되찾기 위한 조선인의 노력, 내지는 전시동원체제에 저항한 조선인의 주체적인 움직임 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좀 더 과장되게 나아가면 한국인 멸시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이어 扶桑社의 검정신청본과 검정합격본에 대해 검토하겠다. 扶桑社 역사교과서가 현행본과 가장 크게 다른 特徴은 이전에 비해 改惡되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歴史教科書와 歴史教育이 새역모의 政治運動을 위한 手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데 있다.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扶桑社의 검정신청본은 露骨的인 反中國 態度를 드러냈다. 이는 공민교과서에서 反北韓 態度를 露骨的으로 드러낸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대한 서술 태도이다. 즉, 露骨的인 親美 態度이다. 검정신청본에서는 미국에 대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관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1908년 미국함대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인들이 만세를 연호하며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의 ‘역사의 명장면’이란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35) 『中學社會 歷史的分野』, 大阪書籍, 2002, 161쪽. 165쪽. 대판서적의 현행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도 옆 날개에 언급하고 있다.

검정과정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앞의 명장면과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미국이 구호물자로 군용 모포 등을 보내주었는데 일본인들이 고마워했다는 서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괴멸로부터 구제한 아메리카의 외교관”이란 제목으로 1945년 포츠담선언의 주역인 굴 미국 국무장관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211쪽). 反美를 포기한 親美 態도와 극단의 위치에 反中國과 反北韓이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그 전환점은 2001년 9·11 테러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대다수 지배층이 미국의 보복작전을 지지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더욱 노골적으로 주장했으나, ‘새역모’의 핵심이었던 고바야시 요시노리 등은 미국의 대응을 그들의 글로벌리즘의 소산으로 간주하고 빈 라덴의 테러를 일방적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새역모 지도부가 내분에 휩싸인 상황에서 전자의 입장(미국의 보복작전 지지, 자위대 해외 파병)을 지지하고 새역모를 정비한 사람이 니시오 간지였다. 대신에 반미주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새역모에서 이탈했다. 새역모는 이때부터 반미주의를 접고 친미주의로 돌아섰다. 이는 일본 우파의 주류가 전통적 보수 본류의 입장인 반미주의자에서 소수파였던 친미주의자로 바뀐 것을 의미하였다. 일본 지배층 내부에서 헤게모니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02년 일본인 납치를 북한에서 시인한 사건이었다.

사실 1990년대 들어 일본 우파의 주류는 냉전이 해체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때 글로벌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군사대국화는 그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일본 우익의 주류, 가령 고이즈미 내각은 두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을 맹주로 한 군사질서에 참여하여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WTO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대내적 내셔널리즘을 선도하고, 해체 중인 일본사회의 통합을 다시 강화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할 수 있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扶桑社의 역사교과서는 바로 이 세력 기반을 확장시키는 매개물이다.

동아시아 전략이란 측면에서 보면, 우파의 주류는 미국의 세계전략 아래 우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권 등 남한의 ‘친북 좌파’를 제외한 세력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 대만까지 독립시켜 이들과도 동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봉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는 평화로워질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일’ 카드 또한 사라질 것이고 결국엔 중국공산당 정권이 와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역모는 이러한 전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세대를 30년간 양성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들이 역사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扶桑社의 교과서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교류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 역사왜곡문제를 단순히 ‘일본의 문제’ 또는 ‘교과서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넷째, 扶桑社 교과서의 과도한 수정은 오히려 새역모의 역사관의 모순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후소사의 교과서는 대동아공영권을 긍정하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여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修正表에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정정한 기술을 하고 있지만, 검정신청본에 새로 보강된 사진과 서술내용, 특히 사진과 인용문은 전혀 삭제 내지는 수정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출판사 스스로 하지도 않았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대동아전쟁이 동남아시아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사진과 글을 상단과 옆 날개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修正表에 따르면 이에 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동아공영권의 일원인 중국과 한국에 관한 부분에서는 고통을 주었고 저항을 받았다는 점도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 ‘근대화’라는 단어조차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검정과정에서 생략하였다. 해방전쟁으로 기술하려면 중국과 조선에서도 ‘황국신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조선과 중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정 결과는 전쟁의 주체가 갖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로 벌어진 일인데 한쪽에서는 해방전쟁이라 서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자 식민지 지배와 침략사실을 대폭 보강하여 서술함으로써 모순된 역사인식을 교과서를 통해 조장하고 있다.

이는 새역모와 문부과학성 스스로가 모순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검정신청본과 검정합격본 사이의 현격한 내용의 차이는 새역모 관계자들의 교과서 집필역량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렇게 무리하면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의문은 일본의 ‘성노예’에 관한 서술에서도 확인되듯이, 동일한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검정 시기에 따라 敍述의 可否가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검정과정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걸러내는 것이며, 특정한 역사인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주변국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건데 교과서 검정에 학문적이고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도 많이 반영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만 日本書籍新社를 비롯한 많은 검정신청본이 침략사실의 인정과 반성, 식민지 지배의 어

두운 측면과 피지배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에 주목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 *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사’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 교과서이다.
- *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기술했다’는 것이 갖는 현재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 * 역사문제와 우리의 진로 - 역사대화의 현재와 미래의 의미

일본 세계사교과서의 전근대 한일관계 분석

김 은 숙(한국교원대학교)

1. 머리말

일본의 세계사 교육에서 전근대 한국사는 과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전근대 한국 관련 서술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지리역사과에 『세계사』와 『일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계사』는 필수, 『일본사』는 선택과목이다. 이는 중학교 사회과에서 배우는 「역사」가 일본사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행 『學習指導要領』에 의하면 『세계사』와 『일본사』는 A와 B로 나뉘는데, A는 2단위 과목으로 근현대사 중심의 주제적 구성, B는 4단위 과목으로 통사체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의 「역사」에서는 세계사를 일본역사의 배경으로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세계사』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세계사 전체를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사』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인 만큼 여기에서 서술된 내용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분석할 교과서는 2007년 검정을 통과한 「세계사A」 교과서 2종(東京書籍, 實教出版)과 「세계사B」 교과서 3종(清水書院, 山川出版社, 帝國書院)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이 어떤 학습목표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서술내용이 과연 적절한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일본 교과서 내용을 규정하고 구속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세계사A』 교과서의 검토

1) 『학습지도요령』 「世界史 A」와 동아시아사

현행 『學習指導要領』은 1999년에 개정된 것이다. 「世界史A」는 학생들에게 현대세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변동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1989년 『學習指導要領』 개정 때에 신설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근현대사를 중시하여 전근대사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흐름과 특질을 개

관하도록 하였다. 현행 『學習指導要領』에서는 「世界史A」를 근현대세계의 형성과정을 일본의 역사와 관련지우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전근대의 내용을 한층 정선하고 16세기이후의 세계의 일체화과정을 증시하였다고 한다¹⁾.

「世界史A」는 (1)諸 地域世界와 交流圈, (2)일체화하는 세계, (3)현대의 세계와 일본으로 구성되었다. (1)에서는 전근대 유라시아의 동아시아세계, 남아시아세계, 동남아시아세계, 이슬람세계, 유럽세계로 나누어 각 지역세계가 고대, 중세의 일본이 동아시아세계의 책봉체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아시아해역에서는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시키도록 하였다. (2)에서는 일체화로 향하는 세계 속에서 근세의 일본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세계사 속에서 일본역사의 위치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편성한 것이다.

현행 『학습지도요령』 「세계사A」에서 한국사는 과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본고에서 검토할 한국 전근대시대에 해당되는 곳은 ‘(1)諸 地域世界와 交流圈’, ‘(2)일체화하는 세계’이지만,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한국사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해설』을 통해 한국사가 동아시아세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조선²⁾, 베트남 등에 이르는 농경지대와 내륙에 펼쳐진 유목지대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고 동아시아세계의 역사 전개 속에서 배양된 사회·문화의 특질을 파악하도록 하면서, 풍토, 생활, 언어, 사상 등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세계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

『학습지도요령해설』에 의하면 「世界史A」에서 동아시아세계 관련 서술이 등장하는 곳은 ‘(1)여러 地域世界와 交流圈’이다. 여기에서는 ‘ㄱ동아시아세계’, ‘ㄴ남아시아세계’, ‘ㄷ이슬람세계’, ‘ㄹ유럽세계’, ‘ㅇ유라시아교류권’으로 나누어, 유라시아에 형성된 여러 지역세계의 특질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이후 세계의 일체화로 이어지는 交流圈이 성립하였음을 깨닫도록 하였다⁴⁾. 동아시아에 관한 내용은 ‘ㄱ동아시아세계’와 ‘ㅇ유라시아교류권’에 보인다.

‘ㄱ동아시아세계’에서는 동아시아의 풍토와 여러 민족, 한자문화, 유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세계의 특질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세계’는 농경민과 유목민이 대립하거나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었으며,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인 漢字가 이 세계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

1) 文部省『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1999,10쪽.

2)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는 ‘조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중국, 일본,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지역명으로 나온 것이다. 즉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세계’의 무대의 일부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책, 15-16쪽.

4) 文部省『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1999,15쪽.

그리고 漢字를 원형으로 하는 文字가 동아시아 각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중국화한 불교가 동아시아세계에 퍼져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 유교가 중국 역대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주변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체제에 기초하였다는 점이 다른 지역세계와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⁶⁾.

‘오유라시아의 교류권’에서는 (㉞)海域세계의 성장과 유라시아, (㉟)유목사회의 팽창과 유라시아, (㊱)지중해해역과 유라시아, (㊲)동아시아해역과 유라시아로 나누어, 8세기 이후 여러 지역세계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유라시아 규모의 교류권이 성립한 것과 그것을 뒷받침한 도시와 항구의 네트워크를 파악시키도록 하였다⁷⁾.

동아시아와 관련한 서술은 (㉞)(㉟)(㊱)에서 보인다. 우선 (㉞)에서는 8세기 이후 무슬림상인의 인도양 진출과 10세기후반 이후의 중국 상인의 남중국해 진출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남부의 여러 해역을 연결하는 해역세계의 성립과 네트워크의 개요와 교류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였다⁸⁾. (㉟)에서는 내륙아시아의 기마유목민, 오아시스 도시민의 활동을 중심으로 육상 네트워크의 성장과 몽골에 의한 유라시아의 일체화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특히 13세기에 몽골이 내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세계와 동아시아세계를 통일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것과 그 제국의 구조와 네트워크, 이슬람상인의 역할 등에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⁹⁾.

(㊱)에서는 동아시아해역이 몽골제국의 흥망이나 명의 정책과 밀접히 관련을 가지면서 교류권으로서 성장한 것을 언급하고 교류의 여러 모습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대에 황해와 동지나해역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陸海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교류권이 성립한 것, 원의 쇠퇴로 교류권이 혼란되면서 왜구의 활동이 시작되고 명에서는 해금책이 취해져 勘合무역이 이루어진 것, 해금책으로 정크 교역권이 축소하자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琉球왕국의 교역활동이 이루어진 것, 16세기에 명의 海防이 완화되면서 중국상인의 사무역이 성장하여 동남아시아해역과도 연결된 大交流圈이 재생한 것 등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¹⁰⁾. 그리고 新安 앞바다 침몰선 등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¹¹⁾.

5) 위의 책, 16쪽.

6) 위의 책, 16쪽.

7) 위의 책, 19-20쪽.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는 실제 수업에서는 이들 주제 중에서 둘 정도를 선택하여 교류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8) 위키 책, 20쪽.

9) 위의 책, 21쪽.

10) 위의 책, 22-23쪽.

11) 위의 책, 23-24쪽.

이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동아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시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2)일체화하는 세계’에서는 ‘A대항해시대의 세계’, ‘아시아의 제국들과 유럽의 주권국가체제’, ‘B유럽·아메리카의 혁명’, ‘C아시아국가들의 변모와 일본’으로 나누어, 16세기이후 19세기까지 세계상업의 진전과 산업혁명 후의 자본주의의 확립을 중심으로 세계의 일체화 과정을 이해시키고, 유럽의 동향과 일본 등 아시아제국의 대응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였다¹²⁾. 동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A, B, C에서 보인다.

A에서는 대항해시대에 유럽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와 접촉하고 교류한 것과 16세기의 세계의 일체화 움직임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항로를 개척하여 일본열도를 포함한 아시아교역권에 들어가게 된 것도 언급하도록 하였으며, 戰國時代부터 통일정권으로 향하던 시기의 일본의 적극적인 교역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였다.

B에서는 아시아의 帝國들의 정치와 사회, 유럽의 주권국가체제의 성립, 대서양 무역의 전개를 다루고 17,18세기의 세계의 특질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아시아의 오스만, 무굴, 청등의 제국의 정치와 사회를 다루고 이 시기에 안정된 지배와 경제의 변형을 배경으로 문화의 황금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과학, 기술이나 크리스티교를 접촉했을 때 각 지역의 반응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가지고 고찰하도록 하였다.

C에서는 유럽 진출기의 아시아 제국의 상황, 식민지화나 종속화 과정에서 있었던 저항과 좌절, 전통문화의 변용, 일본의 대응을 다루어 19세기의 세계의 일체화와 그 특질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이상 『학습지도요령』 「세계사A」에서 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역사의 서술 방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학습지도요령』에서는 地域世界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지역세계의 하나로 海域世界가 새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사학계의 지역 개념은 크게 (1)근대 국민국가보다 작은 단위로서의 지역, (2)일국사를 넘어서 지역의 독자적인 논리가 존재하는 지역, (3)민족, 계급에 따라 일국사의 틀과 관련 없이 국경의 안팎으로 신축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¹³⁾. 이 중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지역세계는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地域世界는 특색 있는 문화와 전통 등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진 독자적인 세계(문화권)이지만,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세계이다¹⁴⁾.

12) 위의 책, 24쪽.

13) 橋谷弘 「日本史における‘アジア地域’」 『歴史評論』 575, 1998, 49-50쪽.

14) “오리엔트·지중해세계, 동아시아세계 등 유라시아대륙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의 세계

일본에서 地域世界를 세계사를 구성하는 단위로 처음 사용한 것은 上原專祿이었다. 그는 개인이 살아가는 역사적 공간으로서 地域, 國, 地域世界, 全地球的 世界를 설정하여, 전지구적 세계가 13 地域世界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¹⁵⁾. 上原專祿이 국가를 합친 지역세계를 상정하였다면, 이후 일본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와 국경이라는 틀을 깨고 국가를 넘어서는 「地域」을 설정하여 국가를 상대화하려는 연구가 1960년대부터 일어나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¹⁶⁾.

위에서 살펴본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아시아세계는 기본적으로 西嶋定生の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¹⁷⁾. 西嶋定生은 일본사의 전개를 규정하는 장을 동아시아에서 구하여 그 장을 성립시키는 주요한 계기를 중국이 주변국가군과 맺는 책봉관계를 전형으로 하는 정치적 국제질서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이 시각을 역사적 문화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확장하여, 한자문화, 유교, 율령제, 불교를 지표로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세계를 상정하였다¹⁸⁾. 西嶋定生은 당의 멸망에 의해 국제정치질서가 붕괴한 후 대신 등장하는 것이 당말 이래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하는 동아시아교역권이라고 하였다. 동아시아세계가 경제를 기축으로 하는 관계로 전환하여 드디어 일본도 이에 포섭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명제국의 등장으로 중국중심의 책봉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하였다¹⁹⁾.

이 책봉체제론은 동아시아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하여, 1970년과 1979년, 1989년의 『학습지도요령』에 보이는 동아시아문화권은 모두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西嶋定生の 책봉체제론에 대해 동아시아의 역사

관을 가진 지역을 가리킨다. 바다와 산맥 등 자연지형에 의해 격리되는 일도 많지만, 지역 세계는 선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개의 지역세계에 걸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뒤에 나타난 유럽 세계·이슬람세계 처럼 시대에 따라 지역세계는 변화도 한다.” (帝國書院 『世界史B』, 7쪽)

- 15) 上原專祿, 「世界史の見方」 『上原專祿著作集』25, 世界史認識の新課題, 評論社, 1987, 489~504쪽(이 내용은 1968년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 16) 地域史 연구의 동향에 관해서는 塚本學 「地域史 研究の課題」 『岩波講座日本歴史』別卷2, 岩波書店, 1975, 網野善彦 「地域史研究の一視點」 『新編日本史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82, 關周一 「中世「對外關係史」 研究の動向と課題」 『史境』 1994 등에 보인다..
- 17) ‘동아시아’적 시각은 근대 일본사학의 출발점에서부터 존재하였다. 19세기말 서구세력에게 받은 충격 속에 일본이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려 하였던 시기에 일본의 사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전체적 역사 속에 일본사를 위치지움으로써 서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연구들은 조선, 중국 등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일본민족을 지배민족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규정되었는데, 그것은 동양사, 일본사를 일관한 근대사학의 특징이 되었다(石母田正, 1963 「近代史學史の必要について」 『歴史評論』 150, 11쪽).
- 18)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日本歴史』 2, 1962.
- 19)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日本史」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83.

를 중국 왕조의 흥망사로 해소해버려 각 지역의 자율적인 역사전개를 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²⁰). 1980년대에 浜下武志는 중국 왕조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는 관계였다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매개로 하여 따로 상호관계를 가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을 강조하고, 琉球나 對馬, 라오스 등의 중계적, 매개적 기능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¹).

海域世界에 대한 관심도 지역세계 연구의 일환으로 촉진되었다²²). 海域이란 海洋의 交易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²³), 浜下武志는 아시아의 海域圈으로 오오츠크, 일본해,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 스루해, 자바해, 반다해, 아라프라해, 코랄해, 타스만해 해역권 등 11개의 海域圈을 제시하였다²⁴).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세계사를 구성하는 지역세계로 地中海海域, 동아시아海域이 보이고 있는데,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사, 경제사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면서 동아시아해역은 倭寇와 琉球가 활약한 세계로 주목받게 되어²⁵)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서술된 교과서에서는 과연 전근대 한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겠다.

2) 實敎出版의 『新版世界史A』

이 교과서에서 처음 한국과 관련된 서술이 보이는 곳은 제1부 제1장의 ‘역사의 무대 동아시아’이다. 여기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동아시아에는 중국·조선반도·일본·베트남북부가 포함된다”고 적고, “또 조선·일본·베트남 북부도 온난한 몬순지대에 있어서 도작이 행해져 중국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유문화를 만들어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동아시아세계’ 지도를 제시하여 ‘조선반도’를 표기하였다. 그러나 함께 제시된 동아시아연표는 기원전 16세기 ‘殷王朝의 성립’부터 10세기 ‘송의 성립’까지 중국왕조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13세기 ‘몽골제국의 성립’을 추가하고 있으며, 사진자료로 제시한 11종의 삽화도 모두 중국 관련 자료 뿐이다. 중국사를 중심으로 하여

20) 犬丸義一, 1966 「世界史の認識とアジア・アフリカ」『歴史評論』190,9쪽. 旗田巍, 1972, 「朝鮮史研究の意義」『歴史評論』270,78-79쪽.

21) 浜下武志, 1989 「東アジア國際體系」『講座國際政治 I』東京大學出版會, 67-69쪽.

22) 이러한 해역세계로 村井章介는 환일본해지역, 환지나해지역을 설정하였다(「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國家」『思想』732, 1985).

23) 歴史學研究會編輯委員會「特輯 海域と地域」『歴史學研究』691, 1996, 1쪽.

24) 浜下武志, 1993 「地域研究とアジア」『アジアから考える』2, 地域システム, 東京大學出版會, 7-8쪽.

25) 田中健夫, 1982 『倭寇』, 敎育社, 高良倉吉, 1993 『琉球王國』 岩波書店

동아시아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이 교과서에는 한국사의 조각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고조선은 보이지 않고 제1부 제1장 1.진한제국의 성립에서 ‘진·전한대의 중국’ 지도에서 한반도에 ‘樂浪’이 표기되었다. 아마도 학습현장에서는 본문의 “기원전 2세기후반 무제는 국력의 회복과 황제권력의 강대화를 배경으로 주변제국에 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유학을 국교로 하였다”와 관련된 설명 속에서 낙랑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한반도에는 가장 먼저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후 한국사관련 내용은 제1부 제1장 제2절 ‘분열의 시대와 수당제국’의 ‘분열의 시대’ 항목에 실린 ‘삼국시대’ 지도²⁶⁾ 속에서 낙랑, 대방의 동북쪽에 고구려가 나오고 있다. 본문에서 한국사 관련 서술은 ‘수당제국의 성립’ 항목에서 수의 고구려원정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²⁷⁾. 이 서술 내용을 통해 수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 고구려가 강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후 한국사 관련 내용은 제1부 제1장 제2절 ‘분열의 시대와 수당제국’의 ‘수당제국의 성립’ 항목에서 ‘수당시대의 동아시아’ 지도에서 신라와 발해가 보이고 있지만²⁸⁾, 이들 나라에 관한 설명은 없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다. 제1부 제1장 제3절 ‘정복왕조와 송’의 ‘당 멸망 후의 내륙아시아·동아시아’ 항목에서는 고려가 신라의 멸하고 통일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다²⁹⁾. 작은 글씨로 적힌 고려의 존속연대를 통해 고려가 10세기에서 14세기후반까지 존재했던 나라이며, ‘요와 북송’ 지도, ‘금과 남송의 대립’ 지도를 통해 요, 금, 북송, 남송 등이 있었던 시대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어서 ‘원의 중국지배’ 항목에서 고려가 몽골제국에 복속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³¹⁾.

그 밖에 제1부 제2장 ‘제 지역세계의 교류’의 ‘선택2 유목사회의 팽창’에서 고려에

26) 『新版世界史A』實教出版, 16쪽.

27) 위의 책, 16-17쪽.

28) 위의 책, 17쪽. 隋唐帝國의 성립 “수는 율령을 기초로 하고 균전제를 실시하여 인민을 통치하고 과거를 창시하여 관료를 시험으로 뽑았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에 인민을 대량으로 동원해 피폐한 민중의 반란이 전국에서 일어나던 중 제2대의 양제가 살해되자 618년 수의 무장 이연, 이세민(태종)부자가 당을 세워 장안을 도읍으로 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29) 위의 책, 18쪽. 당 멸망 후의 내륙아시아·동아시아 “조선반도에서는 고려(918-1392)가 신라(4세기중엽-936)를 멸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30) 위의 책, 18-19쪽.

31) 위의 책, 19쪽. 원의 중국지배 “금을 멸하고 화북을 차지한 몽골제국에서는 1260년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에 오르자 다른 몽골계 국가와의 정치적 결합은 약화되었다. 그는 몽골 고원과 중국을 지배하고 국호를 원으로 하고 나아가 고려를 복속시키고 남송을 병합하였다.”

관한 이야기가 보인다³²⁾. 이 단원은 ‘몽골제국의 출현’원과 동서교류’로 구성되었는데, ‘원과 동서교류’ 항목에서, 고려가 복속한 후 2차에 걸친 쿠빌라이의 일본 공격에 고려도 군대를 파견하였음을 적고 있다³³⁾.

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제2장 ‘제 지역세계의 교류’의 ‘선택4 동아시아 해역과 유라시아’에서 보인다. 여기에서는 우선 ‘동아시아海域의 역사’ 연표에서 ‘16세기’에 ‘명의 쇠퇴’, ‘일본의 은 산출 증대’, ‘후기왜구의 활동 활발’과 함께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해역’ 지도에 ‘조선(李朝)’이 보이는데, 전기왜구의 활동지역으로 한반도 남부와 서해안, 동해안이 표시되어 있고, 후기왜구의 활동지역으로 한반도 남해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류구왕국의 주요교역루트(14-16세기)로 류구왕국과 한반도 남해안을 잇는 루트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의 설명에서는 “류구왕국은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교역의 거점으로 번영하였다”고 적고 있다³⁴⁾. 동아시아의 해상교역을 琉球왕국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조선도 그 교역권에 포함시켰다.

제2부 ‘일체화하는 세계’ 제3장 ‘일체화로 향하는 세계’ 제4절 ‘청제국의 번영’의 ‘청의 성립’ 항목에서는 조선에 파병한 이후 명이 멸망하는 과정과 조선이 청에 복속하고 조공한 사실을 적고 있다³⁵⁾. 그리고 ‘<일본과 세계>朝鮮侵略’이라는 코너에서 豊臣秀吉이 일본 국내를 통일한 후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이순신의 활약과 명의 원군 덕분에 이를 격퇴하였지만,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농민과 도공이 일본에 끌려갔다고 적고 있다³⁶⁾. 여기에서는 ‘朝鮮水軍의 龜船’의 모형 사진을 제시하면서 “선체가 철관의 거

32) 이 교과서에서는 제1부 제2장 ‘제 지역세계의 교류’에서는 네 가지 주제(‘해역세계의 교류’ ‘유목사회의 팽창’, ‘지중해해역과 유라시아’, ‘동아시아해역과 유라시아’)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33) 위의 책, 51쪽. 원과 동서교류 <日本과 世界> 元寇의 목적 “1274년 쿠빌라이가 파견한 몽골·고려의 연합군 2만7000이 博多灣에 상륙하였다. 몽골의 집단전법에 鎌倉 武士는 고전했으나 원군은 폭풍을 만나 高麗로 돌아갔다. 당시 원은 남송을 공략 중이었으므로 일본과 남송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 1281년의 제2차 원정은 高麗·江南에서 합계 10여만 인의 대규모 선단이 파견되었다.”

34) 위의 책, 55쪽.

35) 위의 책, 68쪽-69쪽. 청의 성립 “16세기말 이후 명은 조선파병과 동북지방에서 만주(여진) 족과의 항쟁 등으로 군사비가 증대하였다. 중세를 부과받은 농민의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나던 중 1644년 李自成的 농민군이 북경을 점령하여 명은 멸망하였다. 누루하치에 의해 통일된 만주족은 군사, 행정조직인 八旗로 편성되어 조선을 복속시키고 국호를 청이라고 하였다.” “강대해진 청에 대해 조선, 琉球, 베트남, 타이, 미얀마 등의 여러 왕조가 朝貢하였다”

36) 위의 책 68쪽. 청의 성립 <일본과 세계>朝鮮侵略 “16세기말 豊臣秀吉은 鐵砲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織田信長の 뒤를 이어 국내를 통일하였다. 그는 1592년부터 朝鮮(李朝)을 침략하였다(조선에서는 임진, 정유의 왜란이라고 한다). 조선은 수군을 이끈 이순신의 활약과 명의 원군에 의해 일본군을 격퇴하였으나 국토는 황폐해지고 다수의 농민과 陶工 등이 일

북모양의 지붕으로 덮였고, 전후좌우로 많은 火炮를 장착하였다”고 적었다.

전근대 한국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제2부 제3장의 ‘테마3 동아시아와 유럽’의 ‘유럽 세력의 동아시아 진출’ 항목에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일본과 세계> 쇄국체제의 성립’에서 江戸 시대의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江戸幕府가 조선과 국교를 회복한 것과 쇄국체제에서 네덜란드, 중국, 琉球 등과 함께 일본의 교섭 상대국의 하나로 조선을 적고 있다³⁷⁾.

이상이 이 교과서의 전근대 한국에 관한 서술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사 자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대부분 중국사나 일본사를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객체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조선, 일본, 베트남 북부도 온난한 문순지대로 도작이 행해져, 중국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내었다”고 적고 있지만³⁸⁾, 한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³⁹⁾. 아마 豊臣秀吉의 침략 때 등장한 거북선 정도가 이 교과서에서 한국 고유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과서가 『학습지도요령』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세계사A』 교과서 중 한국사 서술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이 교과서를 통해 볼 수 있다.

3) 東京書籍의 『世界史A』

같은 『세계사 A』라고 해도 동경서적 판의 전근대 한국사 관련 내용은 실교서적보다는 양이 많다. 제1부 제1장 ‘유라시아의 諸 地域世界’는 전근대 각 지역세계의 정치사를 개관하고 있는데 한반도 관련 서술은 제1절 ‘동아시아와 중국문화’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 이 절은 ‘1.동아시아의 풍토와 제민족’, ‘2.중화세계의 통일’ 3.동아시아세계의 형성 ‘4.동아시아세계의 전개’로 구성되었는데, 한국 관련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동아시아의 풍토와 諸 民族’에서다.

본에 끌려갔다.”

37) 위의 책 70쪽. 유럽세력의 동아시아 진출 <일본과 세계>쇄국체제의 성립 “豊臣秀吉의 사후 徳川家康은 江戸幕府를 열고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또 당시 행해진 朱印船무역에서는 일본인은 동남아시아 각지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크리스티교의 금지와 무역의 이익 독점을 꾀하는 막부는 17세기 중엽까지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하고 교섭 상대국을 네덜란드, 중국, 조선, 琉球 만으로 하였다.”

38) 위의 책, 11쪽.

39) 이 교과서의 전근대 베트남에 대한 서술도 한국에 대한 서술보다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풍토와 여러 민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黃河문명과 長江문명을 바탕으로 일찍이 국가가 생긴 후 秦에 이르러 전제국가가 생겨났고, 한자를 매개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한국, 베트남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⁰⁾.

한국사에 관해 최초로 보이는 내용은 제1부 제1장 제1절 ‘동아시아와 중국문화’의 ②‘中華세계의 통일’의 ‘중국고대제국의 성립-진한제국의 형성-’항목에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漢武帝 때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⁴¹⁾. 이 책의 ‘秦漢시대의 영역과 西域’ 지도 속에서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낙랑을, 그리고 그 북쪽에 고구려를 표시하였을 뿐, 다른 한반도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⁴²⁾. 학생들은 마치 아무런 국가도 없는 한반도에 漢의 세력이 들어가 식민지로 삼았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한반도에 관한 서술은 제1부 제1장 제1절 ‘동아시아와 중국문화’의 ③‘동아시아세계의 형성’의 ‘중화세계의 분열과 조선,일본’ 항목에서 보인다. 여기에서는 고구려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국연대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원전 37년으로 적고 있지만, 백제와 신라의 건국연대를 346년과 356년으로 명기하고 있다⁴³⁾. 346년은 백제 근초고왕의 즉위연대이며, 356년은 내물왕의 즉위연대이므로 이 두 왕대에 두 나라가 건국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와 신라의 건국연대를 4세기로 보는 것은 낙랑, 대방군의 괴멸이 韓族의 자립을 촉진하여, 백제와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보는 일본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⁴⁴⁾ 뒤에 나올 세 종류의 『세계사B』 교과서도 모두 이들 국가의 건국연대를 4세기로 놓고 있다.

40) 『世界史A』東京書籍, 8-9쪽. **동아시아의 풍토와 諸民族** “유라시아대륙 동부에 위치하는 동아시아세계는 중국과 그 주변의 조선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북부 등의 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특징적인 생활문화가 만들어져 漢人, 조선인, 일본인, 킨인(협지의 베트남인), 몽골인, 토르크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최초의 중국통일을 이룬 秦은 세계의 중심인 황제가 모든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 전제국가였다. 이와 같은 국가를 만든 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는 그들이 만든 漢字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주변의 조선, 일본, 베트남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9)

41) 『世界史A』東京書籍, 11쪽. **중국고대제국의 성립-진,한제국의 형성-** “기원전 2세기의 武帝 때 최성기를 맞이하여 조선반도와 베트남중부까지 지배를 확대하는 한편, 북방의 흉노를 격파하고 대흉노정책의 일환으로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42) 위의 책, 12쪽.

43) 위의 책, 11쪽. **중화세계의 분열과 조선,일본** “4세기가 되자 조선반도에서는 고구려(기원전 37-668) 이외에 남부에 백제(346-660)와 신라(356-935)가 성립하였고 일본에서도 大和政權이 성립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남북의 중국왕조로부터 冊封을 받으면서 각각 세력의 확대를 꾀하였다.”

44) 李成市, 2000 『三國の成立と新羅・渤海』 『新版世界各國史, 朝鮮史』山川出版社, 63쪽, 74쪽.

한국의 통설은 『삼국사기』의 건국연대를 모두 전설로 보면서 고구려는 1세기, 백제는 3세기, 신라는 4세기경에 고대국가(또는 영역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다⁴⁵⁾.

이후 제1부 제1장 제1절 ‘동아시아와 중국문화’의 ③‘동아시아세계의 형성’의 ‘수, 당제국과 조선, 일본’ 항목에서 신라의 통일 과정을 언급하여, 신라가 당과 결탁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완수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신라가 당의 冊封을 받은 나라였던 반면, 일본은 수와 당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遣隋使나 遣唐使를 파견하였다고 적고 있어 일본이 비교적 자립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신라, 발해와 교류하였음도 밝히고 있다⁴⁶⁾.

그리고 ‘당과 주변제국’이라는 특별 코너를 마련하여 신라, 발해가 당과 맺은 관계와 일본이 맺은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과 함께 지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라, 발해 등은 冊封관계였으며, 일본은 朝貢관계였음을 밝히고 있다⁴⁷⁾.

高麗에 대해서는 제1부 제1장 제1절 ‘동아시아와 중국문화’의 ④‘동아시아의 전개’의 ‘동아시아세계의 재편성’ 항목과 ‘몽골제국의 성립과 전개’ 항목에서 보이고 있다. 고려가 송과 요의 책봉을 받았다는 것과 금속활자와 고려청자를 고려의 뛰어난 문화로 소개하고 있으며, 고려가 몽골제국에게 복속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⁴⁸⁾. 이 교과서에서는 지도 ‘北宋과 遼, 西夏(11세기경)’과 ‘南宋과 金, 西夏(12세기중엽경)’에서 고려와 개성을 넣고 있으며, ‘몽골제국의 최대세력’ 지도에서 고려 침공로도 표시하였다⁴⁹⁾.

45) 邊太燮, 1986『韓國史通論』 三知社, 79쪽, 82쪽, 85쪽. 한영우, 1997『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85쪽, 89쪽, 93쪽.

46) 『世界史A』東京書籍, 13쪽. 隋, 唐帝國과 朝鮮, 日本 “조선반도에서는 7세기후반에 당과 결탁한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하고 당의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반도의 통일을 완수하고, 또 당의 책봉을 받았다. 일본은 7세기부터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하여 수, 당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신라·발해(698-926)와도 교류하였다.”

47) 위의 책, 13쪽. 唐과 周邊諸國 “당과 주변제국, 제 민족과의 관계는 서로간의 세력관계 등에 의해 여러가지 형태가 취해졌다. 예를 들면 신라, 발해, 南詔 등과 사이의 冊封관계 이외에, 귀순한 주변제민족의 수장에 대해 都督, 刺史 등의 관직을 주어 자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都護府에 의해 통괄하였다. 또 돌궐, 위구르, 토번과 같은 강력한 주변 제 국가, 제 민족에 대해서는 당의 황제는 이들의 首長과의 사이에 부자, 형제, 舅甥(장인과 사위, 또는 아저씨와 조카) 등과 같은 擬制的인 가족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치적으로 優位에 서서 국제적인 정치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파견되는 견당사는 조공사로 간주되었다.”

48) 위의 책, 14쪽. 東아시아세계의 재편성 “조선반도에서는 고려가 신라를 멸하고 전토를 통일하고 송과 요의 책봉을 받고, 금속활자와 고려청자 등의 뛰어난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1위의 책, 15쪽. 몽골제국의 성립과 전개 “티벳, 大理를 정복하고 고려를 복속시켰던 쿠빌라이는 중국지배를 하면서 스스로의 영역의 국호를 대원이라고 칭하고 도읍을 카라코룸에서 대도(현재의 북경)에 옮기고 이어서 남송을 멸하였다.”

제1부 제2장 ‘유라시아의 교류권’에서는 지역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세계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4절 ‘동아시아해역과 유라시아’는 ‘신라상인, 발해상인과 중국상인의 활동’ ‘明州(寧波)와 大宰府, 博多’ ‘명의 조공체제와 海禁정책’ ‘琉球왕국과 무역활동’으로 구성되어, 동아시아海域의 교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신라상인, 발해상인과 중국상인의 활동’ 항목에서는 동아시아해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활약한 사람들은 신라상인이었으며, 그 후 발해의 商船이 활약하여 황해, 동지나해, 일본해를 포함한 交易圈이 형성되었다고 적고⁵⁰⁾, ‘동아시아해역(8세기)’ 지도를 제시하여 ‘渤海使 來日 主要항로’와 ‘신라상인의 교역로’를 표시하고 있다.

‘明州와 大宰府, 博多’ 항목에서는 ‘新安 앞바다의 침몰선에서 인양한 木簡’ 자료를 제시하고 “1975년 한국서해안의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침몰선에 있던 木簡에는 이 배가 1323년에 慶元路(寧波)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배였다는 것과 博多나 京都의 東福寺로 가는 많은 도자기나 동전 등의 荷物を 싣고 있었다는 것 등이 적혀 있다⁵¹⁾”고 하여 元대의 교역선이 한반도 서해안을 거쳐 갔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 朝貢체제와 海禁정책’ 항목에서는 명이 海禁정책을 실시하여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하는 倭寇를 억누르고자 하였음을 적고, 명이 朝貢체제와 海禁정책을 결합한 朝貢무역만을 인정하고자 하여 조선과 琉球를 제외한 諸國에 대해서는 勘合貿易을 실시하였다고 적고 있다⁵²⁾. 여기에서는 조선과 琉球가 명에 조공하였다는 설 명이 없으므로, 조선과 琉球만이 勘合무역에서도 제외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조선에 대한 설명은 제2부 ‘성숙하는 아시아와 세계로 향하는 유럽’ 제3장 ‘아시아 제제국의 변영과 유럽’ 제1절 ‘중화제국의 변영과 동아시아’에서 다시 보인다. 이 절은 ① ‘명제국과 동아시아’와 ② ‘청제국과 동아시아’로 구성되어 명·청대를 중심으로 동아

49) 위의 책, 14쪽, 15쪽.

50) 위의 책, 44쪽. 신라상인, 발해상인과 중국상인 “7세기초에 성립한 당은 조공 외에는 국경 주변에서의 교역을 허가하였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7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 중국, 조선, 일본에 걸친 동방해역에서 무역은 신라상인이 독점하고 있었다. 약간 늦게 발해에 의한 활동이 시작되어 8세기이후 일본해를 건너 일본에 내항하는 발해의 사절은 드디어 무역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또 발해의 상선은 중국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중국 동방의 황해, 동지나해에 일본해를 추가한 교역권이 형성되었다.”

51) 위의 책, 44쪽.

52) 위의 책, 44-45쪽. 明의 朝貢體制와 海禁政策 “명이 성립하자 주변제국에 사절을 보내 朝貢하도록 재촉하고 중화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재건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 한편 중국인이 해상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의해 조선과 중국연안에서 활동하는 倭寇(前期倭寇)를 억누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명은 조공체제와 해금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사무역을 없애고 조공과 동반한 무역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조선과 琉球를 제외한 제국에 대해서는 勘合貿易을 실시하였다.”

시아사를 서술하고 있다.

① ‘명제국과 동아시아’ 단원은 ‘원말명초의 움직임’ ‘明初의 대외정책’ 「北虜南倭」와 은의 유통’ ‘동아시아제지역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동아시아세계에서 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고 동아시아 제지역의 움직임도 서술하고 있다.

조선은 ‘동아시아 제지역의 움직임’항목에서 처음 보이고 있는데, 왜구 격퇴에 공적이 있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는 것과 조선이 명의 冊封을 받고 주자학을 관학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豊臣秀吉의 침략을 받았으나 이순신 등의 수군의 저항과 명의 원군으로 이를 막아내었고, 江戸시대에 對馬의 宗氏의 중개로 朝日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조선이 청에 臣屬하여 조공하게 되었음을 적고 있다⁵³⁾.

江戸幕府와 조선과의 국교와 通信使에 관해서는 이 교과서의 116쪽의 ‘일본의 동아시아외교’항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지도 ‘明代의 아시아’에서는 倭寇의 침략지를 표시하고 있으며⁵⁵⁾, ‘明과 「北虜南倭」’ 지도에서도 壬辰倭亂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다⁵⁶⁾.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자’라는 특별코너를 마련하여 “몽골인의 원나라 지배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한국에서는 민족적 자각이 높아져 15세기가 되자 세종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으로 「한글(訓民正音)」이 만들어졌다. 한글은 자형도 간단하였으므로 민간에 널리 퍼져 고유 문자로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시대의 한글을 제시하였다⁵⁷⁾.

② ‘청제국과 동아시아’ 단원은 ‘명에서 청으로’, ‘청의 지배와 동아시아’ ‘명·청시대의 사회와 문화’로 구성되어 청의 지배정책과 명·청 시대의 경제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명에서 청으로’항목에서는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였던 명의 동북지방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져 17세기 초에 금(후금)이 건국된 것과 그 후 후금이 내몽골

53) 위의 책, 51쪽. **동아시아 제지역의 움직임** “조선반도에서는 왜구 격퇴에 공적이 있던 고려의 무장 이성계가 조선(李朝)을 세웠다. 조선은 명의 책봉을 받고 관료기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주자학을 관학으로 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을 꾀하였다. 16세기말 일본의 국내를 통일한 豊臣秀吉에 의해 두 번 침공(조선에서는 임진, 정유의 왜란, 일본에서는 文祿, 慶長の 役)을 받았으나 이순신의 수군 등에 의한 저항과 명의 원군에 의해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전후7년에 걸친 전란의 피해는 매우 커서 국토는 폐허하였다. 일조양국의 관계는 江戸幕府하에서 대마의 宗氏의 중개에 의해 회복하였다. 그후 조선은 북방에서 침입하는 여진(만주)인의 청에 대해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臣屬, 朝貢하지 않을 수 없었다.”

54) 위의 책, 116쪽,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조선과는 豊臣秀吉의 침공 후 江戸幕府가 1807년에 국교를 회복하고 조선국왕과 장군(大君)과의 사이에 대마의 宗氏를 부산으로 파견하여 조선으로부터 江戸에 通信使를 초빙하는 교류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막부에 의한 大政奉還을 거쳐 明治정부가 된 후에는 그때까지의 통신사는 유지되지 않게 되었다.”

55) 위의 책, 51쪽.

56) 위의 책, 50쪽.

57) 위의 책, 51쪽.

과 조선을 복속시키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고 적고 있다⁵⁸). 그리고 ‘청대의 아시아’ 지도에서 조선을 청의 藩部로 표시하였다.

이 단원의 ‘청의 지배와 동아시아’항목에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朝貢·冊封체제에 포함되었다”고 적고 있는데⁵⁹), 제6장 ‘아시아제국의 변모와 일본’의 제1절 ‘동아시아의 변용과 제민족’의 ①‘청제국과 그 주연지역’ 단원의 ‘조공체제와 청제국’항목에서 다시 “또 청조는 朝鮮, 琉球 등에 대해 국왕의 교대기에 책봉사를 파견하여 그것을 승인하였다⁶⁰)”고 적고 있어 조선이 청의 책봉체제에 포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상 東京書籍 『世界史A』교과서의 전근대 한국관련 서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여 중국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이 교과서는 앞의 실교출판 교과서 보다는 한국 관련 서술 내용이 자세하며, 한국사 자체에 관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해역의 신라상인과 발해상인의 활약상이나 한국의 발달된 문화(금속활자, 고려청자, 한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세계사B』 교과서의 검토

1)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B』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세계사 B』는 “친근한 것이나 일상생활 등에 관계되는 주제를 설정하여 추구하는 학습을 바탕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 역사의 전개 를 제 지역세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제 지역세계의 형성, 교류와 재편, 결합과 변용, 지구세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큰 시간적 틀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여 역사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을 갖추게 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개정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⁶¹).

『學習指導要領』에서는 「세계사 B」를 (1)세계사로 가는 문 (2)諸 地域世界の 형성 (3)제 지역세계의 교류와 재편 (4)제 지역세계의 결합과 변용 (5)地球世界の 형성으로 구성하여, 고대부터 근대세계는 자율성과 체계성을 가진 복수의 地域世界를 설정하여

58) 위의 책, 52쪽. 명에서 청으로 “豊臣秀吉의 침공에 시달리던 조선에 원군을 파견한 명에서는 동북지방에 대한 지배가 이완되어 17세기초에 여진인(뒤에 만주인으로 자칭) 누루하치에 의해 금(후금)이 건국되었다. 그후 후금은 내몽골,조선을 복속시키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59) 위의 책, 53쪽.

60) 위의 책, 112쪽.

61) 文部省, 199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5쪽.

그 형성, 교류와 재편, 결합과 변용의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고, 현대는 지구규모에서 일체화한 세계의 출현에 착목하여 제 국가, 제 민족이 상호의존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다⁶²⁾.

『學習指導要領解説』에서는 「世界史B」 개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文化圈에 의한 구성 대신 地域世界별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1970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 이후 세계사를 文化圈別로 구성하여 다원적인 세계사를 구성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사 전체의 학습내용이 증대한 면이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세계별로 구성하였다고 한다⁶³⁾.

『學習指導要領解説』에 의하면 「世界史B」에서는 인류의 탄생, 농경·목축의 시작, 도시문명의 성립을 거쳐 각각 자연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초기의 지역 세계로 크게 서아시아·지중해세계, 남아시아세계, 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 등, 세 지역세계를 상정하였다. 이 地域世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다른 지역세계와 교류하므로, 시기에 따라 중심을 점하는 지역세계는 다르고 그 형성, 번영, 쇠퇴의 과정도 다르다고 하였다. 즉 동아시아세계나 남아시아세계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지역세계로서 유지되었으나, 서아시아·지중해세계는 고대에만 존재하다 해체되고, 그 유산을 계승하여 등장한 지역세계로 이슬람세계와 유럽세계를 설정하였다⁶⁴⁾. 종전의 ‘문화권’ 구성이 공통된 문화요소를 가진 고정적인 세계를 상정하였던 것에 비해, 地域世界 구성은 다른 지역세계와 교류하는 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진 세계사를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서 전근대 한국이나 한국사 관련 내용은 대부분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동아시아 세계’에 관한 내용은 (1)‘세계사로 가는 문’의 ㄱ.‘세계사와 일본사의 관련’, (2)‘여러 지역세계의 형성’의 ㄱ.‘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의 형성’ (3)‘여러 지역세계의 교류와 재편’의 ㄱ.‘내륙아시아의 동향과 諸 地域世界’, (4)‘여러 지역세계의 결합과 변용’의 ㄱ.‘아시아 제 지역세계의 번영과 성숙’에서 보인다.

(1)‘세계사로 가는 문’ ㄱ.‘세계사와 일본사의 관련’에서는 “중국, 한국·조선 등의 아시아의 근린제국과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각 시대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과 물건, 문화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도 세계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이해를 높이는 데에 유효하다. 그 때 상세한 교류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⁵⁾고 하여 일본사를 세계사 속에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국, 한국과 북한 등 근린제국과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62) 위의 책, 42쪽.

63) 위의 책, 43쪽.

64) 위의 책, 44쪽.

65) 위의 책, 50쪽.

(2) ‘여러 지역세계의 형성’의 ‘우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의 형성’에서는 “遊牧民과 漢人の 융합, 내륙아시아에서의 유목국가 돌궐의 성립 등을 배경으로 중국에서 隋·唐帝國이 성립하였음을 파악시킨다”고 하였다⁶⁶⁾.

구체적으로는 우선 동아시아·내륙아시아의 다양한 자연과 생활 모습을 통해 농경이나 목축에도 여러 형태가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어서 黃河·長江유역등의 신석기 문화와 殷, 周의 성립에 대해 언급하고 한자의 기원 등 중화문명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 시기 나타난 것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춘추전국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 秦·漢帝國의 성립과 그 皇帝觀, 주변제국과의 冊封體制 등을 다루어 中華文明에 의거하는 동아시아세계의 골격이 형성되었음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륙아시아의 동부에 출현한 유목국가 흉노의 문화와 군사력에 주목하고 오아시스 도시의 패권을 둘러싸고 秦·漢과 흉노가 장기간 항쟁을 계속한 것, 흉노와 한의 해체, 유목민의 화북 진출과 화북 주민의 강남 이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유목민의 定住化와 均田制 등의 새로운 동향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목민과 漢人이 융합되고 내륙아시아에서 유목국가 돌궐이 성립한 것 등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에서 隋·唐帝國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특히 당은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주변제국과 안정된 관계를 맺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세계를 형성하였으며, 일본이나 新羅, 渤海는 당의 정치제도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국가형성을 추진하였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시키도록 하였다⁶⁷⁾.

이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동아시아세계를 중화문명에 의거하는 세계로 규정하고 이 중화문명이 중국의 역대왕조와 주변제국과의 책봉체제에 의해 주변지역에 수용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동아시아세계의 역사는 중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게 된다.

(3) ‘여러 지역세계의 교류와 재편’ 우·‘내륙아시아의 동향과 여러 地域世界’에서는 내륙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활동이 주변 여러 지역에 끼친 영향에 대해, 거란, 여진의 동향과 송의 항쟁, 몽골제국의 형성과 유라시아의 海陸 네트워크의 성장, 몽골제국의 해체와 명, 티무르, 러시아의 흥룡, 일본의 변동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도록 하였다⁶⁸⁾. 중심으로 흥망과 여러 지역세계, 일본의 변동에 대해 언급하고 내륙아시아 민족들이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교류와 재편을 위해 한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륙아시아 동부부터 중국동북부, 화북 일대에서는 몽골계의 거란, 이어서 통구스계의 여진이 대두하여 송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항하면서 서로 교역한

66) 위의 책, 53쪽.

67) 위의 책, 54쪽.

68) 위의 책, 55쪽. 58쪽.

것, 唐末 이후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 송대에 산업과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도시가 번영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3세기에 몽골이 내륙아시아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한반도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된 과정과 그 세계제국이 곧 중주국 元朝와 諸汗國과의 연합체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원이 중국의 남송을 멸망시킨 후에는 海域 네트워크도 지배하에 두고 유라시아에 육지와 바다의 교통·교역체계를 만든 것과 이 시기에 일본도 元寇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과 교역을 회복하여 동전의 대량 수입으로 화폐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나아가 14세기중엽에 시작되는 몽골의 해체가 명과 티무르, 무굴, 러시아 등의 여러 帝國을 만들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직접 몽골지배가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가·사회의 변용과 재편을 촉진하였음을 알도록 하였다⁶⁹⁾.

(4)제 지역세계의 결합과 변용 7. ‘아시아 제 지역세계의 변영과 성숙’에서는 “명·청 제국과 조선, 일본의 관계, 동남아시아해역세계와 이슬람세계의 동향을 취급하고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친 아시아 제지역세계의 특질을 이해시킨다”고 적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화제국을 재현하여 주변제국과의 사이에 책봉=조공체제를 확립한 명이 16세기에 북방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倭寇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했지만, 상공업의 발달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화질서가 동요하면서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고 여진의 청제국이 건설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막대한 은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쇄국 후에도 長崎나 琉球등을 통해 밖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였다⁷⁰⁾.

그리고 17세기후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화제국을 계승한 청이 번영을 구가하였으나 동남아시아의 도서부는 유럽국가들이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회가 성숙기에 들어가 각 지역의 전통이 형성되었음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이상 『學習指導要領解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틀은 『세계사A』와 비슷하다. 좀 더 자세해진 『세계사』B에서는 전근대 한국사 관련 서술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세계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學習指導要領解説』에 의하면 동아시아세계는 중화문명에 의거하는 세계로 秦·漢帝國이 성립한 후 주변제국과의 책봉체제 등을 통해 그 골격이 형성되었으며⁷¹⁾, 唐代에 주변제국과의 안정적인 관

69) 위의 책, 58쪽.

70) 위의 책, 60쪽.

71) 『學習指導要領解説』에 의하면, “춘추전국시대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 진한제국의 성립과 그 황제관, 주변제국과의 책봉체제 등을 취급하여, 중화문명에 의거하는 동아시아세계의

계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동아시아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西嶋定生の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세계를 중화문명권으로 보고, 동아시아사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주변의 일본이나 조선 등은 그 영향을 받아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學習指導要領』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세계사 B」 교과서에서 전근대 한국사 관련 서술은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 전근대 한국 역사에 관한 서술이 적은 교과서 순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2) 清水書店의 『高等學校世界史 B 改訂版--100가지 주제로 보는 세계의 역사』

이 책은 모두 7장의 대단원 속에 100개의 주제를 중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장 세계사의 초대, 제2장 너희들의 시대, 제3장 지역세계의 형성과 교류, 제4장 지역세계의 변용과 세계의 일체화 제5장 근대와 국민국가, 제6장 세계전쟁의 시대, 제7장 현대의 세계로 구성하고 각 장에서는 일본에게 가장 가까운 동아시아세계를 우선 이해하고 나서 이어서 내륙아시아세계, 남아시아세계, 이슬람세계, 그리고 구미세계로 시야를 확대하도록⁷²⁾ 중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겉표지 다음에 부록으로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여기에서는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세계유산 각각 9곳의 사진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국사가 보이고 있다. ‘불국사(소재국-한국)’이라고 적고 “신라(4세기경-935년)의 왕도인 경주에 있으며, 신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사원.751년(530년경이라고도 한다) 창건. 산의 사면을 이용하여 가람이 배치되어 있다. 16세기말 豊臣秀吉軍의 침공(임진·정유왜란)으로 불탔으나, 재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쪽의 ‘語族에 의한 세계역사상의 언어의 분류’에서 알타이어족 속에 ‘조선어’를 놓고 있다.

제2장 ‘너희들의 시대’의 제6단원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과제는?’에 실린 연표 ‘우리들의 시대’에서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1991년 ‘남북조선 유엔에 동시가입’, 2000년 ‘북조선·한국 최초의 수뇌회담’, 2002년 ‘최초의 日朝수뇌회담’, 2006년 ‘북조선 최초의 핵실험’이 적혀 있다⁷³⁾.

—————
 골격이 형성되었음을 파악시킨다”

72) 『高等學校世界史 B 改訂版--100テーマで視る世界の歴史』清水書店, 2쪽.

73) 위의 책, 6쪽.

<위씨조선, 신라, 발해>

한국사에 관한 최초의 서술은 제3장 제14단원 ‘동아시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 단원은 ‘위·오·촉의 대립’ ‘중국남북왕조의 대립과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 ‘중국문화의 수용’으로 구성되어 후한 중기부터 중국 남북조시대까지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사에 관한 최초의 서술은 ‘중국남북왕조의 대립과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 항목에서 나오는데⁷⁴⁾, ‘樂浪郡과 帶方郡은 중국왕조의 朝鮮 支配의 거점’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5호16국시대의 화북의 혼란 속에서 한반도의 여러 민족이 대두하여 4세기 초에 낙랑군은 고구려에게, 대방군도 조선반도 남부의 韓族 등에게 멸망당했다. 이리하여 4세기에 걸친 중국왕조의 조선반도 지배는 끝났다”고 하여, 4세기 동안 중국왕조가 한반도를 지배하였다고 적고 있다. 33쪽의 지도 ‘前漢 武帝시대의 최대영역’에서도 한반도 북부와 중부를 漢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가장 먼저 지배한 것은 漢이었던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방군이 한반도 남부의 韓族에게 멸망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의문이다. 낙랑군과 마찬가지로 대방군도 고구려 미천왕의 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⁷⁵⁾.

이 교과서도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시기를 4세기 초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한 이후로 놓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남북조의 왕조들이 대립하

74) 위의 책, 36-37쪽. **중국남북왕조의 대립과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

“北朝와 南朝는 각각 중화제국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이러한 정세가 동아시아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樂浪郡과 帶方郡은 중국왕조의 조선반도 지배의 거점으로, 왜 여왕 卑彌呼의 사신도 帶方郡을 경유하여 도읍 洛陽으로 들어가 위에게 冊封을 받았다. 5호16국시대의 화북의 혼란 속에서 조선반도의 제민족이 점차 대두하였다. 4세기초에 낙랑군은 고구려에게, 대방군도 조선반도 남부의 한족 등에게 멸망당했다. 이리하여 4세기에 걸친 중국왕조의 조선반도 지배는 끝났다.

이 시기 백제, 신라가 건국되어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에 거점을 둔 북방의 고구려와 병립하여 조선반도는 삼국시대에 들어갔다. 각국은 중국의 율령이나 정치의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부족연합에서 전제적 국가로 이행해 갔다. 또 삼국은 중국의 남북 두 왕조와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으므로 동아시아세계는 중국 두 왕조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삼국과 왜도 가담한 복잡한 국제관계를 형성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 대항하여 남조나 왜와 적극적으로 국교를 맺었고, 고구려도 광개토왕을 현창한 광개토왕비에 있듯이 신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백제, 왜와 대립하였다. 5세기의 왜의 오왕은 국내를 통합하는 한편 중국의 남조정권에 조공하여 책봉을 받았다.”

75) 小田省吾, 1927 『朝鮮史大系 上世史』 朝鮮史學會, 74쪽., 全榮來, 1998 「백제의 흥기와 대방고지」 『百濟研究』 28, 37쪽.

는 정세가 동아시아세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통치와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밖에 ‘前漢 武帝시대의 최대영역’ 지도에서 한반도 남부에 ‘韓’, 한반도 동북부에 ‘沃沮’, 沃沮의 서북부에 ‘夫餘’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 중 부여나 옥저는 본문이나 보충설명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도에만 등장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한반도의 국가였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어서 ‘중국문화의 수용’ 항목에서는 한반도의 삼국이 중국의 남북왕조와 외교관계를 통해 한자, 불교, 유교 등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고,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간 외교사절이나 이민에 의해 ‘중국문화’가 다시 일본열도에 전해져 동아시아에 독특한 문화권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⁷⁶⁾. 백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자, 불교, 유교 등의 문화를 일본에 전하여 고대 일본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사실을 『日本書紀』 등의 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교과서에서는 단지 ‘중국문화’를 전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삼국(6세기경)’ 지도에서 왼쪽은 압록강하구, 북쪽은 백두산까지로 자르고 있어 고구려 영역 중에서 중국 동북부 대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다⁷⁷⁾. 그러나 지도에서 과거 ‘任那’ 대신에 伽耶諸國으로 표기한 것은 『日本書紀』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자료로는 6세기 신라의 기마인물형토기 사진을 제시하고 “6세기 경, 신라 경주의 金鈴塚 출토,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단원 ‘당은 어떻게 土를 통치하였는가’는 ‘중국의 재통일’, ‘국제도시 長安’, ‘주변세계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수, 당의 통일제국의 등장과 당의 수도 장안의 번영과 중국 주변의 국가들과 당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제도시 長安’ 항목에서 당의 번영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 중에서 서역, 토번, 발해, 신라, 왜 등의 주변국가의 사절, 승려, 유학생이 長安에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와 중국 독자적인 불교 종파와 차가 동아시아에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⁷⁸⁾.

76) 『高等學校世界史 B 改訂版--100テーマで見る世界の歴史』 37쪽. 중국문화의 수용 “조선 삼국은 국가의 여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중국의 남북 왕조와 외교관계를 통해 한자, 불교, 유교 등의 선진문화를 경쟁하듯이 수용하였다. 나아가 조선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외교 사절이나 이민에 의해 중국문화는 일본열도에 전해졌다. 주변 제지역이 중국에 뒤늦게 국가를 형성해 간 이 시대에 동아시아 세계 독특한 문화권이 출현하였다. 주변민족은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한자로 쓴 책을 통해 유교를 배우고 나아가 한자를 차용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였다.”

77) 위의 책, 37쪽.

78) 위의 책, 39쪽. 국제도시 長安 “서역, 토번, 발해, 신라, 왜 등의 주변 제국에서 온 사절, 승려, 유학생들이 모여 백만 도시 장안은 국제도시로서 번성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의 불

그리고 ‘주변세계의 움직임’ 항목에서 당과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라의 통일에 당이 간여한 것과 왜국은 사신을 파견하면서도 책봉관계는 가지지 않았다는 것, 발해가 당의 책봉을 받은 것을 적고 있으며⁷⁹⁾, ‘당대의 동아시아’ 지도에 발해와 신라를 넣고 있다. 당의 책봉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고려, 조선>

이후 한국사와 관련한 내용은 34단원 「원의 시대 아시아에 나타난 움직임은?」에서 보인다. 이 단원은 ‘티베트의 동향’ ‘베트남의 동향’ ‘조선과 일본’ ‘유라시아교역권’으로 구성되어, 당말 이후 송, 원대에 티베트, 베트남, 한국과 일본의 변화에 대해 개관하고 유라시아대륙을 통일한 몽골제국이 성립하면서 육로, 해로를 이용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서술하고 있다.

고려에 관해서는 ‘조선과 일본’ 항목에서 보이는데, 한국에서 당말에 신라가 분열된 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였음을 적고 고려가 당과 송을 모방한 관료제와 과거제를 채용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도 불교의 번성과 상감청자, 高麗大藏經,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등을 특기하고 있다. 13세기 전반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 약 30년간 저항하다가 굴복한 것, 이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진 것, 일본원정에 고려인이 징발되어 고생한 것 등을 적고 있다⁸⁰⁾. 그림자료 ‘元寇’의 설명에서 “쿠빌라이 칸은 1274년 고려군도 합친 3만여의 군, 1281년에는 멸한 남송의 병사도 포함한 14만여의 군대로 일본에 내습하였다”고 하여 몽골군의 일본 침략 때 고려군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⁸¹⁾.

교 종파도 생겨 동아시아 세계에도 보급되었다.” “차는 토번이나 위글에도 수출되었고 유학생을 통해 동아시아 제국에도 전해졌다.”

79) 위의 책, 39쪽, **주변세계의 움직임** “당은 주변의 제 민족에게는 자치를 인정하는 羈靡정책을 취하고 외교는 冊封관계를 견지하였다. 당과 연합한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멸하여 조선반도에서 삼국이 대립하는 형세는 끝났다. 왜국도 수나 당에 사절을 파견하였으나 직접 책봉받는 관계는 아니었다.” “북동아시아의 대조영은 698년에 건국하여 당에게 책봉을 받아 발해라고 칭하였다.”

80) 위의 책, 80-81쪽. **조선과 일본** “조선에서는 9세기중엽에는 신라가 분열상태가 되고 드디어 왕건이 고려(918-1392)를 건국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고려는 당, 송을 모방하여 관료제와 과거를 채용하여 중앙집권화에 노력하여 11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불교가 번성하고 문화가 발달하여 특히 공예에서 상감청자가 유명하다. 또 고려대장경의 간행 등 인쇄사업도 발달하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대라고 한다. 13세기 전반에는 몽골의 침입을 받아 약 30년간 저항을 계속했으나 결국 굴복하였다. 국토가 황폐해진 데다가 그 후 일본 원정에 동원, 징발되어 민중은 매우 고생하였다.”

81) 위의 책, 81쪽.

조선에 대해서는 대단원 제35단원 ‘명의 시대, 아시아에 나타난 움직임은?’에서 보인다. 이 단원은 ‘明朝의 성립’, ‘朝貢시스템’, ‘내륙아시아의 정세’, ‘동아시아의 바다’로 구성되었는데, 우선 ‘조공시스템’항목에서 명의 홍무제가 ‘조선반도에 성립한 李朝, 琉球 등에 명조에 대한 조공을 권유하였다’고 적고 있다⁸²⁾. 그리고 ‘동아시아의 바다’항목에서 다시 고려 말기와 조선의 건국과정에 대해 적고 있다. 즉 14세기에 일본을 근거지로 한 집단이 한국연안을 약탈하여 고려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와 호족이었던 이성계(태조)가 倭寇를 격퇴하여 이름을 높이고 親明反元の 입장에서 고려의 국왕을 추방하고 明朝의 조공체제에 가담하여 국호를 조선이라고 고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豊臣秀吉이 明國을 복속시키겠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조선에 침입하였다는 것과 조선이 이순신의 수군과 민중의 저항, 明朝의 원군 등에 의해 이를 저지하였다고 적었다. 사진자료로 ‘龜甲船과 이순신’ 사진을 제시하고, 龜甲船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부산 용두산공원의 이순신동상이 對馬島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⁸³⁾.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임진, 정유왜란이라고 적고 있다⁸⁴⁾.

이 교과서에서는 조선을 李朝, 李朝朝鮮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나 북한을 가리키는 朝鮮이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 李朝, 李朝朝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 측이 문제점을 제기해 오고 있다.

37단원「청건국의 과정은? 또 동시대의 동아시아는?」은 ‘북동아시아의 생태환경’, ‘만주족의 발전과 청조의 성립’ ‘朝鮮·日本·琉球’ ‘아이누와 일본’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일본·琉球’ 항목에서 다시 조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즉 조선이 태조 때부터 주자학을 중시하고 명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료제를 강화하여 양반이 유교의 소양을 몸에 갖추고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적고, 1446년에 고유 문자로 훈민정음(한글)을 제정하고 동활자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문화가 만들

82) 위의 책, 82쪽, **조공시스템** “홍무제는 조선반도에 성립한 李朝, 琉球 등에 明朝에 대한 조공을 권유하였다.”(82쪽)

83) 위의 책, 83쪽. **‘귀갑선과 이순신’** “귀갑선은 對倭寇用 軍船을 이순신이 개량한 것으로, 선체의 상부를 첩판(銅 또는 판자)로 덮고 거기에 칼 등의 날을 위로 향하게 하여 꼽아넣었다. 뱃전에 늘어서 있는 것은 총구, 뱃머리의 용 아가리에서는 연막을 내뿜었다. 위는 대한민국 부산시의 용두산공원에 있는 이순신의 동상으로 對馬 방향을 향해 서있다.”

84) 위의 책, 83쪽. **동아시아의 바다** “몽골제국이 붕괴한 후 유라시아의 교역은 육상에서 해상으로 비중이 옮겨갔다. 4세기에 일본을 근거지로 하는 집단이 조선 연안을 약탈하여 高麗를 괴롭혔다(前期倭寇). 조선의 호족이었던 이성계(태조)는 그것을 격퇴하고 이름을 알려 親明反元の 입장에서 高麗의 국왕을 추방하고 明朝의 朝貢體系에 가담하여 국호를 朝鮮이라고 고쳤다(李朝朝鮮).”

“16세기 후반에 성립한 豊臣秀吉의 정권은 1590년대에는 明國을 복속시킨다고 하면서 두 번이나 朝鮮에 침입하였다(임진, 정유의 왜란). 朝鮮은 이순신의 水軍과 민중의 저항, 明朝의 援軍에 의해 이를 저지하였다.”

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멸시하였던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자 조선이야말로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되었고 주자학의 규범이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으며⁸⁵⁾, ‘한글의 구조’도 설명하였다⁸⁶⁾.

이어서 일본의 德川幕府 시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선과 對馬의 宗氏를 통해 국교를 유지하여 德川將軍의 취임 때마다 朝鮮通信使가 일본에 왔다고 적고 그림 자료로 ‘조선통신사’를 제시하고 豊臣秀吉의 조선침략 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중단하였으나 1607년에 회복하여 조선의 사신이 1811년까지 12회 江戸幕府의 장군에게 파견되었다고 적고 있다⁸⁷⁾. 그러나 朝鮮通信使의 정식명칭은 通信使다.

38단원 ‘발전하는 청에 나타난 모순은?’의 ‘중국의 경제’, ‘청대전기의 정책’, ‘청대의 사회모순’으로 구성되어 명·청대의 중국의 경제의 변화와 청대전기의 정책, 청대에 사회모순이 격화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한국에 관한 내용은 ‘청대전기의 정책’ 항목에서 보인다⁸⁸⁾. 여기에서는 조선이 청조를 정점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조공국으로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상 清水書店의 「世界史B」 교과서의 전근대 한국사 관련서술을 살펴보았다. 이 교과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불국사, 기마인물형토기, 상감청자, 高麗大藏經,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한글, 거북선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인물로 이성계와 이순신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서술을 한의 낙랑군, 대방군 설치로 시작하

85) 위의 책, 87쪽. 朝鮮·日本·琉球 “清朝의 성립은 조공시스템에 파문을 일으켰다. 朝鮮의 李朝에서는 태조시대부터 주자학을 중시하고 명조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료제를 강화하고 사회에서는 관료조직인 문반과 무반에 유래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사회층이 유교의 소양을 몸에 지니고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446년에는 조선민족 고유의 문자로서 훈민정음(한글)이 제정되어 銅活字가 활용되는 등 독자적인 문화도 형성되었다. 조선에게 문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멸시하고 있던 여진족의 중국지배는 큰 충격이 되어 조선이야말로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되어 주자학의 규범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게 되었다.”(위의 책 87쪽)

“조선과는 대마의 중씨를 매개로 하여 국교를 유지하였고 德川장군의 취임 때마다 조선통신사가 내일하였다.”(위의 책 87쪽)

86) 위의 책, 87쪽, 참고자료 ‘**훈민정음(한글)의 구조**’에서 표로 나① 말② 쌀③을 제시하고 “子音자모와 母音자모의 조합으로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①n음을 나타내는 ㄴ과 a음을 나타내는 ㅏ를 조합하여 na의 음절을 표기한다. ② ㅁ (m)+ ㅏ(a) +ㄹ(r) ③ㅅ(s)+ ㅏ(s)+ㅏ(a)+ ㄹ(r)(현재의 표기법에 의함)”이라고 설명하였다.

87) 위의 책, 87쪽, 그림자료 ‘**朝鮮通信使**’의 설명문으로 “조선과 일본과의 국교는 豊臣秀吉의 조선침략(1592,1597년,임진·정유왜란)으로 중단하였으나, 1607년에 회복하여 조선사절이 江戸幕府의 장군에게 파견되었다. 1811년까지 12회 파견되었다. 그림은 江戸의 거리를 가는 서절 일행,神戸市立博物館藏”이라고 적고 있다.

88) 위의 책, 89쪽,. **청대전기의 정책** “이렇게 조선,베트남,타이,비르마를 조공국으로 하여 청조를 정점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동아시아에 만들어내었다.”

고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해진 문화를 중국문화로 보며, 일본을령국가가 신라, 발해와 교류한 것을 적지 않는 등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 보이는 한국사에 대한 전형적인 서술이 이 교과서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과서가 『학습지도요령』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山川出版社의 『新世界史』

<고조선부터 신라, 발해까지>

이 교과서에서 한국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제1부 제4장 제2절 ‘최초의 중화제국’이다. 이 절은 ‘진의 통일’, ‘한의 통일’, ‘후한의 재흥’, ‘한의 문화’로 구성되었는데, 한국관련 기사는 ‘한의 통일’ 항목에서 처음 보인다.

한국사 관련서술은 漢 武帝가 衛氏朝鮮을 멸하고 한반도에 한4군을 설치한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⁸⁹⁾. 한국에서는 위씨조선은 고조선 후기로 보고 있지만⁹⁰⁾, 이 교과서에는 衛氏朝鮮이 최초의 국가명으로 등장하고 있다⁹¹⁾. 이는 衛滿朝鮮 이후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일본학계의 전통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⁹²⁾. 학생들은 衛氏朝鮮을 한반도 최초의 나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樂浪 등 4군을 두었다’는 설명의 脚註로 “고대의 일본에 온 渡來人(歸化人이라고도 한다) 중에는 樂浪 등의 4郡에 있었던 중국, 조선반도의 자손이 많다. 今來氏, 秦氏, 漢氏 등이 그것이다”라고 적고 있는데⁹³⁾, 秦氏와 漢氏는 大和政權의 유력한 도래계족으로, 9세기초의 『新撰姓氏錄』에서는 자신들이 秦과 漢의 황족의 후예라고 주장하지

89) 『新世界史』 山川出版社, 2007년 김정본, 75쪽. 漢의 통일 “武帝는 서역을 중시하여 둔황 등 4군을 설치하고 남에서는 남월을 멸하여 남해군 등 9군을 두고, 동북방면에서는 衛氏朝鮮을 멸하고 동북부의 남부에서 조선반도에 걸쳐 樂浪 등 4군을 두었다.”

90) 송호정은 청동기 시대는 前期 古朝鮮, 기원전 4세기 이후의 철기 시대는 후기 고조선이라고 칭하였다.(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18쪽의 注. 475-477쪽.

91)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와 교사들이 함께 저술한 공통교재에서도 위씨조선을 한국사의 역사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즉 『마주보는 한일사I』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기록이 중국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위만조선이다’(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2006, 『마주보는 한일사 I』 사계절출판사)고 적고 이고 는 지중심으로 로 저술한 공통 교재의 연표에서도 기원전 194년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됨’을 역사시대의 첫 내용으로 놓고 있다.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 해안, 에서도

92) 小田省吾는 단군조선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箕子朝鮮과 衛滿朝鮮의 존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확실한 기사는 衛滿朝鮮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한다”면서 위만조선 이후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였다.(小田省吾, 1927 『朝鮮史大系 上世史』, 朝鮮史學會, 33쪽).

93) 제1부 제4장 제2절 ‘최초의 中華帝國’의 소단원 ‘한의 통일’에서 위의 책, 75쪽 주1).

만, 이를 그대로 믿는 연구자는 없다. 漢(아야)氏は 5세기 후반경 한국의 安羅(安邪, 阿那, 현재 경상남도 함안)國에서 도래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⁹⁴⁾, 秦(하타)씨는 6세기 중엽에 다양한 도래인을 규합하여 만든 擬制的인 씨족 조직이다⁹⁵⁾. 今來氏는 8세기의 『萬葉集』과 計帳 등에 보이며, 『新撰姓氏錄』에서는 山城國의 皇別과 神別 씨족으로 나오고 있는데⁹⁶⁾, 왜 이를 4군에 있었던 중국인이나 한반도인의 자손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대 일본에 전해진 것이 중국문화라는 선입견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사람들도 낙랑 등의 중국 근현 출신의 사람으로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일본 고대국가에서 백제, 가야, 신라, 고구려 출신 사람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들이 가지고 간 문화도 중국문화로 보고자 하는 교과서 저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낙랑군 설치에 관한 기사 이후 제1부 제4장 제4절 ‘중국의 분열과 수당제국의 성립’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설명이 보인다. 이 절은 ‘삼국의 분열’ ‘5호16국과 남북조’, ‘위진남북조의 사회’, ‘도교와 불교’, ‘수당의 재통일’, ‘동아시아세계의 발전’으로 구성되어 삼국시대 이후 남북조시대를 거쳐 당까지의 중국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난 후, 마지막에 주변의 동아시아세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우선 ‘수당의 재통일’항목에서 수가 3차에 걸친 고구려원정에 실패한 후 멸망하였다는 것과 당 고종대에 한반도 북부가 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⁹⁷⁾.

한반도의 삼국에 관한 설명은 ‘동아시아세계의 발전’항목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원전후에 건국한 고구려가 4세기 초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하고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였다는 것을 적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삼한이 있었으나, 4세기 중엽에 백제가 마한제국을 통일하고 신라가 진한제국을 통일하였다고 하여 이들 두 나라의 건국연대를 4세기 중엽으로 놓고 있는데⁹⁸⁾, 이는 일본의 다른 세계사 교과

94) 坂本太郎·平野邦雄 監수, 1990 『日本古代氏族人名辭典』 吉川弘文館, 39쪽. 加藤謙吉, 1998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15쪽.

95) 加藤謙吉, 위의 책, 206쪽.

96) 坂本太郎·平野邦雄 監수, 1990 『日本古代氏族人名辭典』 吉川弘文館, 88쪽.

97) 위의 책, 85쪽. 수, 당의 재통일 “2대 황제 煬帝는 대운하를 완성하여 남북교통의 대동맥으로 삼고 고구려를 세 차례 공격하였다. 그러나 高句麗 遠征에 실패하고 동란이 일어나 群雄의 한 사람 李淵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 태종과 다음의 고종에 걸쳐 당은 그 주변지역에 대원정을 거듭하여 한의 규모를 증가하는 대제국을 세웠다. 세력 범위는 조선반도 북부에서 동북부, 몽골고원, 내륙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및 그러한 주변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6도호부(안동, 안북, 단우, 안서, 북정, 안남)을 두고 장안에서 파견된 장관이 현지부족의 족장을 통해 피정복지의 백성을 통치하였다(기미정책).”

98) 위의 책, 88-89쪽. 동아시아세계의 발전 “한의 무제의 대원정 후 기원 전후에 중국의 동북부에 고구려가 일어나 4세기 초에 남하하여 낙랑군 및 대방군을 멸하고 조선반도의 북부를 지배하였다. 남부는 삼한(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4세기 중엽에는 반

서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는 변한을 가라, 가야, 임나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 변한이 6세기 중엽에 신라에 정복당한 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립하는 삼국시대’라고 보고 있는 점이 다른 교과서들과 다르다⁹⁹⁾. 6세기 중엽까지도 변한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교과서에서는 변한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4세기에는 大和政權에 의한 통일이 진행되어 加羅에 進出하여 백제와 연결하고 고구려에 대항하였다”고 하여 가라에 일본의 거점이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¹⁰⁰⁾, 임나일본부설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¹⁾. 그리고 마치 변한 지역의 일부에 가라(가야)가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교과서는 변한, 백제와 일본의 밀접한 관계를 서술하면서도 고대 한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화정권부터 奈良, 平安시대의 일본은 학자나 승려를 중국에 파견하여 그 문화의 수입에 노력하였으나(遣隋使, 遣唐使), 이 사이 大化改新을 거쳐 唐風의 律令國家 체제를 정비하여 天平文化를 開花시켰다”고 하여 중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후 신라가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이룩하였음을 간단히 서술하고 이어서 신라와 발해가 당의 관제와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신라가 골품제사회였다는 것과 발해가 고구려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적고 있다¹⁰²⁾.

도의 서남부에서는 백제가 마한제국을 통일하고 동남부에서는 신라가 진한제국을 통일하였다. 이 즈음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변한(가라, 또는 가야 내지 임나)은 드디어 그 북서부를 백제에 병합당하고 남은 지역도 6세기 중엽에 신라에 정복당해, 이로서 조선반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병립한 삼국시대에 들어갔다.”

99) 山川出版社, 위의 책, 88-89쪽.

100) 위의 책, 89-90쪽. **동아시아세계의 발전** “일본은 3세기경은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드디어 邪馬臺國이 일어나, 여왕 卑彌呼가 삼국의 魏에 조공하였다. 4세기에는 大和政權에 의한 통일이 진행되어 가라에 진출하여 백제와 연결하고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5세기에는 왜국의 諸王은 중국의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대화정권부터 奈良, 平安시대의 일본은 학자나 승려를 중국에 파견하여 그 문화의 수입에 노력하였으나(遣隋使, 遣唐使), 이 사이 大化改新을 거쳐 唐風의 律令國家 체제를 정비하여 天平文化를 開花시켰다.”

101) 이 교과서에서는 ‘5호16국과 남북조’에서 ‘4-5세기의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하여 중국대륙의 북위(북조)와 송(남조)와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 加羅(伽耶)와 왜를 표시하였다.(위의 책, 82쪽).

102) 위의 책, 89쪽. **동아시아세계의 발전** “드디어 신라가 강대해져 당의 지원을 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이어서 당의 세력도 물리쳐 676년 조선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하였다. 신라는 당의 관제와 불교문화를 받아들여 번영하였다. 그 사회에서는 출신 씨족에 의해 신분의 고하가 정해지는 골품제가 행해져 귀족의 힘이 강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백성은 중국 동북부에 거점을 두고 발해국을 세워 여기에서도 당의 官制,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였다.”

‘唐代的 동아시아 교통로’라는 지도 속에서 발해와 신라의 영역과 당에서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교통로와 발해와 일본 간의 교통로를 표시하였으나¹⁰³⁾, 신라, 발해와 일본의 교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진 자료로 ‘경주의 불국사’를 제시하고 “신라는 당으로부터 율령 체제와 불교 문화 등을 받아들여 高度의 문화를 개화시켰다. 불국사는 수도 경주의 동남쪽으로 16km의 산중에 있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원”이라고 사진 설명을 적고 있다¹⁰⁴⁾.

<고려, 조선>

이 교과서에서 다시 한국에 관한 언급은 제2부 제8장 ‘동아시아세계의 전개’ 제1절 ‘중국사회의 변화’에서 보인다. 이 절은 ‘五代·송’, ‘문치주의의 발흥’, ‘송의 사회와 경제’ ‘문화의 황금기’로 구성되어 당이 쇠퇴한 후 5대를 거쳐 송이 건국되는 과정과 송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서술은 ‘文治主義의 발흥’ 항목에서 “宋學은 정통의 유교사상이 되어 일본과 조선의 사상계에도 영향을 끼쳤다”¹⁰⁵⁾고 하여 송의 주자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는 제2부 제8장 제2절 ‘북방제민족의 도전’의 ‘요·서하·금’ 항목에서 보인다. 여기에서는 “당이 쇠퇴하였을 때 동아시아 일대에서 당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국가들은 쇠퇴하고 민족의식에 눈 뜬 나라들이 등장하였다”고 본문을 서술하고, 각주로 “10세기초 동북부에서 발해가 遼에, 조선반도에서는 신라가 고려에, 雲南의 南詔가 大理에 멸망하였고 일본의 平安朝에서도 唐風文化에서 國風文化로 변화가 보였다”고 적고 있다¹⁰⁶⁾. 당을 모방한 신라나 발해와는 달리 고려는 민족의식에 눈 뜬 나라로 보고 있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서술은 신라와 발해가 자주성이 없는 나라였다고 오해할 소지를 만들 것이다.¹⁰⁷⁾

또 女眞族에 관한 注에서 “조선반도의 고려에서는 그 북쪽에 사는 여진족을 刀伊(夷狄)라고 불렀다. 刀伊는 1019년 고려와 對馬, 壹岐, 北九州를 습격하였다. 이것이 「刀伊의 入寇」이다”라고 적고 있다¹⁰⁸⁾.

이후 고려에 대한 언급은 제2부 제9장 ‘13-15세기의 유라시아’에서 보인다. 이 장은 ‘연결되는 세계’, ‘몽골등장 이전의 동서교류’, ‘대몽골제국’, ‘원의 중국지배’, ‘동서

103) 위의 책, 89쪽.

104) 위의 책, 90쪽.

105) 위의 책, 147쪽.

106) 위의 책, 151쪽.

107) 酒寄雅志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일본, 베트남에 중국에 대등하려는 화이사상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2001, 『華夷思想野諸相』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店, 437-472쪽.

108) 위의 책, 152쪽.

세계의 직접교류’, ‘14-15세기의 유라시아’로 구성되어,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유라시아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세계제국이 등장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중 ‘원의 중국지배’항목에서 원의 정복과 지배정책을 설명하면서 고려가 원에게 복속한 나라이며 원의 지배에 협력한 高麗人이 있었음을 적고 있다¹⁰⁹).

이후 한국사 관련 내용은 제3부 제11장 ‘아시아의 변영’ 제1절 ‘일본의 동정’에 보인다. 이 절은 ‘중국과의 국교관계’, ‘새로운 세계로의 이행’의 순서로, 7세기초부터 14세기말 室町막부가 明과 국교를 맺어 勘合무역을 실시하게 될 때까지 중국과 일본의 교류에 대해 개괄하고 江戸幕府까지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사에 관해 서술하면서 한국사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과의 국교관계’ 항목에서 몽골의 일본 침략 때에 고려군이 포함된 것은 언급하지 않고 몽골의 일본 침략이 실패로 끝났을 즈음부터 倭寇가 한반도의 연안을 침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¹¹⁰.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항목에서 명이 勘合무역을 중단하자 일본이 중국의 책봉체제와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이나 江戸시대의 조선, 琉球와의 독자적인 통상체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¹. 이는 豊臣정권이 明 중심의 동아시아 책봉체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대륙을 침략하였다는 연구¹¹²)나 江戸막부가 海禁을 통해 將軍을 중심으

109) 위의 책, 156쪽. **원의 중국지배** “원은 남송을 멸하고(1279년), 티벳, 고려를 복속시켰다. 나아가 일본, 베트남, 자바, 비르마(현재 미얀마)를 공격하였으나 비르마를 제외하고 이들 원정은 실패하였다. 거대한 정복지를 극히 소수의 몽골인으로 통치하려고 몽골의 지배자는 피정복자를 복속한 순서대로 협력자로 이용하였다. 즉 위글, 탄구트, 킵차크, 티벳 등 중앙아시아의 사람과 元朝에 온 유럽인(이상을 색목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漢人(구 金國 領의 漢族, 高麗人, 女真人, 契丹人), 南人(구 남송의 한인으로 지주세력은 온존되었다)의 순이다.”

110) 위의 책, 169쪽. **중국과의 국교관계** “13세기에 중국을 지배한 원은 일본에 조공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鎌倉幕府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때문에 원은 군대를 보내 습격하였으나(蒙古襲來<元寇>), 실패로 끝났다. 이즈음부터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왜구라고 불리는 해적집단이 조선반도와 중국의 연안을 침략하게 되었다”

111) 위의 책, 170-171쪽. **새로운 시대로 이행** “그리고 寧波사건을 거쳐 16세기 중엽에 명과 勘合貿易이 단절하자 일본은 다시 중국의 책봉체제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뒤의 豊臣秀吉에 의한 조선침략이나 江戸시대의 조선, 琉球와의 독자적인 通商體制 등은 그 표현이다.” “이어서 전국을 평정한 豊臣秀吉은 1592(文祿원)년과 1597(慶長2)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였다(조선에서는 임진, 정유의 왜란이라고 한다). 이 침략은 장기간 조선전토를 전란에 휩싸이게 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秀吉의 病死로 겨우 끝났다. 이 침략전쟁으로 조선왕조와 豊臣정권이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援軍을 보낸 명도 경제가 악화하게 되었다.”

112) 佐佐木潤之介 1970 「統一政權論の歴史的前提」『歴史評論』241,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로 하는 화이질서로 재편하였다는 연구¹¹³⁾를 반영한 서술로 여겨진다.

이 교과서에서는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으로 조선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조선왕조와 豊臣정권이 쇠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군을 보낸 명의 경제도 악화되게 되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자료로 ‘풍신수길의 조선침략’을 싣고 “1592(壬辰·文祿원)년과 1597(丁酉·慶長2)년의 전후 7년에 걸친 침략으로 일본에 끌려온 다수의 조선인 도공들은 일본 각지에서 특색있는 製陶業을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⁴⁾.

그러나 江戸막부가 쇄국정책 하에 ‘네덜란드배와 중국배에 의한 무역만으로 통제하였다’고 하여¹¹⁵⁾,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선과 국교를 맺은 것이나 조선에서 通信使가 파견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조선에 관한 내용은 제2절 ‘동아시아 세계의 일체화의 진전’에 보이고 있다. 이 절은 ‘중화세계의 부흥’, ‘동아시아무역권의 형성’, ‘동아시아세계의 일체화의 완성’, ‘명·청의 사회경제의 진전과 세제·사상통제’, ‘명·청의 문화와 예수회사의 도래’, ‘중국에 인접하는 국가들의 변천’으로 구성되었는데, 명이 중국을 통일한 후 동아시아무역권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져 동아시아세계의 일체화가 청대에 진전되었으며, 명, 청대에 사회, 경제,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적고 있다.

‘동아시아일체화의 완성’ 항목에서 명의 멸망과정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豊臣秀吉에게 침략당한 조선에 대한 원군’이 명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적고 있다¹¹⁶⁾.

한국사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인접하는 국가들의 변천’ 항목에서 다시 고려와 조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¹¹⁷⁾. 여기에서는 고려의 정치(과거제), 사회(양반), 문화(대장

113) 加藤榮一, 1981 『鎖國と幕藩制國家』 『講座日本近世史2, 鎖國』 有斐閣, 104쪽.

114) 『新世界史』 山川出版社, 2007년 개정본, 170쪽.

115) 위의 책, 171쪽.

116) 위의 책, 174쪽. **동아시아세계의 일체화의 완성** “영락제의 사후 점차 국력이 약해진 명은 16세기가 되자 북에서 달단(원조의 후예인 몽골족), 동남해안에서 다시 왜구의 침입이 격화하였다(北虜南倭). 또 同世紀末부터 豊臣秀吉에게 침략당한 조선에 대한 원군과 여진과의 전쟁, 내란의 평정 등에 의한 재정난과 당의 과벌에 의한 싸움을 계속하는 관료와 환관의 권력남용으로 정치가 어지러워진 데다가 증세도 겹쳐서 사회불안이 증대하였다.”

117) 위의 책, 181-182쪽. **중국에 인접한 諸國의 변천** 「朝鮮」

“조선에서는 10세기에 신라를 멸한 왕권이 高麗를 세워 개성을 도읍으로 하였다. 고려는 당, 송의 관료제를 모방하여 행정제도를 정비하였고 科擧도 채용하였다. 조선에서 정치를 움직인 것은 특권을 가진 兩班(문반과 무반)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료층이었다. 12세기말에 무인이 문인에게서 정권을 빼앗았으나 드디어 몽골에 제압당하여 이에 복속하고, 元軍의 일본 출병의 기지가 되었다. 國初부터 보호받은 불교 이외에 유교가 발달하였고, 13세기에는 木板 『大藏經』이 인쇄되었다. 공예도 발달하여 高麗靑瓷가 탄생하였다.”

“14세기가 되자 倭寇를 진압한 이성계(태조)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왕조(李朝)를 세우고 한양(뒤에 한성으로 개칭, 현재 서울)을 도읍으로 하고 명의 冊封體制에 들어갔다. 명의 제도를 기초로 관료제를 정비하고 科擧를 다시 시행하고 주자학을 관학으로 하여 국가체

경과 고려청자)에 대해 언급하고, 고려가 양반 사회에서 무인정권으로 바뀌었다가 몽골에 복속한 후 일본 출병기지가 되었음을 적고 있다.

고려에 대한 언급 이후에 조선에 관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성계가 倭寇의 진압을 통해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과 조선이 건국한 직후 명의 책봉체제에 들어가, 명의 제도를 기초로 관료제를 정비하고,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주자학을 관학으로 삼아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음을 적고 있다. 그러나 양반의 파벌 싸움으로 정치가 혼란하여졌고 그 후 豊臣秀吉의 침략을 받아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과 명의 원군으로 격퇴하였으나 결국 17세기 전반 청의 공격을 받아 복속하였다고 적고 있다. 양반의 파벌 싸움 때문에 豊臣秀吉의 침략이나 청의 공격을 받게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조선전기의 문화에 대해서는 銅活字 인쇄와 훈민정음의 창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조선이 청에게 복속하였다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전 근대 한국 관련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通信使 파견과 같은 조선과 江戸幕府 간의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學習指導要領解説』에서 근린국가 간의 교류에 대해 서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이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이상 山川出版社의 「世界史B」 교과서에 보이는 전근대 한국 관련 서술을 검토하였다. 이 교과서에서 한 무제의 외정과 관련하여 위씨조선의 멸망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관련 서술이 등장하는 것, 일본이 遣隋使, 遣唐使를 파견한 것만을 언급하고 일본 율령국가가 신라나 발해와 활발하게 교류한 것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같다.

그러나 일본 고대사에서 활약하는 渡來人을 漢4郡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나, 6세기까지 弁韓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점은 이 교과서의 저자가 한국사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문화와 관련된 서술은 신라의 불국사와 조선시대의 동활자 인쇄술과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豊臣秀吉의 조선침략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이 일본에서 제도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전부다.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江戸幕府와 조선정부 사이에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것까지도 적지 않고 있는 것은 의외다. 山川出版社의 「世界史B」 교과서는 일본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채택해 온 교과서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교과서도 점유율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큰데, 이 교과서의 전근대 한국 관련 서술은 문제가 많다.

제를 정비하였다. 동활자로 책을 인쇄하고 15세기 중엽에는 고유의 음표문자인 훈민정음(한글)이 만들어지는 등,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양반은 드디어 정권을 둘러싼 파벌 싸움을 거듭하게 되어 정치는 혼란하였다. 16세기 말의 豊臣秀吉의 침략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 등의 활약과 명의 원군으로 격퇴하였으나 국력은 쇠퇴하여 17세기전반 청에 공격받아 복속하였다.”

4) 帝國書院의 『新詳 世界史B』

2007년 김정본 세계사B 교과서 중에서 전근대 한국관련 서술이 가장 많은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에서 우선 卷頭V의 ‘일본인 세계여행에’에서 “그 밖에 식민지가 된 조선반도나 만주, 대만 등에 성공을 꿈꾼 사람들이 이주하였다. 수학여행의 목적지도 되는 등 대륙의 인기가 높았다”고 적고 ‘20세기 식민지로의 여행’의 삽화로 『조선여행안내』라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한반도 가이드북을 소개하면서 “식민지가 확대된 시대에는 그들 지역에 관광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예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중학교 역사』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배웠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한국이나 대만은 식민지였다는 내용부터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고조선, 삼국, 신라, 발해>

이 교과서에서는 전근대 한국사 관련 내용은 모두 ‘동아시아’ ‘동아시아세계’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데¹¹⁸⁾,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오는 곳은 1부 4장 1절 ‘中華文明의 형성’이다. 이 절은 ‘동아시아세계의 풍토와 사람들’ ‘농경도시문명의 발생’ ‘은과주’, ‘춘추전국의 변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사의 무대와 지리적 환경을 서술하고 황하유역에서 농경도시문명으로 성립한 중국의 고대문명에 대해 은·주·춘추 전국시대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동아시아세계의 풍토와 사람들’에서 처음 나온다¹¹⁹⁾. 즉 동아시아의 무대는 유라시아 대륙 동부와 그 周緣의 한반도, 일본열도, 인도차이나반도인데, 화북에서 성립하여 퍼져나간 중화문명이 한자를 통해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 퍼져 동아시아세계를 만들어내었다고 적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세계를 中華文明이 퍼진 곳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1부 4장 2절 ‘秦漢제국과 동아시아’에서 보인다. 이

118) 이 교과서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보이는 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동아시아세계와 중앙유라시아세계를 별도로 나누어서 취급하고 있다.

119) 『新詳 世界史B』 帝國書院, 38쪽. **동아시아세계의 풍토와 사람들** “동아시아란 유라시아 대륙 동부와 그 주변에 펼쳐진 조선반도, 일본열도, 인도지나반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중앙유라시아세계와 겹치고 또 인접한 동남아시아세계와의 경계는 반드시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세계가 화북에서 성립하여 서서히 확대해 간 중화문명에 의해 특징지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한자이며, 한자에 의해 기록된 문자문화를 고유한 것이 풍토, 산업, 언어, 신앙의 다양성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하나로 만들었다.”

절은 ‘진의 통일’, ‘한제국의 외정과 내치’, ‘한대의 사회와 문화’, ‘동아시아 주연지역의 국가형성’의 순서로, 秦漢帝國이 성립함으로써 한자를 매개로 결합되는 중화왕조의 기본형이 확립되어 동아시아 지역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제국의 외정과 내치’ 항목의 漢 武帝의 外征 기사에서 처음 보인다¹²⁰⁾. 한 무제가 衛氏朝鮮을 멸하고 漢4郡을 설치하였다고 적고, 지도 ‘한(전한)의 영역’에서도 朝鮮4郡으로 낙랑, 진번, 임둔, 현도를 표기하고 韓과 衛氏朝鮮도 표시하였다¹²¹⁾. 앞에서 검토한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이 漢 武帝의 外征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 자체의 내용은 ‘동아시아 주연지역의 국가형성’ 항목에서 보이고 있다¹²²⁾. 여기에서는 학습목표로 “戰國시대부터 秦漢帝國에 걸친 통일 움직임과 선진 문화, 기술이 전해지자,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에서도 국가형성이 진전되어 중화왕조와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국가형성을 중국의 정치, 문화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1만 년 전에 바다에 의해 갈라지게 되었다고 적고 일본의 쌀농사를 長江 하류역의 稻作기술이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稻作이 시작된 것은 長江 유역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로 건너가서 한반도에서 발전한 稻作 기술이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¹²³⁾.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기원전 4세기경 대륙(주로 조선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 도작이 九州 북부에 전해지고 드디어 東日本까지 퍼졌다”고 적고 있듯이¹²⁴⁾, 일본에 전해진 稻作 기술은 한반도에서 전해졌음을 적을 필요가 있다. 이 교과서는 起源 중심적 서술 방법과 생략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120) 위의 책, 43쪽, 漢帝國의 외정과 내치 “또 동북방면에서도 衛氏朝鮮을 멸하고 樂浪 등 4郡을 두고 남방에서는 秦末에 독립한 南越을 멸하고 南海,交趾 등 9郡을 두었다.”

121) 위의 책, 43쪽.

122) 위의 책, 45쪽. 동아시아 周緣地域의 국가 형성 “조선반도와 일본열도가 바다에 의해 갈라진 것은 약 1만년 전 일이다. 일본열도에서는 기원전 1000年紀에 농경이 시작되어 드디어 長江 하류역의 稻作기술이 전해졌다.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4-3세기에는 在地 정치 집단이 성장하는 한편 半島 동북부에서 요동반도에 걸쳐 戰國7雄의 燕이 세력을 확대하여 秦漢 교체기에 燕 출신의 衛滿이 衛氏朝鮮을 세웠다. 한 武帝는 이를 멸하고 樂浪 등 4군을 두었으나 북방의 貊族이 고구려를 세우고 반도 남부에서는 韓族이 馬韓, 辰韓, 弁韓 등의 諸國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漢의 세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이들 諸國은 漢의 문화,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獨自적으로 국가를 건설해갔다.”

123) 田中耕司, 1995 「海域世界と稻作の傳播」 『講座文明と地域』 10 海と地域世界, 朝倉書店, 131쪽.

124) 2005년 검정 『新編 새로운 사회 歴史』 東京書籍, 19쪽.

한반도의 최초 역사에 대해서는 기원전 4-3세기 한반도 동북부에 在地 政治集團이 성장하였다고만 적고 그 정치집단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秦漢교체에 衛滿이 衛氏朝鮮을 세웠다고만 서술하였다. 위씨조선이 한반도 최초의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앞의 山川출판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이다.

한반도에 설치한 한4군을 통해 고구려와 삼한이 한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어갔다고 적고 있어 한국사의 자율성을 고려하려고 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¹²⁵⁾. 그리고 漢代에 漢과 한반도, 일본 열도의 국가 사이에 冊封체제가 성립하였음을 적고 注에서 왜의 邪馬臺國의 卑彌呼의 책봉기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반도 국가의 책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적고 있지 않다. 冊封體制에 관해서는 <키워드 冊封과 朝貢>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따로 설명을 추가하여¹²⁶⁾, 책봉을 받은 측이 이를 통해 무역을 하든가, 중국왕조의 권위와 문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중국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유목국가나 일본과 같이 책봉체제에 별로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한국사의 삼국시대에 관한 내용이 1부 6장 1절 ‘유라시아의 변동과 동아시아세계’에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중국의 분열과 유목민의 진출’, ‘南北朝와 그 사회’, ‘隋唐帝國의 형성’, ‘唐代的 사회와 경제’, ‘남북문화의 융합’,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형성’, ‘당과 유라시아의 변동’의 순서로, 유목민의 침입과 융합, 서방문화의 유입에 의해 동아시아의 사회가 크게 변용하고, 수당제국에서 집대성된 제도와 문화가 널리 수용되어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사 관련 내용은 우선 중국사의 서술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즉 ‘남북조와 그 사회’에서는 표1 ‘남북조시대의 흐름’의 설명문 속에서 “北朝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항상 북방의 유목국가였으며, 南朝는 柔然이나 조선반도의 고구려와 결합하여 북조에 대항하려고 하였다”¹²⁷⁾. 고 적고 있어, 중국 남북조시대 때 남조

125) 『新詳 世界史B』帝國書院, 45쪽. 동아시아 周緣地域의 국가형성 “이들 조선반도, 일본열도의 초기국가는 漢과 접촉, 교섭을 가지고 신하의 예를 취하기도 하여 漢 황제로부터 스스로의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중화사상 하에서는 황제는 천하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명분 때문에 실제로는 지배가 미치지 않는 지역의 군주나 수장에 대해서도 국내의 제후와 같은 지위를 주어 명목상 황제의 신하로 삼았다. 이와 같은 군신관계의 형식을 취한 국제관계를 책봉관계라고 하며 한대부터 점차 정비되어 갔다”

126) 위의 책, 54쪽. 키워드 책봉과 조공

“辭令(冊書)을 주고 영토를 주는(封建)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冊封이라고 하고, 책봉 받는 측은 신하의 예를 취하고 공물을 바치는(朝貢) 의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현실의 지배관계는 아니지만 황제의 권위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편 책봉 받은 측에서도 조공의 기회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든가 중화왕조의 권위와 문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책봉은 어디까지나 대외관계의 한 수단이며 중국왕조와 대등 또는 상위의 관계에 있었던 중앙유라시아의 유목제국이나 조공관계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경계한 일본 등은 책봉체제와 별로 관계없었다.”

가 유연이나 고구려와 결합하여 북조에 대항하려고 할 만큼 고구려가 강력한 국가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隋唐帝國의 형성’에서 양제의 고구려원정 실패로 반란이 일어나 수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고구려가 강국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당 고종 때 한반도에 진출했다고만 적고 있다¹²⁸⁾.

고대 한국사 자체에 관한 내용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형성’항목에서 보인다. 여기에서는 “조선반도, 일본열도 등 당의 주변 諸地域에서는 한자를 매체로 하여 律令, 都城制, 불교 문화를 도입한 국가가 정비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자문화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학습목표로 제시한 후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이어서 한반도의 삼국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¹²⁹⁾.

大和王權 이후 奈良시대까지 일본의 발전은 大陸, 즉 중국의 제도,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고¹³⁰⁾, 이러한 시각에서 遣隋使나 遣唐使를 통해 수,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문화가 전해진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열도의 쌀농사의 시작을 長江하류역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삼국에 대해서는 4세기 이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교과서에서 고구려의 건국은 漢代로 놓고 있기 때

127) 위의 책, 54쪽.

128) 위의 책, 55쪽. “그러나 계속되는 토목사업과 외정에 불만이 쌓여 양제의 고구려원정 실패를 계기로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였다.” “이어서 고종은 서돌궐도 복속시키고 조선반도에도 진출하여 당은 한 때 유라시아동방의 대부분을 덮는 대제국이 되었다.”

129) 위의 책, 58쪽. **동아시아 제국가의 형성** “3세기 이후 동방의 조선반도, 일본열도에서도 제 세력의 활동이 활발화하여 국가형성이 진전하면서 중국대륙과의 통교가 적극적으로 행해졌다. 왜라고 불리는 소국으로 나뉘어져있던 일본열도에서는 大和王權(4세기경-7세기)이 점차 강대해졌다. 5세기에는 자주 왜국의 왕(왜의 5왕)이 南朝에 조공하였고 또 조선반도 남부에도 개입하였다. 6세기이후는 大陸의 제도, 문화를 받아들하려고 노력하여 遣隋使, 遣唐使를 파견하여 유학생, 유학생을 보내 율령국가체제를 정비해갔다. 奈良시대의 天平文化는 불교색이 강하고 당의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조선반도에서는 4세기 이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병립하였으나 당과 결탁한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하고 이어서 당도 배제하여 676년에 최초의 통일국가가 되었다.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의 관료제를 도입하여 도읍 경주에서는 불국사 등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북방에서는 7세기말에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워 일본해를 통해 일본과도 활발히 통교하였다. 운남지방에서도 8세기에 南詔가 당과 토번의 싸움을 틈타 자립하였다.

일본을 포함한 이들 당의 주연제국의 대부분은 수당제국에서 완성된 律令, 都城制, 儒敎, 中國佛敎라고 하는 통치제도, 사상체계를 漢字를 매개로 하여 받아들였다.”

130) 1979 『岩波 國語辭典(第3版)』 岩波書店에 의하면 ‘大陸’은 “일본이 중국을, 영국이 유럽을 가리키는 말”로도 정의되고 있다.

문에 백제와 신라의 건국을 4세기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注 ‘조선반도의 대외관계’에서는 한반도 북부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수, 당과 항쟁하다가 당에게 멸망하였고, 한반도 남부에는 4세기 이래 왜가 자주 개입하였으나, 663년 백촌강 전투 이후 최종적으로 구축되었다고 적고 있다¹³¹⁾. 왜가 마치 중국의 수나 당처럼 강력한 세력이었으며, 4세기 이래 한반도에 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한반도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경합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지도 ‘4세기중엽-6세기의 조선반도’에서는 백제, 신라, 加耶諸國(加羅,伽耶,任那)을 표시하여 한반도 남부의 가야지역이 任那임을 밝히고 있다¹³²⁾. 4세기경에는 大和朝廷이 국내를 통일하고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과거의 任那日本府說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통일에 대해서는 당과 결합한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하고 다시 당도 배제하여 최초의 통일국가가 되었다고 하여 신라가 당과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 신라의 골품제를 “출신 씨족에 기초한 신분에 따라 위계나 관직, 혼인을 규정하는 제도”라고 注에서 설명하면서 이 신분제도와 함께 당의 관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읍 경주에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다고 적고 있다.

발해에 대해서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세운 나라로 일본해를 통해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적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7세기말부터 8세기말까지 일본과 신라가 활발히 교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과서도 일본의 고대문화를 설명할 때 한반도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련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여 신라, 발해가 수, 당제국에서 완성된 율령, 都城制, 유교, 중국불교라고 하는 통치제도와 사상체계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받아들여 한자문화권이 거의 윤곽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Topic’으로 ‘동아시아의 도성제’를 다루면서, 발해의 상경용천부가 당의 장안을 모방하였다고 적고 있다¹³³⁾.

131) 『新詳 世界史B』帝國書院, 58쪽, “북방에 위치한 고구려는 자주 서방의 수, 당의 공격을 받아, 당의 고종 때에 결국 멸망하였다. 한편 반도 남부에는 4세기 이래 자주 왜의 개입이 있었으나 왜는 663년의 白村江 전투에서 당, 신라 연합군에 대패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되었다.”

132) 위의 책, 58쪽.

133) 『新詳 世界史B』帝國書院, 58쪽. “長安은 새로 건설된 계획도시이며 동서남북에 가로가 만들어졌고 각종 시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성내는 또 벽으로 둘러싸였다. 이와 같은 도성제는 국가를 건설, 정비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이상적으로 여겨져 일본의 平城京, 발해의 上京龍泉府 등 각국에서 모방하였다”

<고려, 조선>

이후 이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은 1부 6장 2절 ‘동아시아 여러지역의 성장과 자립’에서 보인다. 이 절은 ‘당말오대의 변동’, ‘제민족의 자립 거란·여진·서하’, ‘북송과 남송’, ‘송대의 사회와 문화’ ‘아시아의 「국풍문화」의 움직임’ 등의 순서로 서술되었는데, “송에서 漢人의 사회와 문화가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한편 키타이, 여진 등의 유목 세력과 일본, 조선 등, 주연지역이 자립해간다”¹³⁴⁾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唐末五대의 변동’에서는 당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권위에 따르고 율령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신라와 발해가 당의 멸망 이후 멸망하였다고 적고 있어, 당의 멸망이 이들 나라의 멸망과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⁵⁾.

‘아시아의 「國風文化」의 움직임’에서는 왕건이 개성을 도읍으로 하여 高麗를 건국한 후 고려가 거란, 금의 침입을 받은 것과 무신정권이 등장한 것을 서술하고, 목판인쇄로 대장경이 출판된 것을 고려 불교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사례로 특기하였다. 注 ‘고려의 문화’에서는 “고려청자나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등 고도의 문화가 꽃피었다”고 적어 고려청자와 금속활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³⁶⁾.

이 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를 ‘國風文化’라고 하면서 이 문화가 등장하게 된 것을 중화문명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몽골帝國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注 ‘동아시아 諸國의 自尊의식’에서 “일본에서는 스스로의 문화, 전통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는 神國사상이 자라났고, 조선반도나 베트남에서는 자국을 중화왕조와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中華로 간주하는 소중화사상이 생겨났다”고 적고 있다¹³⁷⁾. 여기에서 한반도에

134) 위의 책, 60쪽.

135) 위의 책, 60쪽. **당말5대의 변동** “위글제국과 당이 멸망하자 그 영향 하에 있으면서 그 권위에 따르고 있던 제 지역에서도 변동의 물결이 퍼졌다. 당의 주연지역에서 율령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新羅, 渤海, 南詔는 10세기 전반에 이어서 무너지고 각지에서 여러 민족, 여러 세력이 자립하여 중소규모의 국가가 난립하였다.”

136) 위의 책, 64쪽. **아시아의 「國風文化」의 움직임** “조선반도에서는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개성을 도읍으로 하여 반도를 통일하였으나 북쪽의 키타이, 금의 침입을 받았다. 12세기말에는 일본에서 鎌倉幕府가 성립하고 고려에서도 무신정권이 출현하여 문치주의의 송과는 역으로 무인이 실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되었다. 10세기이후의 시대는 당대에 확대된 불교문화가 각국에서 독자적인 발달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다. 키타이제국과 서하에서는 당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불교문화가 발달하였고 고려도 불교를 국교로 하고 목판인쇄로 고려판대장경이 출판되었다. 금, 송에서도 선종이 발전하고 유학뿐만 아니라 유, 불, 도 삼교가 함께 사대부의 교양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각국의 「국풍문화」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은 中華文明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과 憧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드디어 일본과 조선에서는 자국을 중화왕조와 견줄 수 있는 존재로 보아 다른 나라들 보다 상위에 놓는 의식이 자라나 이와 같은 의식은 몽골제국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강화되었다.”

등장한 소중화사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문화의 영향에서 이탈하여 國風文化를 이루었다고 보면서 이를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도 확대하여 설명하려 하였는데, 일본의 국풍문화는 일본 지배층이 중국문명이나 古典을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과정, 즉 당문화의 수입이 일단락한 뒤 그것을 咀嚼하는 단계에 쫓겨난 것으로¹³⁸⁾, 이를 사정이 다른 지역의 문화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제10장 ‘유라시아·아프리카의 바다의 세계’ 제2절 ‘구세계를 덮은 海上네트워크’에서 한반도에서 관한 내용이 보인다. 이 절에서는 ‘무슬림상인과 중국상인의 해상진출’, ‘유라시아, 아프리카를 뒤덮은 네트워크와 아시아의 풍요’, ‘변경의 무역 붐과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의 순서로, 몽골제국시대까지 유라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끌어들이는 海上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거기에 개화한 문명이 일본열도와 유럽 등의 변경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관련 내용은 ‘변경의 무역 붐과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에서 보이는데¹³⁹⁾, 한반도에서 10세기 전후부터 무역이 발달하여 상인들이 활약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약한 것을 가리키는 듯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려 청자가 수출품으로 많이 수출되었다고 적고 있다. 新安海底遺物과 琉球의 무역품 중에 고려청자가 있었지만¹⁴⁰⁾, 이것이 고려시대의 주요 수출품은 아니었다¹⁴¹⁾.

이후 한국관련 서술은 2부 ‘해양에 의한 세계의 일체화’ 1장 ‘아시아 제지역의 영화와 성숙’ 1절 ‘명의 국제질서와 동·동남아시아’에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명의 성립과 동아시아’, ‘명의 海禁과 아시아해역’, ‘琉球와 말라카의 바다의 시대’, ‘명후기의 경제·사회의 발전’, ‘16세기 경제의 활황과 정치·사회변동’, ‘청의 형성과 티벳 불교세계’의 순서로 14-17세기에 명의 국제질서의 성립과 해체를 축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경제적인 결합을 강화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관련 서술은 ‘명의 해금과 아시아해역’에 보인다.

137) 위의 책, 54쪽.

138) 大津透, 2001 『日本の歴史6, 道長と宮廷社會』講談社, 368-369쪽.

139) 『新詳 世界史B』帝國書院, 102쪽. **邊境의 무역 붐과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 “조선반도나 일본열도에서도 10세기 전후부터 무역이 발달하여 양 지역의 상인이 중국상인과 함께 海上貿易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또 중국이나 인도 등의 대국 이외에서도 수공업기술이 진보하여 고려의 청자, 일본의 도검이나 공예품, 자바의 면직물 등이 많이 수출되게 되었다.”

140) 山本信夫, 1997 「新安海底遺物」『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10, 對外交渉, 158쪽. 閔德基, 1999 「琉球의 역사」『朝鮮과 琉球』아르케, 16쪽.

141) 羅種宇, 1995 「5대 및 송과의 관계」『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300쪽.

‘명의 해금과 아시아해역’에서는 학습목표로 “명은 沿海의 질서 회복을 위해 朝貢·冊封관계와 海禁을 결합시킨 엄격한 통교관리체제를 갖추었고 조선과 일본도 이 질서를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적고 있듯이, 사무역이 발달하였던 서해에서 명의 통교관리체제가 정비되면서 조공무역 만이 가능해진 것을 서술하고 있다.

송, 원대 이후 서해에서 해상교역이 발달하여 한반도 연안에도 港市가 번영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구체적인 항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鎌倉막부가 쇠퇴하면서 14세기에 왜구가 출현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 왜구(전기왜구)에는 조선반도, 중국의 상인이나 곤궁한 연안주민이 합류하여 諸國은 대책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적고 있어 왜구에 한반도나 중국의 상인이나 곤궁한 연안 주민이 합류하였다고 하였다¹⁴²⁾. 왜구의 민족 구성 문제는 한일 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위 내용은 왜구에 한반도나 중국인이 포함되었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¹⁴³⁾.

이 교과서에서는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등장을 왜구 격퇴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해상질서가 문란해진 것이 고려왕조의 멸망을 가져왔으며 해상 질서의 회복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공통된 국가적 과제였음을 암시하고 있다¹⁴⁴⁾.

조선에 대해서는 명의 冊封을 받고 주자학, 과거 등, 명의 제도를 모방한 국가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 밖에 ‘한글(훈민정음)’에 관해 “15세기 전반 세종 때에 독특한 표음 문자인 한글이 제정되어 訓民正音으로 공포되었다”고 注로 적고 있다.

이어서 ‘류구와 말라카 바다의 시대’에서는 조선이 류구 중심의 무역네트워크에 포

142) 『新詳 世界史B』 帝國書院, 105-106쪽. **명의 海禁과 아시아 海域** “송, 원대의 동지나 해역에서는 해상교역이 발전하여, 일본열도, 한반도, 중국연안 각지에서 港市가 번영하였다. 14세기에 동란이 확대되어 일본에서는 鎌倉幕府가 쇠퇴하자 교역 담당자였던 海商, 무사단 등 자립적인 지방세력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해상이나 연안에서의 습격, 약탈 행위가 활발하게 되었다. 그들 왜구(전기왜구)에는 조선반도, 중국의 상인이나 곤궁한 연안주민이 합류하여 諸國은 대책에 골머리를 앓았다. 명이 성립하자 홍무제는 왜구를 힘으로 누르려는 방침을 취해 연해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해상교역 그 자체를 금지하고(海禁) 대외관계를 국가 간의 조공, 책봉관계에 한정한다고 하는 엄격한 통교체제를 갖추었다. 이 때문에 오래동안 조공을 피하고 있던 일본도 1392년에 장군 足利義滿이 南北朝의 내란을 통일하자 朝貢, 冊封을 받아 朝貢貿易을 개시하였다(勘合무역). 같은 해 몽골의 영향력이 강한 조선반도에서도 왜구의 격퇴에 공적이 있던 이성계가 고려를 없애고 조선왕조(1392-1910)를 세웠다. 조선도 명의 冊封을 받고 주자학을 도입하고 科擧를 정비하는 등, 명의 제도를 모방한 국가건설을 추진하였다.”

143)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145-155쪽.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浜中昇, 1996 「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 『歴史學研究』 685, 60쪽. 이영 「왜구의 주체」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김보한 「中世 麗·日 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 앞의 책,

144) 浜中昇은 고려로부터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성의 국제적 계기로 왜구에 대해 언급하였다(1986, 「高麗末期政治史序說」 『歴史評論』 437, 62-63쪽.

함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¹⁴⁵⁾. 15세기 중반 이후 명의 冊封을 받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센터를 이루었던 琉球를 통해 한반도도 이 무역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음을 적고, 그림자료로 ‘進貢船이 늘어선 那覇港(17세기)’을 제시하면서 “琉球 왕국의 王城 首里城과 그 外港 那覇는 명과 동남아시아, 일본, 조선반도를 연결하는 교역센터로 번영하였다”는 설명문을 넣고 있다.

또 注로 ‘室町시대의 日朝관계’에 대해 “대외관계를 국가 간에 한정하여 교류의 창구를 지정하는 명의 방식은 일본·조선에서도 통용되었다. 조선은 對馬의 宗氏를 창구로 하여 室町幕府와는 대등한 형식으로, 서일본의 大名, 商人과는 朝貢 형식으로 교역하였다¹⁴⁶⁾”고 적고 있다.

이후 ‘16세기 경제의 활황과 정치, 사회변동’에서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서술하고 있다¹⁴⁷⁾. 이 교과서에서는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注로 “일본에서 文祿·慶長の 役, 조선에서는 壬辰·丁酉의 倭亂이라고 한다. 일본군은 이순신의 수군과 명의 援軍의 반격으로 고전하여 秀吉의 죽음으로 철병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한 佐佐木潤之介나 田中健夫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서술 내용은 마치 조선이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지키려고 하다가 일본에게 침략당하게 된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후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2부 1장 2절 ‘세계제국 청과 아시아제국의 성숙’에 보인다. 이 절에서는 ‘동아시아제국의 대외관계통제’, ‘유라시아세계제국으로서의 창조’, ‘청대중국사회의 발전과 팽창’, ‘일본과 조선의 안정과 성숙’,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럽인과 중국인의 진출’의 순서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대외관계,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17세기의 위기를 극복한 것과 동남아시아가 華人과 유럽인의 지배에 종속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제국의 대외관계통제’에서는 청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쪽의 豊臣秀吉과 북쪽의 淸의 침공을 계속 받은 조선이 명이 멸망하기 전에 청에 복속하게 되었다고 적고

145) 『新詳 世界史B』帝國書院, 106쪽. 琉球와 말라카의 바다의 시대 “15세기 전반에 中山王이 琉球를 통일하였다. 명의 책봉을 받은 琉球국은 福建商人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 조선반도를 잇는 무역센터가 되어 동남아시아와 일본열도의 산물이 琉球의 조공품으로 명에 갔다.”

146) 위의 책, 106쪽.

147) 위의 책, 109쪽. 16세기 경제의 활황과 정치, 사회변동 “秀吉은 왜구를 금지하는 한편 스스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조선침략(1592-93, 1597-98)을 하여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였다.”

있다¹⁴⁸). 그리고 청은 조선과 계속 책봉과 조공무역 관계를 이어갔으며, 국경에서도 조선과 무역을 하였다고 적고 있다¹⁴⁹).

조선 자체에 관한 설명은 ‘일본과 조선의 안정과 성숙’에서 보인다¹⁵⁰). 조선이 청에 복속한 후 冊封과 朝貢무역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국경지역에서도 무역을 하였으며,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여 통신사를 파견하였음을 적고 있다. 그리고 조선 사회가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였으며, 국내경제는 토지 생산물에 기초한 자급 경제 사회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江戸幕府의 대외정책인 鎖國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도곽-「鎖國」과 「네 출입구」에서 “鎖國은 국가에 의한 통교관리의 한 유형으로 나라를 완전히 단아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네덜란드인과 중국 상인과 무역하는 막부의 長崎口 이외에, 對馬의 宗氏와 조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對馬口, 薩摩藩이 琉球와 琉球 경유의 對清貿易을 하는 薩摩口, 아이누와 무역하는 松前口가 열려있었다(네 출입구)”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시점을 바꾸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¹⁵¹) <일본과 조선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¹⁵²), ‘江戸에 온 朝鮮通信使’라는 그림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근대 전통사회의 특질에 대해 비교사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
- 148) 위의 책, 111쪽. **동아시아제국의 대외관계통제** “한편, 남쪽의 豊臣秀吉과 북쪽의 淸의 침공을 계속 받은 조선은 명이 멸망하기 전에 청에 복속하게 되었고 또 琉球왕국은 17세기 초에 薩摩의 島津씨의 지배하에 놓였다.”
- 149) 위의 책, 112쪽. “琉球, 朝鮮이나 동남아시아 등 明代에 조공제도를 수용한 지역에 대해서는 책봉과 조공무역을 계속하였다. 남방의 바다로부터 오는 유럽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항구에서의 교역을 인정하여 1757년 이후는 廣州항에서만 公行(특허상인 조합)을 통해 무역하도록 하였다. 육상에서도 러시아, 조선과 국경에서 무역을 하였다.”
- 150) 위의 책, 115쪽. **일본과 조선의 안정과 성숙** “한편 조선에서는 과거에 의해 관료를 배출하는 양반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의 유력자층이 지배를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여 자주 조선통신사를 보냈고, 청에게는 책봉을 받았으나 무역은 청에 대한 조공, 국경무역과 對馬를 통한 대일무역에 한정하였으며, 국내경제는 은이 아니라 토지의 생산물에 기초한 자급적 경제가 전개되었다.”
- 151) 이 교과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면적,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소개하는 ‘시점을 바꾸어’라는 코너를 만들어 모두 26개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 152) 위의 책, 115쪽
 “무사가 전국을 분할지배하고 고정적인 신분제가 취해진 일본과는 달리 주자학을 받드는 문관이 관료기구에 의해 통치하는 조선은 국가체제에서는 다른 면이 눈에 띈다. 그러나 양국에서는 남성 중심의 소농민 가족, 친족과 그들을 주체로 하는 촌락, 균질한 국민의식과 화교에 지배당하지 않는 독자적인 시장경제 등 매우 닮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 중화제국에 대해서도 조선에서는 만주인인 청에 대해 자신이야말로 중화라고 하는 小中華 의식이 자랐고, 일본에서는 中華의 文에 대해 일본의 武, 王朝交替에 대해 萬世一系라는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自尊意識이 만들어졌다.”

이상 제국서원의 「세계사 B」 교과서의 전근대 한국관련 서술을 살펴보았다. 다른 교과서보다 한국관련 서술도 많고, 고려시대의 대장경 목판인쇄, 고려청자, 금속활자, 조선시대의 한글 등 한국의 발달된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稻作 기술이 한반도에서 전파한 것과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등과 일본이 활발히 교류한 사실이나 일본 고대사회에 끼친 한반도 국가들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고대문화를 설명할 때 한반도를 무시하고 중국 문화와의 관련만 강조하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전형적인 서술방법이다. 이 점에서는 이 교과서도 다른 교과서나 별로 다르지 않다.

4. 결론

이상 2007년도 검정에 합격한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의 전근대 한국관련 서술내용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구속하는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교과서의 서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사 교과서에 묘사된 韓國史像이 『학습지도요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습지도요령』에 의하면 전근대 한국사는 동아시아세계사 속에서 전개되는데, 전근대 동아시아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주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근대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역전되지만, 한국은 항상 주변에 불과한 존재로 묘사되게 된다. 그 결과 전근대 한국사는 중국사의 객체로 등장하게 된다. 實教出版의 『世界史A』 교과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습지도요령』이 바뀔 수 있을까? 이는 『학습지도요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大國 중심, 強者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는 시각을 유지하는 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鈴木亮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시사적이다.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는 한국도 중국도 베트남도 몽골도 내륙아시아도 시베리아도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참가하여 형성할 수 있었다¹⁵³⁾.”

일본 세계사 교육에서도 동아시아 세계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만 진정한 동아시아세계사를 쓸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교과서가 등장하여 한국사도 새로운 모습으로 묘사되기를 기대한다.

153) 鈴木亮, 1994 「朝鮮史はどう教えられてきたか」 『日本からの世界史』 大月書店, 111쪽.

일본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변화

남 상 구(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네덜란드 하원(11월 8일), 캐나다 하원(11월 28일), 유럽의회(12월 13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미 하원)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이 문제를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1993년 고노담화¹⁾를 계승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동원의 (협회의)강제성을 부정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공개적으로는 고노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였다. 고노담화는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 군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노담화가 갖는 또 하나 중요한 의의는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똑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은 고노담화 이후의 연구 성과는 물론, 고노담화의 내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1993.8.4) 요지

조사결과 ①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②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 ③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④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는 일본군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것에 관여했다 ⑤ 위안부의 모집에 있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담당했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한 사례가 많으며, ⑥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사실도 명백해졌다 ⑦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 상황하에서 치참했다.

당시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 기회에 새로이 그 출신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다수의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똑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결국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데에는 1991년 김학순씨가 실명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것과 1993년 8월 고노담화가 발표된 것이 결정적이 계기로 작용하였다.²⁾ 1994년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10사 20종 중, 9사 19종)와 1997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교과서(7사 7종)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기술된다. 그러나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하 ‘새역모’로 표기) 발족이후,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 대한 비판이 조직적으로 강화되었고, 그 결과 2001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각 출판사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특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중학생은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기에는 연령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³⁾

본고는 1997년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2007년 4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 및 공민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중학교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

출판 사명	1997년도 판		2002년도 판		2006년도 판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東京 書籍	① 위안부로서 意思에 반하여 전지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	35.8	기술 없음	49.5	기술 없음	51.2

2)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 御手洗 康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장은 “당시 1991년경부터 위안부였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사건으로 보도되고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매스컴 보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배경과 함께, 1993년 8월 정부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 일단 위안부 관계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나왔다는 점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147회-중의원-예산위원회제3분과회-02호-2000.2.28)라고 답변했다.

3) 이에 대해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종차별, 계급차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근대현대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일본군 ‘위안부’ 국제학술대회(2007.11.30) 자료집 65쪽)

출판 사명	1997년도 판		2002년도 판		2006년도 판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大阪 書籍	①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서 전쟁터로 연행했다. ② 중군위안부와 강제연행, 일본군에 연행된 대만 사람들과 국적에 의한 전후보상의 차별 등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진설명: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요구하며 데모행진하는 한국의 元중군위안부들(1994, 도쿄)	20.2	기술 없음	13.7	기술 없음	15.4
帝国 書院	① 이들 지역의 출신자 중에는 위안부였던 사람들, (중략) 등이 있습니다. - 남성은 병사로, 여성은 위안부 등으로 차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습니다.	1.5	① 전시중, 위안시설에 보내진 여성과 (중략) 등의 보상문제가 재판장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전후처리와 근린제국'의 주)	8.7	② 전시중, 위안시설에 보내진 여성, 일본군인으로서 징병된 한국·대만의 남성 등의 전후보상 문제가 재판장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전후처리와 근린제국'의 주)	14.2
教育 出版	①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위안부로서 전쟁터로 보내졌다. ② 元위안부, 학살과 강제연행·강제노동의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전후보상문제의 항쟁) - 1994년 현재, 상기 사진의 元위안부 이외 (중략) 20수건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 - 사진 설명: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元위안부와 이를 지지하는 일본의 시민그룹	21.7	기술 없음	17.5	기술 없음	11.8

출판 사명	1997년도 판	2002년도 판	2006년도 판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日本 書籍 新社 ※200 2년도 까지는 日本 書籍	① 여성을 위안부로서 중군시켜 참혹한 취급 을 했다.	① 또한 조선 등 아시 아 각지에서 젊은 여 성이 강제적으로 모 집되어, 일본병의 위 안부로서 전장에 보 내졌다. ② 강제연행된 사람들 과 元위안부의 여성 과 남경사건의 희생 자들이 일본 정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연 이어 청구하고 있다 (‘일본의 전후처리’) - 사진설명 : 김학순 씨의 호소,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 상을 요구하는 재 판을 청구한 김학 순씨(1991).	① 군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군 병사를 위하여 조선 등 아시아의 각 지 역에서 젊은 여성을 모 아, 전쟁터에 보냈습니 다. ② 한국 ‘태평양전쟁 유족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 (아사히신문 1991.12.6) - “강제동원”으로 집단제소, 元중군 위안부 등 35명 - 중군위안부의 경우, 군의 실질적인 관리 하에 매춘을 강요당 해 현지에 남겨지거 나 군과 함께 옥쇄. - 원고측은 ‘일본정부 는 군의 관여를 인 정하지 않고 전혀 보 상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 김씨, 실명을 밝히 고 증언(김학순) - 조선 출신 중군위 안부는 약 20만명 이라고도 여겨지는 데, ‘본명을 감추고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라고
清水 書院	① 또한, 조선과 대만 등의 여성 중에는 전 지의 위안시설에서 일 했던 사람도 있었다.	① 또한 전지의 비인 도적인 위안시설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 선과 대만 등의 여성 도 있었다.	기술 없음

출판 사명	1997년도 판		2002년도 판		2006년도 판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내용 및 채택률	
日本 文教 出版	① 위안부로서 전쟁터 의 군을 隨行했던 여 성도 있었다.	3.3	기술 없음	1.4	기술 없음	1.4
扶桑社	발행 없음		기술 없음	0.06	기술 없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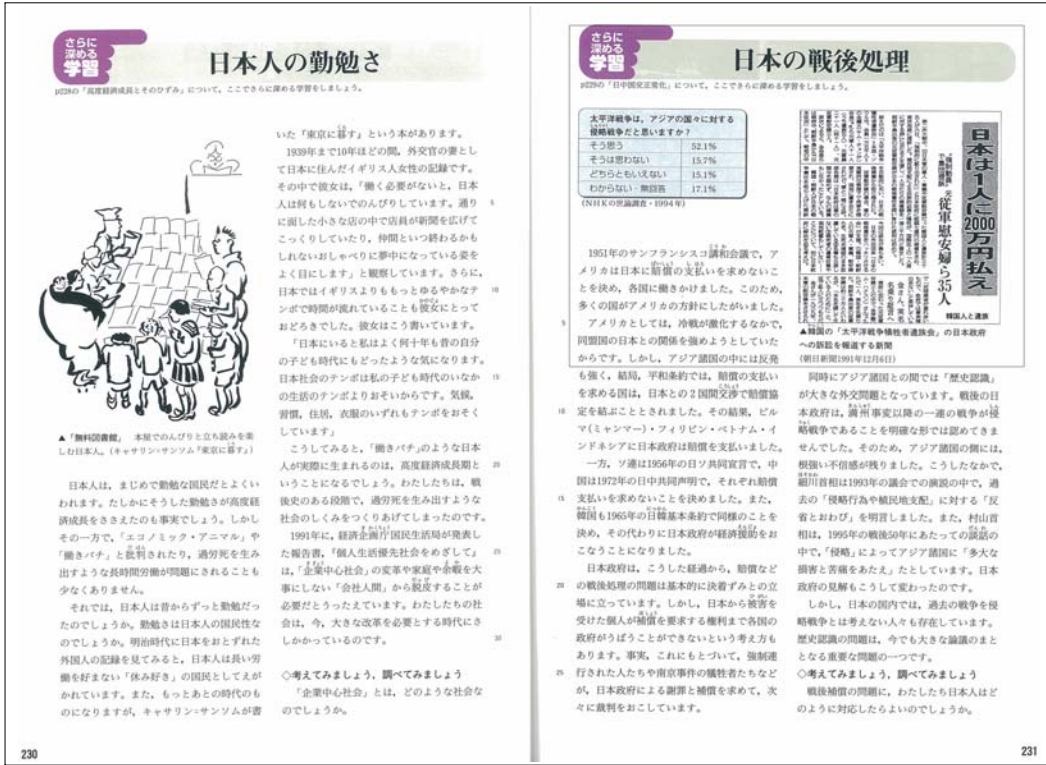
(주1) 채택률은 1997년도 판, 2002년도 판은 우에스기 사토시 자료, 2006년도 판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

(주2) ①은 동원관계, ②는 전후보상 관련 기술

먼저 일본군 '위안부' 동원 관련 기술의 양적 변화를 보면 1997년도 판은 7개 교과서, 2002년도 판은 3개 교과서, 2006년도 판은 2개 교과서로 눈에 띄게 줄어든다. 2006년도 판의 2개 교과서도 1개 교과서는 동원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전후보상에 대한 기술이다. 단 특기할 만한 것은 日本書籍新社(2002년도까지는 日本書籍)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축소된 것은 이 문제를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 채택률이 1997년 14.7%, 2002년 6.9%, 2006년 3.1%로 급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충실하게 기술한 교과서도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도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 시장을 고려한 '자기 검열' 결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크게 동원사실에 관한 내용과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1997년도는 모든 교과서에 위안부로서 동원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東京書籍과 日本書籍은 '위안부로서 意思에 반하여', '위안부로서 중군시켜 참혹한 취급을 했다'고 동원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성과 위안소에서의 참혹한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日本書籍(新社)는 2002년 판에서는 '강제로 모집되어 일본병의 위안부로서', 2007년 판에서는 '군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군 병사를 위하여'라고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전후보상 문제 관련, 아사히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일본군 '위안부'가 '군의 실질적 관하에 매춘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림1> 日本書籍新社 2007년 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



III.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 개요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의 수는 <표1>과 같다. 관련 기술이 없는 세계사B의 경우는 관련 기술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도 관련 기술이 없었다.

<표1> 2007년도 검정 통과 교과서와 '위안부' 기술 교과서 수

	일본사		세계사		정치·경제	윤리
	A	B	A	B		
교과서 수	4	6	2	3	4	3
기술 교과서	4	5	2	0	4	1

출판사별 기술내용은 <표2>와 같다. 역사교과서가 ‘위안부’ 동원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정치·경제와 윤리 교과서는 전후 보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출판사별 기술 내용

과목명	출판사명	기술내용			
		‘위안부’ 동원	보상 문제	기타	
일본사	A	第一	○	○	
		三省堂	○	○	
		山川	○		
		東書	○	○	○
	B	実教(高校日本史B)	○	○	○
		実教(日本史B)	○	○	
		三省堂	○		
		清水	○		
		山川(新日本史)	○		
세계사	A	東書	○		
		実教	○		
정치·경제		東京		○	
		清水		○	
		実教		○	
		第一		○	○
윤리		実教		○	

3. 검정 의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검정의견은 윤리 1건(実教出版)으로,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내용에 대해 “전후보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는 지적이었다. 출판사는 검정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표3〉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과 그에 따른 수정문

과목	검정수리번호 출판사	원문	검정의견	수정문
윤리	18-70 실교출판	<p><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u>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u> 정부는 전후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p>	<p>전후보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p>	<p><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전후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2007년 해산).</p>

검정의견이 적었던 것은 2006년도 검정에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되었다”는 기술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되었다”고 수정됨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나 관여를 명확하게 기술한 내용이 검정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정의견은 1996년도 검정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6년도 검정에서는 ‘일본군은 조선과 대만 등지에서 여성을 종군위안부로서 전쟁터에 보냈는데, 이것이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술에 대해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의 조사상황을 고려해, 오해가 없는 기술을 하도록 모색하여야 한다’는 검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교과서 기술은 ‘조선과 대만 등지에서 종군위안부로서 전쟁터에 보내진 여성도 있고’라고 ‘일본군은’이라는 주체가 삭제된다.

이번 검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례가 출판사의 기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第一출판사의 경우, 현행 교과서에는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하거나, 강제연행해서 종군위안부로 삼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2007년도 검정본에는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고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자기 검열’의 결과였다.⁴⁾

4) ‘자기 검열’의 현실적인 이유로는 교과서 채택률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日本書籍(新書)의 교과서 채택률을 보면 1997년 14.7%, 2002년 6.9%, 2006년 3.1%로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었던 것도 검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교과서 출판사의 '자기검열'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⁵⁾ 2007년도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하야시 히로후미(林 博史)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행위에 대한 기술에 검정의견이 붙으면 국제문제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 신청단계에서 기술을 줄이는 교묘한 방법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⁶⁾고 평가하고 있다. 즉 검정단계에서 검정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 외적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내용 검토

(1) 현행 교과서와 비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2003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 일치한다(별첨1). 2006년 교과서의 경우도 2002년 검정 통과 교과서와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일치한다(별첨2). 2002년, 2003년 검정과정에서 교과서 출판사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 대해 일정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 '위안부' 동원 사실

선행연구에 의해 명확해진 일본군 '위안부'제도 및 동원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위안소' 설치 목적은 강간방지, 성병만연 방지, '위안'제공, 스파이 방지였다.⁷⁾ 둘째, 구 일본 육해군이 필요에 의해 창설한 것으로 위안소의 개설, 건물의 제공, 사용규칙 및 요금 등을 군이 결정·시행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군이 감독·통제했다는 점이다.⁸⁾ 셋째,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의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에 의해 국외로 이송되어 위안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역되었다. 이것은 인신매매와 유괴죄, 또는 당시의 형법에서도 국외유괴죄·국외이송죄로 불리던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점령지에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군도 이러한 인신매매나 유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⁹⁾ 넷째,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은(인도네시아에 억류되었던 네덜란드 여성을 포함)은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로부터 여성을 제공받거나 일본군

5) 林 博史 「沖繩戦『集團自決』への教科書検定」(『歴史学研究 第831号』2007. 10), 10쪽.

6) 앞의 책.

7) 吉見義明 「『從軍慰安婦』問題で何が問われているのか」中村政則ほか編 『歴史と真実』筑摩書房, 1997) 56-58쪽

8)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성명”(일본 전쟁책임 자료센터, 2007.2.23)

9) 앞의 자료

과 일본군 지배하에 있던 관현에 의해 납치되어 ‘위안부’로 된 경우도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역 당했다.¹⁰⁾ 이러한 선행연구와 1993년 고노담화가 교과서 기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위안부’ 동원 관련 기술

과목명	출판시명	기술 내용	
일본사	A	第一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111쪽)
		三省堂	여성도 정신대로 조직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에 종사되었고, 또한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117쪽) 점령지에서는 일본은 군정을 실시하여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노동자와 종군위안부 등으로 동원했다. (126쪽)
		山川	또한 위안부로서 각지의 軍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다(이른바 종군 위안부).(200쪽)
		東書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소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 동인도 등에서부터 일본의 오키나와제도, 홋카이도, 사할린 등에까지 이르렀다. (148-149쪽)
	B	実教 (高校 日本史B)	일본군도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는 일본군의 監理하에 병사의 性 상대로서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네덜란드 등의 많은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했다.(203쪽)
		実教 (日本史B)	또한 다수의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性의 상대로서 ‘종군위안부’로 되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前線과 오키나와 등으로 연행되었다. (355쪽)
		三省堂	여성도 정신대에 조직되어 군사공장 등 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 (330쪽)
		清水	또한 전지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데, 조선인이 많았다. (219쪽)
		山川 (新日本史)	나아가 조선인 여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356쪽)
	세계사	A	東書
実教			종군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여성도 적지 않았다. (147쪽)
정치·경제	第一	(주1) 전시중, 중국·조선·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다수의 여성이 연행되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10) 앞의 자료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교과서 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의 관여와 책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實教 『高校日本史B』의 “일본군도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는 일본군의 監理하에”라는 기술을 제외하고는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고 기술, 군의 관여와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둘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확하게 지적한 교과서는 山川(일본사B,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 三省堂(“강제적으로 노동자와 종군위안부 등으로 동원했다”)이다. 實教(『日本史B』, “연행되었다”), 第一(정치·경제, “연행되었다”), 實教(『高校日本史B』, “동원했다”), 東書(“동원되었다”)의 경우도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성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을 지적한 교과서도 동원이나 연행의 주체가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고 있다.

셋째, ‘위안부’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전시동원(강제동원) 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第一(일본사A), 清水, 山川(일본사B)의 경우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 동원의 대표적 사례로 明記하고 있다. 明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민지에서의 황민화 정책, 전시동원 정책의 일부로 기술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지배 문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三省堂, 實教(『高校日本史B』)의 경우는 식민지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네덜란드·베트남 등의 점령지 여성도 위안부로 동원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3) 보상 문제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대전(大戦)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미 고통에 이르신 위안부 출신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분들에 대한 의료, 복지지원사업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 최대한 협력”해 왔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 특히 한국의 피해자들은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또한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 보상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고, EU의회 결의안도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권고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가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전후처리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표5> '위안부' 보상 문제 관련 기술

과목명	출판사명	보상 문제
일본사	第一	강제연행과 '중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도 남아있다.(170쪽)
	三省堂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만들게 하여 지원했고 (127쪽)
	A 東書	<p>그 동안 모금을 모아서 '중군위안부'였던 사람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1995)하고 (중략) 이러한 사실들은 국제적인 인권인식의 고조를 반영한 것이다. (28쪽)</p> <p>아시아여성기금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에 있어서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금전문제화 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p> <p>이 기금과 관련, 하시모토 류타로 이후 역대 총리가 보낸 “'위안부'였던분들에 대한 총리의 사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국 내 각총리내신으로써 다시 한 번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중압으로부터도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러한 사실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부당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28쪽)</p> <p>“'중군위안부'로 되어졌던 분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현재의 여성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국민모금을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 (178쪽)</p>
B 実教 (高校日本史B)	<p>1990년대 들어와 중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수상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지배에의 반성을 표명했으나 전후보상 문제의 해결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235쪽)</p> <p>1993년에는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고노관방장관 담화를 발표, 군의 관여하에 위안소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안부'로 되었던 사람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1994년 '위안부'였던 사람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243쪽)</p>	

과목명	출판사명	보상 문제
일본사		<p>1996년 국제인권위원회는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구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의 보고를 받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 동 보고서에 유의할 것을 표명했다. 동 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에 걸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243쪽)</p> <p>설명(1)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에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에 의한 재판형태를 띤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도쿄에서 개최했다. (243쪽)</p>
	実教 (日本史B)	<p>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 있는 지위'(일본국헌법)를 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종군위안부나 강제노동 보상 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함과 동시에(391쪽)</p>
정치·경제	東京	<p>정부는 이 전후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구 연합국 포로와 종군위안부 등, 전시 중 일본에 의해 비인도적 취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도상의 문제로서 성의 있는 대응이 요구되어 진다.(95쪽)</p>
	清水	<p>일본군에 의해 징용되어 전범이 된 사람들과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으로 일본에 와 피해를 입은 피폭자 등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공식사죄와 보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 의식이 고양된 점이 있다. 일본정부는 전쟁과 국가간의 문제로 평화조약과 배상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89쪽)</p>
	実教	<p>1990년대가 되면 元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노동자에 대한 전후 보상 문제가 주목을 끌어, 새로이 전쟁책임·전후책임이 요구되어 졌다.(93-94쪽)</p>
	第一	<p>일본과 근린제국과의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일으킨 종군위안부 문제(주1)와 강제연행 문제 등의 전후 보상 문제가 있다. 근린제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p> <p>(주1) 전시중, 중국·조선·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다수의 여성이 연행되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간의 보상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1993년 공식으로 사죄하고,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했다 (2007년 종료 예정).(54쪽)</p>
윤리	実教	<p>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전후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2007년 해산).</p>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된 교과서 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연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 등과 함께 전후보상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는 표현은 검정의견을 통해 삭제되었지만, “문제도 남아있다”(第一, 일본사 A), “전후보상 문제의 해결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實敎, 『高校日本史B』), “이러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第一, 정치·경제)와 같은 기술은 전후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에 대해, 清水(정치·경제)는 개인보상 요구의 배경으로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 의식이 고양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고, 實敎(『高校日本史B』)는 1996년 UN 국제인권위원회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데, 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과서가 ‘위안부’ 피해자의 전후보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 있는 지위’(일본국헌법)를 점하기 위해서는”(實敎, 『日本史B』), “근린제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第一, 정치·경제)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과 아시아의 역사화해를 통한 우호관계 수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1995년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발족시킨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지원이 중요하게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사 A(三省堂, 東書), 일본사 B(實敎·高校日本史B), 정치·경제(第一), 윤리(實敎) 교과서가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東書와 實敎(『高校日本史B』)의 경우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사실에 대한 기술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東書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에 있어서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금전문제화 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총리의 ‘사죄 편지’ 전문을 실고 있는 것에 보이듯이 아시아여성기금과 총리 ‘사죄편지’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第一(정치·경제)도 “일본 정부는 1993년 공식으로 사죄하고”라고 고노담화를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로 기술하고 있다.

(4) 기타

1997년부터 시작된 우익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기술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기술이 보인다(표6 참조). 이러한 기술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필두로 하는 일본 보수파의 역사교과서 공격과 이들에 의한 교과서 발행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6> ‘위안부’ 교과서 기술 공격에 대한 우려

과목명	출판사명	보상 문제
일본사	A 東京	일본에서도 예컨대 종군위안부나 남경대학살 등 자국에 불리한 사실은 교과서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되어 모든 국가 사람이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31쪽)
	B 實教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사실을 기술해 온 교과서를 “자학적”이라고 비난하는 움직임이 생겨나, 이런 주장에 근거한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가 나타났다 (239쪽)

IV. 맺음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숭한 고통을 겪으며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¹²⁾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에게 공식사죄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각 국 의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역사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고노담화나 역대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는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은 고노담화 이후의 연구 성과는 물론, 이 고노담화의 내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각 국의 결의안을 돌아볼 거까지도 없이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표명해 온 입장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후세 교육에 반영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2) ‘역사문제 Q&A’(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www.kr.emb-japan.go.jp)

일본역사교과서의 재조명

- 집필자 : 정재정, 이재석, 허동현, 홍성근, 김보림,
신주백, 김은숙, 남상구
- 발 행 : 2008년 7월 15일
- 펴낸이 : 김용덕
- 펴낸곳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11-12층
- 전화 02-2012-6000
- 팩스 02-2012-6180

비매품